



universität
wien

MASTERARBEIT

Titel der Masterarbeit

Ernennung und Entlassung von Ministern während der
Regierungszeit von Roh Moo-Hyun(2003-2008)

Verfasserin

Chae Eun Kong

angestrebter akademischer Grad

Master of Arts (MA)

Wien, 2013

Studienkennzahl lt. Studienblatt:

A 066 871

Studienrichtung lt. Studienblatt:

Koreanologie

Betreuer:

Univ.-Prof. Dr. Rainer Dormels



universität
wien

석사학위논문

논 문 제 목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장관에 대한 해임과 발탁배경 연구
(2003-2008)

논 문 저 자

공 채 은

취 득 목 표 학 위

석사 학위

비엔나 2013

석사 번호:

A 066 871

학과명:

한국어학과

지도 교수:

Rainer Dormels

감사의 글

먼저, 이 논문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감사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6 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논문을 착수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주제를 선정할까 하는 갈등도 있었지만 담당 교수님께서 권장해주신 주제를 바꾸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본 논문의 내용은 실제로 정치학이나 행정학분야의 소재로 그 분야의 전공자가 아닌 나로서는 처음부터 힘든 상황이 예견되었지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매듭을 지을 수 있었다.

두번째로 담당 교수인 Rainer Dormels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가 방문할 때마다 귀중한 시간을 끝까지 내주시고, 어떠한 질문에도 친절로 끝까지 해결해 주시며 저를 도와주신 것에 정말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교수님께서 주신 장관에 대한 소재가 처음에는 저에게 생소했고, 중간에 여러번 고비도 있었지만 연구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갖게 되었고 점점 더 깊은 탐구 속으로 가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는 언니에게도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유료 사이트를 들어가서 자료를 찾을 때 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아마도 서로에게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복잡한 일이었는데, 언니의 도움으로 한 걸음씩 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꼭 전해야 할 사람은 또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어도 넘어도 끝이 나지 않는 논문 앞에서 끊임없이 재촉하며 지켜봐 준 남편 Udo Wagner 에게도 감사하다.

무엇보다도 내게 항상 힘이 되어 준 두 아들에게도 감사하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천은 내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인내를 요하는 작업앞에 부족한 나를 발견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셨고, 성경 말씀앞에 먼저 시간을 드릴 때 놀라운 논문의 진전을 보여주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음도 고백합니다.

이와 더불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존재를 저에게 깨우쳐 주신 선한 목회자 ‘비엔나 한인교회의 장황영 담임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하나님께 합당한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어 그 사명을 마음에 품고 논문을 완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목 차

I. 서론.....	6
1. 장관 연구의 소개 및 목적.....	6
1.1) 장관 연구의 이론 도입을 위한 본 논문의 접근법.....	6
1.2) 장관 연구의 소개 및 목적을 위한 이론.....	6
1.2.1) 장관의 중요성 대두.....	6
1.2.2) 인기스타의 속성.....	7
1.2.3) 장관의 고용 배경.....	8
1.2.4) 올바른 장관 연구 방법.....	9
1.2.5) 장관 개인의 경력에 대한 연구 가치.....	10
2. 장관에 대한 선행 연구.....	11
2.1) 이선우, 박중훈의 장관의 역할과 직무수행에 관한 연구.....	11
2.2) 김호균의 임명권자의 임명기준을 토대로 본 장관의 역할 고찰.....	12
2.3) 김희정의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 장관 사임에 대한 연구.....	12
2.4) 김호균의 장관의 경질사유에 관한 연구.....	13
2.5) 정종원의 한국 장관의 사회적 배경과 임명기준에 관한 연구.....	14
2.6) 안병영의 한국 장관의 역할, 유형, 그리고 정책영향력.....	14
2.7) 김성수의 인사청문회 도입과 한국장관 총원의 변화 연구.....	15
2.8) 양정호의 한국 교육부 장관에 대한 연구: 장관, 그들은 누구인가?	16
2.9) 민병익.이시원의 정부의 내.외적 환경에 따른 역대 정부의 장관임명 유형에 관한 연구	16
2.10) 남기범의 참여정부 장관인사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연구.....	18
3. 본 논문의 목적 및 연구 방법.....	18
3.1) 본 논문의 소재 및 주된 내용.....	18
3.2) 본 논문의 목적.....	19
3.3) 본 논문의 연구 방법.....	20

3.3.1) 자료수집 과정 및 방법.....	20
3.3.2) 구체적인 연구 방법.....	21
4. 노무현 정부의 인사정책.....	22
5. 노무현 정권시대.....	24
5.1) 참여정부.....	24
5.2) 열린우리당과 대통령 탄핵가결 및 총선.....	25
5.2.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26
5.2.2) 대한민국 제 17 대 국회의원 선거.....	26
5.3) 노무현의 리더십과 미완의 개혁정책.....	27
5.4) 경제정책.....	28
5.4.1) 부동산 정책.....	30
5.4.2) 한미 FTA 협상 체결.....	31
5.5) 외교정책과 대북정책.....	31
II. 본론.....	33
1. 내각 개편에 대한 통시적 개요.....	33
1.1) 도표의 내용 및 그에 대한 설명.....	34
1.2) 각 장관의 자료에 대한 목록(암호화 된 목록).....	35
2. 제 6 공화국 노무현 대통령 (2003-2008 년) 정부의 장관.....	39
2.1) 2003 년도에 해임.임명된 장관.....	39
2.2) 2004 년도에 해임.임명된 장관.....	51
2.3) 2005 년도에 해임.임명된 장관.....	57
2.4) 2006 년도에 해임.임명된 장관.....	64
2.5) 2007 년도에 해임.임명된 장관.....	77

3. 해임 배경이 된 정치·사회적 배경.....	81
3.1) '새만금 간척 사업' 잠정 중단 법원 결정(김영진 농림부 장관 해임 관련).....	81
3.2) 철도파업(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해임 관련).....	82
3.3) 전북 부안군 방사성 폐기물 시설 단독 후보지 결정(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해임관련).....	84
3.4) 한총련 사태 발발(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관련).....	85
3.5) 태풍 매미 강타(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관련).....	86
3.6) 대학 수학능력 시험 복수 정답 파문(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해임 관련).....	87
3.7) 이라크 파병안 국회 통과(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해임 관련).....	88
3.8) 김선일씨 피살(조영길 국방부 장관 해임 관련).....	89
3.9) 북 경비정 서해 NLL 침범(조영길 국방부 장관 해임 관련).....	89
3.10) 수능 부정 사건(안병영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해임 관련).....	90
3.11) 쌀시장 개방 협상 타결 및 결과 발표(허상만 농림부 장관 해임 관련).....	91
3.12) 학교 급식 파문(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해임 관련).....	91
3.13) 북한 미사일 발사(이종석 통일부 장관 해임 관련).....	91
3.14) 북한 핵 실험, 한·미간 전시적전통제권 이양시기 합의.....	92
(이종석 통일부 장관, 윤관웅 국방부 장관 해임 관련)	
3.15) 도시 추가 건설(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해임 관련).....	92
3.16) 국민 연금법 개정안 합의(유시민 복지부 장관 해임 관련).....	93
3.17) 제 17 대 대통령 선거.....	94
4. 장관들의 재직 기간 집계.....	95

III. 분석.....95

1. 분석방법.....	95
1.1) 범주를 정하는 기준.....	95
1.2) 해임 배경의 분석을 통한 범주 설정.....	96
1.2.1) 법에 의해 정해진 규정(선거출마용).....	96

1.2.2) 정치적.사회적 배경에 따른 업무적 과실(도의적 책임 및 민심수습용).....	97
1.2.3) 개인적 업무 과실 및 물의(스캔달).....	98
1.2.4) 내각 개편용(교체의 원칙, 로테이션의 원칙).....	99
1.2.5) 여.야간의 당파 경쟁이나 여권 내 권력다툼.....	101
1.2.6) 기타사항.....	102
1.3) 발탁 배경의 분석을 통한 범주 설정.....	103
1.3.1) 코드인사.....	104
1.3.2) 보은인사.....	106
1.3.3) 총선출마용, 대선주자 수업용.....	107
1.3.4) 소관 부처내의 승격 인사(관료형,실무형,업무충실형).....	108
1.3.5) 능력형 인사.....	110
1.3.6) 낙선자 배려인사(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111
1.3.7) 파격인사.....	112
1.3.8) 정실인사.....	113
1.3.9) 기타사항.....	113
2. 분석결과.....	114
2.1) 2003 년도의 특징.....	114
2.2) 2004 년도의 특징.....	115
2.3) 2005 년도의 특징.....	116
2.4) 2006 년도의 특징.....	117
2.5) 2007 년도의 특징.....	118
IV. 결론.....	118
1. 도표를 통한 범주 요약.....	118
2. 종합 요약 및 결론.....	121

참고 자료..... 124

인터넷 자료 (124-145)

외국서적 (145)

국내서적 및 학술지 (145-147)

학위논문 (147)

국문초록..... 148

Zusammenfassung (deutsch)..... 150

Curriculum Vitae (deutsch)..... 152

I. 서론

1. 장관 연구의 이론 소개 및 목적

1.1) 장관연구의 이론도입을 위한 본 논문의 접근법

필자는 총체적인 장관연구의 목적을 알아보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Jean Blondel 의 “Government Ministers in the Contemporary World”의 도입부분에서 주로 끌어왔다. Blondel 의 책은 장관에 대해 총체적으로 연구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쓰여진 책으로 이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것으로 소개되어있으며 장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특히 요점을 전달하려 하는 부분에서는 Jean Blondel 이 주장하는 바를 인용함으로써 장관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소개하기로 한다. 그 이외에도 다른 연구가의 소개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부가적으로 첨가하기로 한다.

일반적인 장관 연구의 목적 및 소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20 세기 후반 이래로 정치가 및 특히 장관의 중요성이 대두된 이유를 알아보기로 한다. 둘째, 인기스타에 비유되는 장관의 특성 및 속성을 알아본다. 셋째, 장관들의 고용조건 및 그에 따른 불안정한 삶의 배경을 알아본다. 넷째, 장관 연구를 위한 바람직한 연구방법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다섯째, 장관들의 화려한 경력에 근거를 둔 그들의 개인적인 특성은 왜 연구가치가 높은가?

1.2) 장관연구의 소개 및 목적을 위한 이론

1.2.1) 장관의 중요성 대두

17 - 18 세기의 절대군주 시대와는 달리 20 세기 후반을 시점으로 정치가의 시대라 일컬어진다. 독재자나 절대군주 중심의 정부에서는 정부가 국민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접촉은 거의 없었던 반면에 오늘날에는 국민들의 생활에 깊이 관여되어있다. 이러한 국민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의미하는 바는 정치가들이 정치를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의 근본 목적은 정치가라는 매개자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생각이나 이상을 구체화시켜 실현시키는 것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의 국민들은 정치를 통해 자신들의 문제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져 한다. 그런 이유에서 국민에게 정치가는 중요한 존재가 되는데 특히 장관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증거를 다음에서 확인해보기로 한다.

“ twentieth-century techniques as well as twentieth-century ideologies have enhanced markedly the strength and position of ministers. The sheer size of governments, (중략)..... has substantially augmented the scope of ministerial activities,.....”
(Blondel 1985, 2)

김운태는 권력엘리트들의 영향력에 대해 외국학자들의 이론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Getano Mosca 는 어떤 사회, 어떤 제도 하에서 소수의 지배층이 있고 다수의 피지배층이 있는 것은 보편적 법칙이라고 갈파(喝破)하였다. Vilfredo Pareto 는 어떤 사회의 흥망성쇠는 그 시대에 맞는 엘리트들의 적절한 배합 및 순환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Harold D.Lasswell 은 영향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 관한 연구가 ‘정치학’ 이라고 정의하였다. Seymour Martin Lipset 은 선진국보다 신생국에서 사회.경제.정치발전에 큰 관심을 갖다 보면 자연 엘리트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엘리트의 능력이 그 나라의 경제성장과 정치안정을 성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김운태 외 공저 1994, 432-433)

1.2.2) 인기스타의 속성

장관의 중요성과 직위로서의 매력은 흔히 인기스타의 흥망성쇠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이는 대중매체를 통해 장관들의 언행이나 모습들이 송달 되고 기사화되면서 국민들이 모범적인 정치가의 유형을 알게 되고, 국민들의 열광에 따라 장관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Jean Blondel 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장관에 대한 연구 중에서도 개인적인 연구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인기스타로 비유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근거는 그들의 직업전선인 정치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관들은 그들이 종사하는 업무에서 소속부서의 하위직원들과 팀워크를 이루어 일을 처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는 역설적으로 장관들의 업무는 그들만이 단독으로 책임져야 하는 특성이 강하고, 그로 오는 압박 때문에 그들의 세계는 인기스타의 고독함에 비유되기도 한다. Blondel 의 의견에서 이러한 주장을 다시 확인해보기로 한다.

“This emphasis on individual knowledge, stemming directly from that aspect of the political career which evokes comparison with stars and other performers, is, in part, justified. For, while politicians and especially ministers are very often anxious to stress the collective character of the task in which they are engaged – and while, indeed,

governments often come to power, act and fall as teams – the ministers' lives appear individualized to the point of loneliness.” (Blondel 1985, 3)

이에 부합하여 특별히 ‘장관과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자들의 주장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국민들은 장관들이 무엇을 하는지, 업무수행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여론을 통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언론에 대하여 뛰어난 대응감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홍보는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이끌어내므로 장관들에게 중요한 관리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박동서 외 2 인 2003, 322-323) 한국의 장관에게 언론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정책결정 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이러한 중요성은 언론이 지식사회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이중 언론의 정책때문에 장관은 언론과 정보에 대한 적시 접촉을 통해 손상을 예방해야 한다. (안병영 2003, 2-3) 이러한 주장은 김광웅의 “한국의 장관연구론”에서도 제시된 연구로 ‘언론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장관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라며 소개했다. (김호균 2004, 71) 우리나라의 언론이 때로는 장관들에게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신문 사설에서 비판되어 장관들이 난처해지는 경우이다. 이런 일이 장관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라 한다. (김광웅 외 3 인 2007, 18)

1.2.3) 장관들의 고용배경

이렇듯 여론에 보여지는 장관들의 화려한 모습이면에 존재하는 그들의 고독함 이외에도 장관들이 정부에 채용된 피고용인으로서 그들의 고용 조건 및 배경은 경우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장관으로 임명되는 과정부터 직위에서 물러날 때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들의 인생이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그들이 임명될 때는 가장 기이하고 잔인한 형태로 경쟁을 해서 임명된다. 둘째, 장관의 직종에는 노동조합이나 단체가 없어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 셋째, 직위에서 해임 또는 경질이 되는 경우는 지도자나 동료들로부터 적대감을 갖게 했다는지, 운이 없다는 식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그들의 직위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해임 및 경질이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할 겨를도 없이 닥쳐오기 때문에 개인적인 삶의 안정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예고 없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자리는 업무에 지장 없이 그 다음 후임자가 잘 이어갈 수 있는데, 이 또한 일반적인 직업상황과는 다른 것이다. (Blondel 1985, 3)

‘퇴임후의 생활 또한 공인으로서의 신분 같은 것이 지워지지 않아 편하고 쉬운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 듯 하다’ (김광웅 외 3 인 공저 2007, 20) 라고 김광웅 저자는 ‘장관리더십’ 에서 전한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피고용인으로서 임명될 때부터 재임기간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기본적인 고용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다.

1.2.4) 올바른 장관연구 방법

위에서 소개된 대로 장관 개인들의 경력을 조사 함으로 장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단지 그 나라에 국한된 부분적인 연구로 주어진 나라의 정치적 문화나 제도 내에 존재하는 장관들의 유형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총체적인 장관 연구를 위해 필요한 공통적인 특징을 끌어낼 수 없다. ‘올바른 장관 연구 방법’으로 Blondel 이 제시 하는 내용은 전 세계에 걸친 장관의 직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One mus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nisterial profession across the whole world to discover any common characteristics and to determine how differences tend to correspond to socio-economic, cultural, or institutional variations among the countries concerned.” (Blondel 1985, 4)

Jean Blondel 은 결국 연구의 초점을 전세계 장관들에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 장관 연구의 특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각 나라에 각각의 장관이 분석 되어야 하는 것이 1 차 작업이다. 각각의 장관을 분석한다는 것은 해당 장관이 속하고 있는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나 배경을 따로 배제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정치. 사회적 상황이나 정부의 현안에 따라서 장관이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기고, 그러한 해결과정이나 결과에 따라서 장관이 교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따라 장관의 모습이 여론에 보여지고, 그 모습으로 해당 장관의 특성이 정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장관 연구 방법으로 선제 되어야 할 조건은 우선 그 나라의 제도나 배경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해당국가의 연구자 이어야 한다.

장관임명에 정치.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우리나라의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민병익. 이시원은 정치적 환경으로 총선 전.후의 내각개편, 국회의 여대야소 및 여소야대에 따른 임명기준 등으로 연구했다. 경제적 환경으로 경기의 정점과 저점이 발생한 구체적인

시점에서 나타나는 장관임명 유형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환경으로 영. 호남간의 다양한 지역감정 측면 중에서 정치적 측면을 기준해서 살펴보았다. (민병익. 이시원 2007, 23-24) 한편 한국의 연구가에 따르면 장관 연구에서 다양한 정치행정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이를 변수화하여 설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장관 임명에 관한 연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종원 2006, 5)

1.2.5) 장관 개인의 경력에 대한 연구가치

장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살펴보면 각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초월해서 세계적으로 장관들의 직업속성과 그 직위는 획일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장관 개개인의 경력은 연구가치가 높다고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But the nature of the jobs and the status of ministers is more uniform. Differences that can be found in background and careers can thus be compared and contrasted without the usual danger of being confronted with very different functions. Thus, paradoxically enough, the career that is based on the glamour of individuals may also be the one that can best be studied on a truly general basis.” (Blondel 1985, 4)

이러한 Jean Blondel 의 주장은 팀워크(team work)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조직구조적 또는 상황적.환경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역할이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리더로서의 장관역할에 중점을 두어 연구한 개인주의론자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Doig & Hargrove 의 연구는 리더가 조직의 구조와 기능, 과정을 재설계하여 새로운 임무하에 목표를 설정, 지지세력 구축, 프로그램 집행을 하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반면에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효과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Bowling & Wright 의 연구는 정부기관의 행정가는 정책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이며 정책의제 설정, 형성, 집행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법령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 정부조직의 기관장으로 비유하며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김호균 2004, 42-45)

Thompson, Carolyn Rinkus 의 “The cabinet member as policy entrepreneur” 에서 장관의 중요성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의 자리가 내각의 구성원으로서 행정부처의장을 맡고 있어 정부활동에 대한 책임, 권한, 의무를 진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라는 점이다.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성향의 인물이 정부 각 부처의 최고관리자로 리더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이다. (이시원 외 2002, 54)

우리나라의 경우에 장관직은 소관부처의 총괄 책임자로 민간기업체의 '최고관리자'(CEO)로 비유되는 행정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안병영 2003, 2)

2. 장관에 대한 선행 연구

2.1) 이선우, 박중훈의 '장관의 역할과 직무수행에 관한 연구'(2000)

이 연구에 대한 요약은 해당 논문 중 페이지 213, 218, 223-226 을 주로 참고했음을 밝힌다.

이들의 연구는 장관들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 자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장관의 역할과 기능을 알아보며, 장관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식별하여 국정운영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연구방법은 주로 제 3 공화국 63 년 2 월 이후부터 김영삼정부 98 년 2 월까지의 기간동안에 역임한 장관 중에서 49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했다.

설문지 내용과 분석 결과를 요약해보기로 한다.

장관의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여 정책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밝혀졌다. 장관의 업무수행 행태는 외부활동이 더 많으며, 정책 결정을 위한 주요한 협의 대상은 부처내 간부이다.

조사대상 장관들의 재임기간이 6 개월에서 1 년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장관수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최소한 2 년의 재임기간이 요구된다. 이 부분에서 조사된 장관의 재임기간은 장관들의 평균적인 재임기간(14.38 개월: 안병영 2003, 21)보다 훨씬 적게 집계되어 연구에 대한 신뢰가 약해보인다.

장관들과 밀접한 관계가 요구되는 대상으로 청와대, 고위관료, 국회, 언론의 순서로 밝혀졌고 우호적인 관계 유지가 어려운 대상은 언론이라고 압도적으로 지적했다.

장관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자질은 약 56%가 전문성이라고 밝혔고, 극소수 4%가 정치적 측면에서 대통령과의 교감이라고 밝혔다. 이는 장관이 하는 역할 중에서 대통령 보좌의 역할 보다 소관부처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함을 보이고 있다.

장관직 수행에 이상적인 경력배경은 공직경력이라고 응답한 수는 절대다수인 65.4%이며 그 다음으로 학계경력, 민간경력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응답은 필자의 논문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로 나온 내용으로 공직경력자는 관료실무형으로, 학계나 민간경력자는 전문형으로 분류되어있다.

한편, 이들의 연구는 실제로 설문에 응한 응답 장관의 비율이 너무나 낮은 관계로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김호균 2002, 4)

2.2) 김호균의 임명권자의 임명기준을 토대로 본 장관의 역할 고찰(2002)

하기의 요점은 해당 논문 중 페이지 5.11.15.24 를 주요로 참고했음을 밝힌다.

김호균은 기존의 논문과는 달리 임명기준을 토대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본 장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있다. 즉,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 정치적인 기준을 고려했는지 안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전두환 정부의 출범시기 1980 년 9 월부터 김대중 정부의 집권초반기 2000 년 8 월 7 일까지 20 년 동안 342 명의 장관을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방법은 장관의 임명에 관한 신문.잡지.연감 등 시사 기록물자료(documentary data)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내용을 분석했다.

김호균은 장관의 역할을 정치적, 일반관리자, 정책전문가로 3 가지 역할로 구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라 임명기준을 크게 2 가지로 정치적 기준이 고려되었는지 안되었는지로 분류하였다. 즉,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경우 정치적 보상이나 상징적 대표성(출신지역, 성, 특정연고를 고려하는 기준) 등으로 장관을 대통령의 정치적인 자산이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지를 연구했다.

연구 결과 정치적 기준으로 장관이 임명된 사례는 전체 342 건 중 224 건으로 전체의 65%로 통계되었다.

2.3) 김희정의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 장관 사임에 대한 연구’(2005)

하기의 요점은 해당 논문 중 페이지 10-12, 34-35, 43-44 를 주요 참고했음을 밝힌다.

김희정은 한국에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시점(김영삼 정부)을 기준으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된 시기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에 장관의 사임이유와 재임기간을 살펴봄으로써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내각의 안전성을 측정함과 동시에 그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다시말하면, ‘장관의 교체빈도’를 ‘내각의 시간적 지속성’으로 간주하여 ‘내각안정성 측정지표’로 규정하였다.

연구시기와 대상은 1993 년 2 월부터 2005 년 6 월까지로 김영삼.김대중.노무현(2 기까지) 정부의 각각의 장관 92 명, 93 명, 25 명으로 총 212 명의 임면(任免)을 조사자료로 삼았다.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로 이행하면서 장관의 재임기간이 매우 짧아지고 정치적인 목적과 상황으로 내각이 교체된다. 이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제도하에서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로 집권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신세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는 소위 보은·정실인사로 장관자리가 정해졌다. 또 다른 내용으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능해지면서 야당은 정치적 목적으로 장관 사임을 이용했다. 이런 이유로 장관의 교체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내각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 다른 내각불안정성이 높아진 원인은 민주주의가 이행되면서 공직자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도덕성’ 기준이 강화 되었고, 언론과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이 외에도 인사검증제도 및 청문회가 제도적으로 견제장치가 마련이 되지않아 부적절한 인사가 임명될 경우 야당 및 시민단체의 주장이 높아지면서 개각을 부추기게 되었다. 결론을 지으면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가 이행됨에 따라 재임기간은 더 짧아졌고 장관의 교체가 빈번해졌다. 그로인해 내각불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4) 김호균의 ‘장관의 경질사유에 관한 연구’(2004)

하기의 요점은 해당 논문 중 페이지 53, 55-56, 61, 65 를 참고했음을 밝힌다.

이 연구는 타 논문과 달리 장관의 경질사유를 분석함에 있어서 폭넓은 시대와 대상을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경질사유를 다각도로 그러나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많은 장관의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논문으로 사려된다. 특별히 전체적인 논문의 흐름상 많은 전문적인 내용을 간단 명료한 논리, 설명 및 도표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과 시기는 크게 군사정부(전두환, 노태우 정부)와 문민정부(김대중, 김영삼 정부) 시대의 재임장관 381 명을 상대로 4 개 정부별로, 23 개의 부처를 6 개 범주로 분류했다. 정부별, 부처별로 분류된 범주속에서 경질사유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귀속책임 사유와 비귀속책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류했다.

연구방법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장관 경질 당시의 신문이나 사설잡지 등 시사기록물의 자료를 수집했고, 주관적인 방법으로 면담이나 설문지 방식등을 사용했다.

김호균은 수집한 자료를 통해서 경질사유를 5 가지로 추출했다. 추출된 사유는 부처업무 책임, 개인 스캔들, 정치적 사유, 상징적 사유, 기타사유로 분류되었고, 분류된 5 가지 사유는 크게 장관에게 귀속책임 사유인지 비귀속책임인지로 분류되었다. 그 중에서 부처업무책임과 개인스캔들이 귀속책임에 속하고 나머지 3 가지 사유는 비귀속책임에 속한다.

연구결과 부처별로 분석된 논의결과는 부처의 성격이 어떠한 경질된 장관 10 명당 7-8 명이 장관의 책임과 무관하게 경질되었다. 그 중에서 정치적 사유에 의한 경질사례가 약 절반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정부별로 분석된 논의결과는 군사정부의 전두환·노태우 정부시기에 비귀속 책임사유에 의해 경질된 경우가 더 높게 수치가 나왔는데, 이는 위에서 소개한 김희정의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 장관 사임에 대한 연구’에 의해서 나온 분석과 같은 맥을 취한 결과이다. 즉, 군사정부에서 민주정부로 이행되면서 비귀속 책임사유에 해당 분류된 정치적 사유로 경질된 장관이 증가한 추세이다.

2.5) 정종원의 ‘한국 장관의 사회적 배경과 임명기준에 관한 연구’ (2006)

하기의 요점은 해당 논문 중 페이지 4-6, 47-48, 58-60, 65 를 참고했음을 밝힌다.

정종원은 장관이 임명될 때 어떠한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는 장관이 임명되었는가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사회적 배경이란 경력경로와 인구사회학적 배경(지역, 연령, 학교, 성별 같은 인구통계학적인 변수)으로 나눌 수 있다. 분석결과 전직경력이 관료출신, 정치인, 학자출신 순서로 가장 많이 임명되었다. 교육적 배경에서는 고학력 추세이며 명문대 출신, 박사학위 소지자, 유학파가 임용되고 있다. 군사정권과 김대중 정부에 심했던 지역적 차별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연령대는 50 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관에 대한 임명기준을 연구하기 위해 장관, 전직 장관, 국회의원, 국장급 이상 관료, 기존 연구자 및 교수들에게 전자메일과 직접면접을 실시하여 28 부의 설문지를 자료로 삼았다. 장관의 유형은 관료형, 전문가형, 정치가형으로 분류하였고 임명기준에 따른 결과는 정책관리능력 56.4%, 조직관리능력이 22.1%, 정치적 신임이 15.5%, 상징적 대표성이 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관 임명기준에서 정책관리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조사된 것은 행정가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정책관리자로서의 측면에서는 정치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정치가형’ 장관을 적임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설문자들이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것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장관의 역할이 정치적으로 의회, 정당, 시민사회와의 협상과 조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2.6) 안병영의 ‘한국 장관의 역할, 유형, 그리고 정책영향력’(2003)

하기의 요점은 해당 논문 중 페이지 1-2, 10, 17-20, 22 에서 주로 참고했음을 밝힌다.

안병영은 한국의 장관이 하는 역할, 유형, 정책영향력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장관은 대통령의 정책보좌인으로서, 소관부처의 장으로서의 이중역할을 하며

정책과정에서 장관들이 상대하는 구성원, 즉 대통령 및 청와대, 국회, 언론과의 관계가 설명되고 있다.

장관의 기본적 자질을 알아보고 그 역할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태도를 논하여서 장관에게 요구되는 기본덕목을 제시하고 있다. 장관의 유형을 관리자형, 전문가형, 정치가형 3 가지로 분류하여 각 유형의 기본적 속성과 유형의 특성을 시기별, 부처별로 논의 하고 각각의 유형이 새로운 개혁에 적합한지도 살펴보았다. 장관의 영향력은 정책과정에서 상대하는 구성원과의 관계변수에 따른 역학관계를 알아본 것이다. 장관들은 정책을 거시.중범위.미시정책의 기준에 따라서 그들의 영향력이 주도 역할을 하거나 부차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마지막으로 장관의 임기에 관해서 장관들이 입안한 정책을 수행하여 성과를 거두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으로 최소 2 년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7) 김성수의 '인사청문회 도입과 한국 장관충원의 변화 연구'(2012)

하기의 요점은 해당 논문 중 페이지 7, 11-13, 125-127 를 주요 참고했음을 밝힌다.

이 논문은 2005 년 7 월 이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장관의 충원 상 이루어진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그에따라 연구대상 및 시기는 1987 년 민주화 이후의 노태우 정부에서 2011 년의 이명박 정부의 시기 25 년에 해당되는 장관들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조사.분석.통계를 내었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청문회 도입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가능한 가설을 4 가지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가설과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각 대통령 시기별로 장관의 사회인구적 배경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입증되었다. 입증된 내용은 장관연령의 증가, 학력향상, 고향의 변화, 전문성보유 인사 등용 증가, 정치인 출신 감소 추세등이다. 둘째, 각 대통령 시기별로 장관의 임기가 길어질 것이다. 입증된 내용은 임명된 장관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재임기간이 증가했다. 셋째, 인사청문회 실시이후 사회인구적 배경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이 가설은 단지 학력만 달라졌다는 확인 이외에는 변화가 감지되지 않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입증되지 않았다. 넷째, 인사청문회 실시이후 임기가 더 길어질 것이다. 장관의 임기가 상당히 길어져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었다.

필자의 생각에 이 연구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청문회 도입 이후의 변화를 고찰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여진다. 첫째로 한국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아 장관 임명에 있어서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지않는 다는 허점이 있다.

둘째는 2005 년 이후에 두개의 정권도 채 채워지지 않은 7 년째에 통계를 끌어내어 연구결과를 발표하기에는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시기상조로 보인다.

2.8) 양정호의 ‘한국 교육부 장관에 대한 연구: 장관, 그들은 누구인가?’(2004)

하기의 요점은 해당 논문 중 페이지 214-215, 217-222, 227 를 주요 참고했음을 밝힌다.

한국에서 교육부 장관은 다른 부처보다 더 빈번히 장관 교체가 일어난다. 그 이유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언론에 오르내리는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만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양정호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1948 년 정부수립 이래 노무현 정부 초기에 이르는 역대 교육부 장관들 총 45 명을 정권별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고찰 내용은 재임기간, 인구사회학적 배경, 전직 경력 및 교육과 관련한 유관기관 근무여부를 살펴보았다. 양정호는 교육부 장관에 대한 향후의 연구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며 궁극적인 연구의 목적이 교육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적절한 장관의 교체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를 위한 연구방향을 위해 제시된 내용은 성공적인 장관이 되기 위한 요건, 장관 임명 기준 및 경질 사유, 장관과 정치 및 행정관경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2.9) 민병익, 이시원의 ‘정부의 내·외적 환경에 따른 역대 정부의 장관임명 유형에 관한 연구’(2007)

하기의 요점은 해당 논문 중 페이지 13-14, 18, 20, 34-35 를 주요 참고했음을 밝힌다.

이 연구의 대상 및 시기는 1948 년 정부 수립 이래 김대중 정부에 이르는 기간이다. 이 논문은 기존의 논문과 달리 장관의 임명기준 ‘특성’에 나타난 원인 즉 영향요인을 정부의 내적·외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장관연구의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기서 내적 환경은 대통령의 리더십(정치적 스타일, 업무 스타일, 성격으로 세분분석), 부처특성, 정부내 시기(초·중·말기로 세분 분석), 직전 장관의 교체사유로 설정되었다. 외적 환경으로는 정치적 환경(총선거, 국회의 여·야관계, 대통령의 지지도), 경제적 환경(경기의 정점과 저점), 사회적 환경(지역감정)으로 나누었다.

장관 임명의 기준은 실적성, 엽관성, 정실성을 토대로 7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고, 장관 임명의 각 기준과 측정지표는 다음의 표와 같다.

임명기준			일반적 지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표
실적 요인	실적성		자격과 능력 (학력, 전공, 경력, 교육훈련)	주요 경력, 해당부처 유관기관 근무여부, 관료출신의 경우 해당부처 출신여부
실적 외적 요인	연고성	정실성	학연, 지연, 혈연, 전직	출신대학, 동향여부, 전직(고위군인경험)
		엽관성	정당관계	대통령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당료, 전문위원

출처: 민병익. 이시원 2007. 20

연구결과 중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내적환경

- 1) 대통령의 정치적 스타일이 민간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엽관성에, 군부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정실성에 근거해 장관이 임명되었다.
- 2) 대통령의 업무스타일이 인간중심적 리더십 정부에서는 실적성과 정실성을, 과업중심적 리더십 정부에서는 실적성을 고려했다.
- 3) 대통령의 성격이 선동가형은 정실성을, 행정가형은 실적성을 고려했다.
- 4) 정부내 시기에 따라서 초기내각은 엽관성에, 말기에는 정실성에 근거로 임명이 강했지만 총체적으로 실적성과 정실성을 동시에 겸비한 선택이 주로 이루어졌다.

외적환경

- 1) 정치적 환경: 여대야소 시기에는 실적성과 정실성에, 여소야대 시기에는 실적성과 엽관성에 기반한 임명이 이루어졌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은 시기에는 실적성과 정실성이 동시에 고려되어 임명되었고, 낮은 시기에는 정실성이 강해졌다.
- 2) 경제적 환경: 경기 확장기에는 실적성과 정실성 중심의 임명이, 수축기에는 실적성이 강하며 엽관성이 중시되었다.
- 3) 사회적 환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혼란도는 장관임명 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불법시위로 인한 혼란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감정이 심할 때는 실적성과 엽관성이 동시 고려되었고, 완화될수록 실적성과 정실성이 동시에 고려되어 임명되었다.

2.10) 남기범의 ‘참여정부 장관인사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연구’ (2010)

하기의 요점은 해당 논문 중 페이지 80, 89, 97 을 주요 참고했음을 밝힌다.

국내 선행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장관들의 업무차질에 대한 문제 요인이 짧은 재임기간, 정치적 사유로 임면, 자질부족 등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려는 일환으로 참여정부는 시스템 인사, 인사청문회의 도입, 장관임기의 보장, 책임장관제, 장관평가의 도입, 장관인사의 정례화, 이취임식의 매뉴얼화 등 새로운 대안을 도입했다. 남기범은 위의 각 혁신안으로 파생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역대정부에서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가 혁신안으로 해결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참여정부의 장관들에게 일어난 몇몇 문제들을 사례로 들면서 참여정부가 계획한 혁신안들이 잘 시행이 되지 않은 실례를 들었다.

결론부에서는 참여정부의 장관인사에서 파생된 문제를 부각시켜 우리나라의 장관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으로 다른나라의 사례와 연구를 검토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범위에서 벗어나 심층적이고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3. 본 논문의 목적 및 연구방법

지금까지 위에서 소개된 장관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은 일반적인 장관연구를 위한 것으로 이론으로 접근이 된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일반적인 장관연구의 한 부분에 속하는 세부적인 과정으로 위에 소개된 이론을 토대로 연관이 되는 연구의 목적을 짧게 기술하고자 한다.

3.1) 본 논문의 소재 및 주된 내용

본 논문의 소재는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시대 (2003 년 2 월 28 일에서 2008 년 2 월 28 일)에 5 년간 재임했던 78 명의 장관을 소재로 했다. 위의 1.2.4)에서 ‘올바른 장관 연구 방법’에서 설명된 대로 그 나라의 제도적 배경에 따라 장관의 특성이 달라지므로 본 논문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대로만 국한하였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5 년 단임제이므로 5 년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에 따라 제도나 정책이 달라지게 되므로 올바른 연구방법으로 한 정부에 국한된 시대를 선정하여 집중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논문의 주된 내용은 우선 각각의 78 명 장관들이 임명, 발탁된 시기를 년도와 월별로 구성하여 도표로 나타냄으로써 개각현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 둘째로 각각의 장관들의 출신지역, 출생연도, 재임기간, 전직, 교육적 배경, 등용당시의 연령 등을 목록을

통해 작성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해임·발탁을 자료로 삼아 분석한 결과를 논문의 내용을 구성한 반면에 본 논문에서는 해임·발탁된 내용을 주된 본론의 내용으로 정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위에서 제기된 ‘일반적인 장관연구의 소개’에 부합되는 점을 찾아 볼 수 있겠다. 첫째, 각 장관의 해임 및 발탁동기는 당시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배경 및 제도와 밀접히 연결 되어있다. 둘째, 개인적인 이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그 해당 장관의 인격을 파악할 수 있고, 업무적인 이유로 해임 및 경질이 된 경우는 여론의 조명을 받은 업적으로 해당장관의 이미지가 정해짐을 알 수 있다. 셋째, 해임배경과 해임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피고용인으로서 장관들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열거한 이유는 본 논문의 주된 연구내용인 해임 및 발탁을 연구 함으로써 Jean Blonde 가 주장한 장관의 일반적 특성을 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점을 기술해 본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필자가 본 논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점으로 이미 내재된 장관의 특성이 보여지기도 한다.

3.2) 본 논문의 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장관들이 자주 바뀌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장관 재직기간은 대략 2 년인데 (R.Dormels 2006, 3) 이 논문의 소재인 노무현 대통령 정권에서는 19 개 부처에서 78 명(중복되는 38 번 오명 장관과 50 번 장하진 장관을 제하면 실제적으로는 76 명)의 장관들이 활약했다. 이러한 사실을 평균적으로 환산하여 본다면 5 년동안 한 부처당 4 명의 장관이 존재했고 1 사람 당 1 년 2.5 개월을 근무하고 장관이 교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數値)는 평균을 산출한 수이고 실질적으로 정상 재직기간인 2 년을 다 채운 장관은 단 10 명이고 1 년도 채 채우지 못한 장관이 22 명으로 29%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장관의 교체는 분명 정책에 새 바람을 불어오게 해서 해당 부처의 업무를 활성화 시킬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나치게 잦은 교체는 해당 부처와 정책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부정적인 결과를 더 많이 초래할 수 있다.

한국에서 장관의 자리는 공공행정부문의 주요한 축으로 매우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다. 그러므로 장관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대통령 개인의 기준이 아닌 정부의 업무적 전문성에 근거해 능력있는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 (김호균 2004, 282.283)

본 논문은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의 임명과 해임 배경의 사실을 밝혀서 장관의 교체 사유를 분석하여 연구 결과 드러난 문제점으로 우리나라의 짧은 재임기간이 시정이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3.3) 본 논문의 연구방법

3.3.1) 자료수집 과정 및 방법

1 차 자료수집을 위해 장관관련 서적 및 논문이 검토되면서 장관 연구에 대한 선행 사례는 참고가 되었지만 본 논문의 소재인 발탁 및 해임 배경에 대한 노무현 정부 시기의 장관 자료를 충족시킬 자료는 없었다.

각 장관의 신상 및 경력 자료를 위해 인물사전을 알아보았지만, 예전과는 달리 개인정보 누출 보호를 위해 공개가 금지되었다는 것이다. 유료 사이트인 JOINS 인물 정보를 알게 되었고, 그 사이트에서 모든 78 명의 장관들에 대한 자세한 이력을 볼 수 있었다.

해임 및 발탁 배경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에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떠 있는 해당자료가 있었지만 일부 장관에 대한 일부 소개가 있을 뿐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논문을 써야 하는 자료로는 빙산의 일각(一角)일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에 장관의 기록에 대한 백서(白書)가 정부부처 어디엔가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정부부처, 행정기관 및 국무총리실 등에 연락을 취해 보았지만 그 역시도 존재하는 자료는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선행 연구가들이 겪었던 연구의 한계 또는 약점으로 후속 연구에 극복되어야 할 점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장관의 공식적, 비공식적 활동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하는 일이 실행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김호균, 2004, 286)

결국 각각의 장관들이 내정·임명된 날짜나 해임된 날짜를 기준으로 일일신문인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인터넷 사이트를 날짜별로 찾아보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임명 및 해임날짜에 모든 장관이 신문에 소개되지 않았다. 다수의 장관들이 해임·임명되는 날짜보다 앞서서 이미 해임·임명 발탁 배경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결국 일일 신문을 날짜마다 확인 하며 자료를 찾아야만 했다. 간혹 한 장관의 완전한 해당 자료를 찾는데 온 종일이 걸리기도 했다.

한편, ‘장관의 인선기준은 일반적으로 공식문서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임명이유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장관의 배경변수, 임명당시 언론보도 내용 그리고

청와대의 장관임명과 관련된 발표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임명기준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장관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임명의 여러 측면을 볼 수 있는 간접자료가 된다’. 또한 ‘전임

장관의 사임배경도 후임 장관의 인선배경에 영향을 준다.’ (김광웅 외 3 인 공저 2007, 30.31)

김광웅 장관 연구가가 전하듯이 본 논문 또한 임명 및 사임 배경에 대한 자료를 찾기위해 언론에 보도된 일일 신문이외에도 월간.주간신문이나 시사잡지책을 근거로 객관적 자료로 삼았다. 발견된 자료중 일부는 청와대 인사 담당자나 노 대통령이 정확히 발탁배경으로 언론에 보도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교체 배경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언론이 전하는 추측으로 자료를 삼았다. 이 외에도 사임된 장관의 행보(본 논문에서는 주로 총선출마행)를 보면 해임배경이 드러나고, 또는 후임장관(본 논문에서는 주로 보은 또는 낙하산 인사)의 인물을 보면 발탁배경이 드러난다.

간혹 교체배경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JOINS 인물정보의 인물연감을 참고하여 사회인구학적 배경 즉 장관의 연령, 출신지역, 출신학교, 성별, 전직 경력 등 (정종원 2006, 23)을 자료를 삼았다. 특별히 장관의 전직 경력을 조사함으로써 임명배경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경우 본 논문에서는 주로 차관에서 장관으로 승진한 경우이거나 소관 부처에 합당한 직업 경력이 있는 관료실무형이다.

또한 학력, 전공, 교육경험 등을 과거 경력변수를 측정 기준으로 자격이나 능력과 관련된 인선기준으로 삼아 (김광웅 외 3 인 2007, 32) 분류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 본 논문에서는 능력형 인사로 구분지었다.

이러한 조사 과정을 통해 78 명 중에서 노준형(일련번호 58 번)장관의 사임 배경을 제외하고 모든 장관들의 교체배경이 조사되었다.

3.3.2) 구체적 연구방법

우선 본문의 내용 중 내각 개편에 대한 통시적 개요와 도표와 목록 작성은 Rainer Dormels 담당교수님의 'Politische Kultur und Ministerrekrutierung in Suedkorea'의 부록 편에 나오는 방식을 적용했다. 간혹 이해를 돕기 위해 더 세부적인 설명을 부가하기도 하고 시대가 바뀔에 따라 노무현 정부 시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삭제했다. 년도 별로 가로축으로 작성된 도표를 통해 78 명의 장관들의 교체시기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했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함에 있어 인구사회학적인 고려가 필수적이다. (정종원 2006, 23) 이에 따라 각 장관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목록으로 작성했다. 목록 작성을 위한 자료는 JOINS 인물정보를 참고했다. 단, 목록 작성시 횡렬번호 17 번에 해당하는 각 장관의 전직 경험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장관들이 여러 가지 직업경력이 있어서 결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장관의 경력은 Rainer Dormels 담당교수님과 의논하여 결정. 기재하였다.

장관들이 해임된 이유로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 원인이 있는 경우 현안이 된 사건을 본론부의 3 장에서 소개함으로써 해당 장관의 해임 배경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본론의 4 장에서는 재임기간을 단위별로 구별하여 노무현 정부 장관들의 재임기간이 얼마나 길고 짧은 가를 알아보았다.

결론부에서는 장관들의 임명 및 해임배경을 분석하여 범주(category)를 정하고 특징을 요약했다. 분석 방법과 범주들을 정한 연구 방법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 됨으로 결론부에서 다루기로 한다.

4. 노무현 정부의 인사정책

한 지도자의 능력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지도력의 요체는 인사정책이다.

지도력이란 궁극적으로는 인간자원의 동원능력이라는 정의도 바로 이를 뜻한다.

한국정부의 최고집권자로서 정치지도력을 행사해 온 역대정권 수장들의 인사정책을 고위직 행정엘리트 분석을 통해서 그들의 지도력이 평가된다. 김영삼 정부는 ‘인사가 만사(萬事)’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범했다. (양성철 1994, 30.67)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인사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려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초한 참여형 인사시스템’을 지향했다. 여기서 ‘참여’의 의미는 정부정책의 선택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개혁의 주체는 물론 개혁의 대상, 더 나아가 시민사회 모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는 의지가 있다. 이에 따라 3 가지 국정목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으로 정하고 4 가지 국정원리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유에 입각해 인사개혁의 원칙을 세웠다. (하태권 외 2004, 5)

참여정부 인사혁신의 핵심인 ‘고위직 인사검증시스템’의 내용 및 변화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에 설명된 일체의 내용은 ‘한국인사행정학회보’의 ‘고위직 공무원

인사검증시스템의 개선방안 모색’과 참여정부 5 년 동안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행정관으로 근무한 권오중의 ‘참여정부 인사검증의 살아있는 기록’을 참조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그러므로 다음에 설명될 요점은 (권오중 2010, 21. 53-54. 80-81. 110- 111. 117), (김판석, 정홍원, 홍길표 2008, 120-121. 124-127. 131)을 주로 참고되었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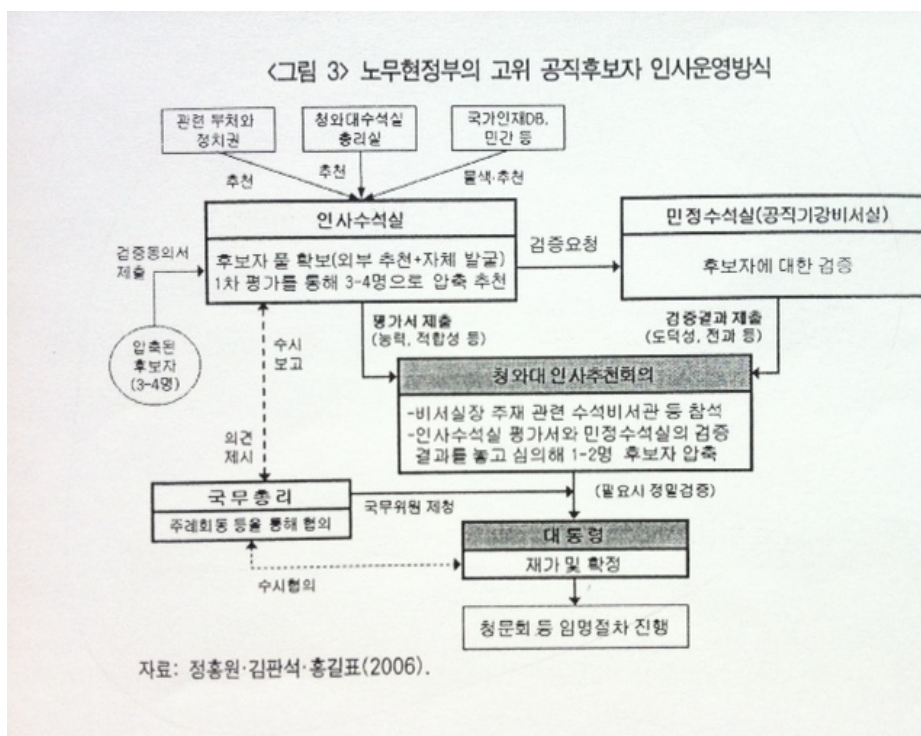
역대정부와는 달리 참여정부는 투명한 인사 과정을 위해 인사추천 기능 과 인사검증 기능을 분리하였다. 또한 인사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 초에는 인사보좌관실을 설치하고 일년 후에 인사수석실로 확대했다.

인사검증에서 도덕성 검증과 이해충돌 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수행했고, 역량검증과 정무적검증은 중앙인사위원회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고위공직후보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평가하여 후보자를 발굴·추천하였다. 여기서 역량검증이란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을, 이해충돌검증이란 후보자의 정치적 행적이나 이념적 지향성을, 정무적 검증은 장·차관등 정무직 검증에 필요한 보조적 역할이고 도덕적 검증이란 준법성이나 청렴성을 따지는 것이다.

인사검증 DB(데이터베이스)는 수천 명의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2003 년 말에 완성이 되어 2004 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었는데 참여정부는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 이를 전담하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노무현정부의 인사검증기준의 변천내용을 살펴보면 2003 년에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의 인사추천회의를 구성하여 도덕성 검증과 역량 검증의 절차를 확립하였다. 중요한 검증 기준으로 국적이탈문제, 후보자의 보유주식 문제, 부동산투기등이다. 2004 년 2005 년에 걸쳐서 기존의 검증기준이 강화·보강되어 세부적인 검증이 요구되었다. 2005 년 초반에는 검증기준을 정비하여 9 월에 학계와 시민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인사검증자문회의등을 운영했다.

참여정부 인사개혁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인사파동으로 인해 전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2005 년 7 월에 개정되었고 2006 년 2 월부터 시행되었다. 위에서 설명된 인사검증의 단계를 도표를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출처: 김판석·정홍석·홍길표 2008, 118

노무현정부는 고위직인사의 추천 및 검증 과정에 투명한 인사정책을 위해 과거 정권보다 많이 제도적 차원에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무현정권이 내세운 인사원칙과는 달리 줄세우기, 특정지역 편중인사였다.....중략... 인터넷에 추천해 놓고 임명하면서 공개추천방식을 적용했다는식의 언론 플레이식 정치쇼....”(김환태 2003, 231-232)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사혁신이 가져온 부정적인 파생효과가 있다. 추천과 검증의 분리로 비효율적인 과정반복이 발생하는 등 인사검증의 범위는 인사 상 불이익을 줄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점이다. 또한 도덕성 시비로 인해 능력있는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한 점은 정부로서 안타까운 점이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의 결과는 인사검증 그 자체의 실패라기보다는 인사검증 기준의 설정 및 적용상의 실패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참여정부의 인사개혁이 역대정부와 구별되는 부분은 전문영역으로 간주하여 실현가능성을 높이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따르면 인력 풀의 한계, 잦은 개각, 고위공무원 급증, 국가공무원 급증, 낙하산 인사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으나(박중훈 외 6 2006, 23,63)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정무직에 대한 임명이 투명화 되고, 향후 직무역량을 검증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발전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양승함, 2005, 88)

5. 노무현 정권시대

5.1)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는 자칭 참여정부라 칭하여진다. 여기서 참여정부라는 의미는 대중이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한다라는 뜻으로 통하며 참여정부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로 ‘노사모’를 꼽을 수 있다. ‘노사모’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이름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팬클럽의 일종으로 한국의 정치권 제도안에서 비주류에 속했던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과정뿐 아니라 노무현의 통치과정에서도 시민단체로 주된 역할을 해왔다.

노사모는 일정한 정치형태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노무현과 정치맥락을 같이하는 지역감정 극복, 국민 통합, 민주 실현, 참여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를 목표로 삼으며 노무현을 지지하고 노 정권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컨대 대중이 끌어 낸 정치 사례를 살펴보면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을 이루어냈고, 2004 년 대통령 탄핵 때 탄핵가결을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시위에 이어 열린우리당의 승리와 공직임명에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접수했다.

대중이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실제의 정권에 영향을 준 사례는 한국정치의 새로운 변화로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의 해석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약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제도적 정치권에서 구하지 않고 시민사회의 지지자 또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대중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 낸 포퓰리즘의 모델이며 결국 정당정치의 실패, 열린우리당의 실패였고 노무현의 정치 실패라고 평가했다.

(강원택·장덕진 2011, 17-23. 32-36)

5.2) 열린우리당과 대통령 탄핵가결 및 총선

새천년민주당에서 출발한 노무현 대통령은 당 내의 반노·비노 세력간의 갈등으로 당내 분열이 있었고, 다른 기존의 정당들은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세력이었다. 이러한 정당의 분위기에서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 타파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정당인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였다. 299 명의 의원 정수 에서 16.4%에 해당하는 49 명의 열린우리당 의원은 여소야대의 구도로 노무현 정권은 야당과 대립과 갈등을 거듭해야했고 결국 2004 년 대통령 탄핵 가결이 야당의 권력으로 통과되었다. 탄핵으로 위기에 처한 노대통령은 대중의 지지로 정상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민의 시각에서 거대야당의 횡포로 보여진 탄핵 사건은 뒤이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 석으로 과반수를 확보하면서 제 1 집권당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새로이 부상된 열린우리당은 대통령과 지역주의를 타파한다는 같은 뜻을 가졌지만 정당의 제도 안에서 실행되지 못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정치 개혁을 위하여 원내 정당 중심과 중앙당 경량화, 당 총재직 폐지등으로 원내 중심 정당에서 정당 운영 중심이 되었다. 또한 엄격한 당정 분리 원칙을 지키며 대통령과 집권당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없어지고 결국 열린우리당과의 대화의 장이 없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은 당의 구심점 역할을 할 명분이 없어졌고 그로인해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저해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는 노 대통령이 낡은 정치 청산이라는 개혁으로 시발된 것이지만 결국 정당정치에 대한 노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서 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당정 분리 라는 정치 개혁안에는 집권당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인데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내에 형성되는 리더십을 교묘하게 방해함으로써 당의 결집력이 약화되었고 열린우리당은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했다. (강원택, 장덕진, 2011, 23-32) 열린우리당의 변화에 따라 즉 여소야대와 여대야소에서 파생된 정치적 상황으로 탄핵 소추 가결과 총선거의 결과를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보기로한다.

5.2.1) 2004 년 3 월 12 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한 최초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자세한 내용과 경과를 알아보기로 한다.

탄핵의 시발점이 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내부요인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한나라당은 불법 대선자금과 여론을 무시한 국회의 운영으로 국민의 지지도가 떨어지게 되었다. 민주당은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을 이탈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집권당에서 야당으로 전락되었다. 두 야당의 정치적 상황은 다가올 17 대 총선에 위기감을 받았고 대응책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택했던 것이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2003 년 연말부터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수차례 밝혀왔고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총선 올인’을 중지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영언 2005, 32)

또한 2004 년 2 월 24 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언으로 3 월 3 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 조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판정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공개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노대통령의 발언에 야권은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거부했다.

그로 인해 새천년 민주당의 위시로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당의 야당의 동조로 3 월 11 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3 월 12 일 열린우리당의 농성과 저지 속에 진행된 탄핵안은 195 명의 야당 의원들의 투표참석에 193 명의 찬성으로 기습 가결되었다. 이로써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국 각지와 각 단체에서 야당의 탄핵안 철회에 반대하는 탄핵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결국 5 월 14 일 탄핵가결 2 달만에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대통령은 직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최한수 2006, 106-107. 111-112/위키백과, NAVER 지식백과-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5.2.2) 대한민국 제 17 대 국회의원 선거 (2004 년 4 월 15 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 된 상황 속에서 탄핵반대안에 대한 경과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 야 3 당이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되면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가 넘는 152 석을 확대해 여대야소 국회가 탄생하였다.

이번 총선의 선거방식은 기존의 지역구 투표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정하던 방식이 아닌 16 대 때의 지역구 소선거구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정당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해

지역구 후보에 1 표, 정당에 1 표씩 투표함으로써,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분리한 1인 2표제를 최초로 도입했다. 총 선거인수 35,596,497명 중 21,581,550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투표율은 60.6%를 기록하였다. 총 299명(지역구 243명, 비례대표인 전국구 56명)이 선출되었다. 도표를 통해 자세하고 통합적인 결과를 알아보기로 한다.

당 명	지도자	지역구 수 (명)	비례대표수 (명)	의석수 (명)	선거전 의석수(명)	득표수 (명)	득표율 (%)
제 1 당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129	23	152	47	8,145,814	38.3
제 2 당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100	21	121	139	7,613,660	35.8
제 3 당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2	8	10	-	2,774,061	13
제 4 당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대표최고위원회	5	4	9	62	1,510,178	7.1
제 5 당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	4	0	4	11	600,462	2.8

**그 밖에 국민통합 21이 1석을 무소속이 2석을 차지하였다.

출처:

1. 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第十七代國會議員總選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2625&mobile&categoryId=200000229>

2. 대한민국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C17%EB%8C%80_%EA%B5%AD%ED%9A%8C%EC%9D%98%EC%9B%90_%EC%84%A0%EA%B1%B0

5.3) 노무현의 리더십과 미완의 개혁정책

참여정부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역대 어느 정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강력한 정부혁신을 추진하였다. 너무나도 방대한 개혁안들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이념적 거대담론에 입각한 개혁안은 실제로 절벽 위에서 구름을 찾는 모습’으로 비유하며(김광동 외 5인, 2010, 103) 집권초기부터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되었다. 개혁이란 자신의 정권에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기정권에 연결이 되는 백년대계의 개혁으로 초석 하나라도 든든하게 놓으면 성공한 정권(김광수 2003, 349)이라며 참여정부의 진부한 개혁을 염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노 정부의 개혁안이 시대에 부응한 것이고 노 대통령의 단호함과 결의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정착되었지만 정치인 노무현으로서는 실패했다는 일각의 견해가 있다. 그 실패의 원인은 노무현의 리더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 국가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의 화법이 저속하여 말씨와 품위가 자신의 정치적 문제였다 라고 스스로도 언급했다. 둘째로 이분법적 대칭구도로 강자와 약자, 보수파와 진보파, 지지자와 반대파, 기득권 세력과 일반서민, 서울 대 지방으로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정파적인 편 가르기를 유도했다고 전한다. 노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데 부족했다며 스스로가 대결과 갈등 지향적 인간임을 토로했다. 실제로 노무현은 양극화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어느 중견정치인은 전한다. (김광동 외 5 인 2010, 42-54)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존의 평가들은 다양하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리더십에 의해서 개혁이 실패한 배경을 살펴보면 국민들을 하나로 대화와 타협으로 이끌지 못하고 양분화시켰으며 집권 후반기에는 진보개혁세력 마저도 거부감을 보이며 강도 높은 비난을 받았다. 노 정부의 개혁정책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며 미완의 개혁이 되고 말았다.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2008, 12. 23)

분열로 인해 미완의 개혁으로 끝난 대표적인 사례는 4 대 개혁입법(국보법, 사학법, 과거사법, 언론법)과 온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이슈가 되었던 ‘행정수도 이전’과 ‘부안 위도의 핵폐기장 건설문제’를 들 수 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행정수도이전’은 위헌으로 판결이 났다. ‘4 대 개혁입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정당별 이념 차이를 나타낸 개혁안으로 한나라당은 ‘4 대 국론분열법’으로 비난했으며, 국민 여론의 지지도도 낮은 상태로 시간을 끌었다. 결국 국보법은 표결도 되지 않고 정권이 교체되었고, 언론법은 미완의 상태로 끝이 나고, 사학법은 재 개정되면서 개혁성을 상실했다. 특히 과거사법은 시민단체는 물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비판하며 반발했다.

이렇듯 4 대 개혁입법안을 둘러싼 분쟁은 여러 개의 정치적 공간들 속에서 정당간의 분리는 물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갈등을 조장하며 노무현 정부 전반기에 이미 개혁의 동력을 상실케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혁의 실패는 대통령의 리더십적 자질 혹은 국가운영능력 문제로 제기되면서 각종 개혁관련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뚜렷한 비전을 주지 못했다. (강원택, 장덕진, 2011, 40-51, 64/ 양승함, 2006, 71-72.79.88)

5.4) 경제정책

하기의 설명은 (김광동 외 5 인, 2010, 121-123. 128-130. 133-134) (참여정부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9, 362. 364-365. 369-370. 379-380)에서 주로 참고되었다.

모든 규제나 정책에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는 순환의 성질로 회복기가 있으면 침체기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여러가지로 가능하다. 여기서는 비판적인 시각과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의 기준을 정한 ‘참여정부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의 내용으로 참여정부 경제정책을 조사해보기로 한다.

참여정부가 출범 초에 이전 정부에서 전가된 문제들(카드채 대란, 신용불량자 사태, 부동산시장 불안 등)을 극복해나갔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참여정부 경제 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방대하게 설정된 개혁의 아젠다들이 실천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균형, 참여, 분배, 평등, 형평, 약자보호, 혁신이라는 경제정책의 슬로건하에 사회의 양극화와 사회의 분열이 심화되었다 라는 점이 지배적이다. 즉 빈부격차, 교육격차, 임금격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의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진자와 대기업에 지속적으로 긴장을 주는 정책을 추진했다. 집권 초기에 대기업을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이 부각된 점으로 보아 당시의 정책을 알 수 있다.

대기업에 반대하는 정부의 정책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면서 저성장 고실업으로 경제의 심각한 침체를 가져와 수출경제가 내수경제를 이끌게 되었다. 실제로 국내 대표기업의 성장이 둔해졌고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세계 평균보다 하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2003년의 내수 급락은 이전 정부의 무리한 내수부양책이 조정되면서 나타난 필연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2007년 4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핵심 대기업정책들은 5년 내내 대기업에 불안한 요소로 작용했다.

수출과 내수 간의 괴리는 일본에서 부품을 사오는 구조가 정착 되면서 대일본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 1월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품소재 발전전략’을 마련했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투자를 하는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한다.

2004년에 참여정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미국, 대만, 싱가포르와 비교해 저조한 것으로 측정되면서 2005년 3월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없애려 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참여정부를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또 다른 일각에서는 한국경제의 발전과정 속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차기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본다.

다음에서는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에 현안이 되었던 부동산 정책과 FTA 협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5.4.1) 부동산 정책

하기의 설명은 주로 (김재규 2010, 27-34)에서 참고로 했음을 밝힌다.

5 년의 재임기간 동안 총 11 번의 부동산 정책 발표 및 시행이 있었다. 연도별로 각각의 대책을 알아보기로 한다.

2003.5.23 은 주택가격 안정 대책으로 세무행정강화로 투기 유인 억제 목표를 정했다. 그에 대한 대책의 수단으로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금지는 일반 주택시장으로 옮겨져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을 초래했다. 9.5 는 부동산시장(재건축아파트가격)안정 대책으로 재건축 규제 정책이 주 내용이다. 10.29 는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으로 포괄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잠시 안정세를 보이다 정책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2004.2.4 는 주택 및 토지 시장 안정 대책으로 주택 거래 신고제 및 토지거래 허가 요건 강화, 부동산 공개념 도입을 준비하였다. 10.30 대책과 11.29 대책은 종합부동산세법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며 10.29 의 규제정책들로 인하여 강남지역의 주택시장이 안정은 되었지만 그 여파로 강남지역에 반감이 일어나며 증가된 세금을 매수자에게 부담시키는 세금전이효과가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실제 주택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게 되었다.

2005.2.17 대책은 판교 주변의 주택이 국지적으로 급상승함에 따라 이루어진 대책이며, 또한 강남지역의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주택가격 급상승에 따른 대책으로 판교와 강남 재건축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목표 정책이다. 5.4 대책은 2.17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자 추가대책으로 부동산가격안정대책을 세웠으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로 인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8.31 은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조세부담 강화와 주택공급확대이다. 이 정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버블세븐 지역이 10 월에 하향세를 보이다 이듬해 초부터 다시 급등하며 역효과가 나타났다.

2006.3.30 은 8.31 후속 대책으로 서민 주거복지증진 및 주택 시장 합리화 방안이다. 이 대책 역시 잠시 집값의 상승세가 둔화되었지만 같은 해 가을에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의 폭등을 가져왔다. 11.15 대책은 누그러지지 않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있다고 보고 주택 공급 확대 및 고분양가 규제 강화를 추진하였다.

2007.1.11 은 11.15 대책으로 잠시 주춤했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하면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며 주택 공급과 분양가 인하로 시장 안정을 유도하려 했다.

위의 일련의 정책을 총체적으로 보면 결국 참여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실거래 신고 의무화, 양도세 실가과세,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에 힘썼다. (참여정부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9, 366) 규제정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이후 집값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김광동 외 5 인 2010, 143)

***LTV(Loan To Value ratio):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김재규 2010, 28.33)

5.4.2)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2004 년 11 월 정부는 미국과 FTA 를 추진하며 실무 검토 회의 3 회, 2006 년 6 월 1 차 협상을 개최한 후 공식협상 8 회를 거쳐 1 년 2 개월의 소요 기간을 거친 뒤 2007 년 4 월에 협상 타결을 보았다. (유태환 외 3 인 2008, 84)

노무현 정부는 출범초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구현’의 외교목표를 두고 일본과 FTA 를 추진했지만 결국 2004 년 11 월 협상이 중단되면서 미국과 FTA 협상을 끌어내었다. 참여정부가 끌어낸 FTA 협상은 위에서 설명된 전반적인 분야의 개혁 정책과 달리 국민들에게 의외적인 사례로 기록되며 특별히 개혁을 외치며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한 참여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선회시키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그 이유로 우선 FTA 협상 타결은 노 정부의 정치적 지지층이자 노 대통령의 배려계층인 서민,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등 진보개혁파에게는 불리한 사건이다. 둘째는 자주외교를 중심으로 반미성향을 취해온 노 정부가 미국과 긴밀한 협상을 지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외성은 기존의 보수층이나 친미 성향을 가진 국민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의구심을 덜게 하였으며 부분적으로 국정 지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한다. 특별히 참여정부가 ‘동시다발적’ 전략으로 이 협상을 이끌었다 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개방형 한국을 알리며 타국과의 FTA 협상을 촉진시키며 한국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데 이바지했다 라는 것이다. (강원택.장덕진 2011, 94.108.111)

5.5) 외교정책과 대북정책

대외정책이란 세계질서안에서 상호주의를 통한 타국과의 관계, 특히 주변국과의 관계에 따른 정책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주변국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얹혀있는 미국, 중국, 일본 3 국을 지칭할 수 있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초기에 ‘동북아 균형자’론을 제시하며 ‘자주적인 외교’를 추구했다. 이는 이전의 정부에서 유지해 왔던 미국과 동맹관계보다는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더 중점을 두겠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이 국제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적 접근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필자가 하기에 서술한 내용은 노무현 정부가 택한 자주외교노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현 성신여대 정치외교학 교수인 김영호 교수의 내용(김광동 외 5 인의 저서 중 노무현과 포퓰리즘시대)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임을 밝힌다. 특히 (김광동 외 5 인, 2010, 206, 220, 231, 240, 245, 252, 255-258, 265)을 참고하였다.

‘동북아시아의 균형자’가 지니는 의미는 일본과 중국사이에서 우리나라가 균형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으로 두 나라사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두나라의 국력을 넘어서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다. 다음의 인용에서 더 구체적인 균형자로서의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일본은 이미 세계 2 위의 경제대국(우리국력의 10 배)이며, 중국도 아다시피 경제.군사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음: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희망적(wishful thinking)’에 불과함” (국회의원 전여옥, 2006, 10) 또한 다음에서 지적하는 한미일의 역학관계에서도 노 정부의 ‘자주외교’는 한계성이 있다. “군사적으로는 우선 대미 의존적이지 않으면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적극적 협력 없이 한국 단독의 역량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군사문제와 경제문제가 현실이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외교가 전개되는 것이 국제정세였고 대외정책이었다.” (박홍영 2003, 94)

노무현 집권 기간 5 년 내내 지속된 자주외교노선은 반미노선, 친북좌파로 우려되기도했는데 이러한 배경은 노무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의 중심세력이었던 이종석 사무차장의 북한관련 언명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북침인가 남침인가의 문제는 한국전쟁을 살펴보는 데 무의미하며 알아내기도 어렵다.” “통일의 제 1 요건은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는 자주성 확립과 평등의 존중이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변명이다.” (국회의원 전여옥 2006, 39-40) 이에 더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2003 년 6 월 방문 중 한국에 공산당이 허용될 때에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말한데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념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유세과정에서 반미정서를 등에 업고 당선된데서 직접적 원인이 있다.

위에서 언급된 자주노선, 반미노선, 친북성향 등 은 참여정부가 집권기간 동안 취한 대북한 정책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라는 정치적 이벤트성의 남북대화에 목표를 두며 유화정책으로 일관하며 2005 년을 기점으로 기업이나 NGO 단체를 통해 대북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2005 년 북한은 6 자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며 핵보유 선언을, 2006 년에 1 차 핵실험, 2009 년에 2 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둘째로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끌어내기 위해 양보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NLL 이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오든 그것은 우리 영토하고 아무관계가 없으니까

헌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NLL 을 ‘공동관리 수역’으로 합의하며 분쟁지역으로 만들었다. 셋째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 년 4 월 17 일로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핵실험, NLL 양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남북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다 깽판 쳐도 괜찮다.” 에서 오로지 남북대화만 성사시켜 남북관계 진전에 개선을 주었다라는 전시용 평가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며 세계를 주목시킨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정부는 북한인권 보다는 김정일 체제 속에서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다음과 같이 비난된 바 있다. “대북지원 NGO 는 정부의 대북지원이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원의 효율성과 적실성이 저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중략)....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 안정이라는 정치적인 의도를 내포한 정부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수행한 대북지원 NGO 의 정책목표가 분명 상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중략).... 정부는 이러한 대북지원 NGO 의 입장을 역이용하여 무리한 대북지원을 강행하는 방패막이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강동완, 2008,12)

결국 “참여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교류협력의 병행추진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남북관계의 진전이 핵문제에 발목이 잡힘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지난 4 년여 남북관계가 현상유지에 머물렀다.”(고유환, 2011, NK Vision.통권 26 호) 5 년 내내 미국과 견해를 달리 했던 핵문제는 ‘정부의 낙관적인 생각은 한.미 관계 악화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라고 전한다.(국회의원 구상찬, 2008, 20) 동북아 균형론자로서의 역할에서 경제대국인 일본과 FTA 협상이 좌절되었고, 군사적.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중국 사이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단지 참여정부의 희망사항이었다.

II. 본론

1. 내각 개편에 대한 통시적 개요

노무현 대통령 정권시기(2003 년 2 월 25 일부터 2008 년 2 월 24 일까지)에 개편된 내각에 대해 통시적인 개요를 설명하였다. 모든 도표 및 설명은 월별로 세분화하여 묘사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 있다.

>> 도표

>>각 장관의 자료에 대한 목록

>>내각 개편의 배경에 대한 서술(월별 배열)

하기에 사용될 도표와 목록에 대한 기술 방법은 Dormels 2006, 429-432 내용을 위주로
참고되었다.

1.1) 도표의 내용 및 그에 대한 설명

1. 월별 가장 윗행에 명시된 년도와 달은 내각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명시되었다.
2. 월별 두번째 행에는 국무총리가 바뀐 경우에 명시되었다.
3. 종렬로 배열된 19 개 부처의 약어: 각각의 장관에 소관되는 부처의 단축어이며 다음과 같다.

>>AF: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농림부, 農林部)

>>CI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산업자원부, 産業資源部)

>>CTr: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건설교통부, 建設交通部)

>>CTo: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문화관광부, 文化觀光部)

>>EHR: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교육인적자원부,
教育人的資源部) - One of the Vice Prime Minister

>>En: Ministry of Environment (환경부, 環境部)

>>F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재정경제부, 財政經濟部) - One of the Vice Prime
Minister

>>FA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외교통상부, 外交通商部)

>>GE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여성가족부, 女性家族部)

>>GAH: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행정자치부, 行政自治部)

>>HW: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부, 保健福祉部)

>>IC: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정보통신부, 情報通信部)

>>Ju: Ministry of Justice (법무부, 法務部)

>>La: Ministry of Labor (노동부, 勞動部)

>>MA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해양수산부, 海洋水産部)

>>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국방부, 國防部)

>>PB: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기획예산처, 企劃豫算處)

>>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기술부, 科學技術部) - One of the Vice Prime
Minister

>>Un: Ministry of Unification (통일부, 統一部)

****출처: Government of South Korea, Previous (Government debt) –New World Encyclopeida

http://www.newworldencyclopedia.org/entry/Government_of_South_Korea 2012.5.31

4. 각 부처의 약어 뒤에는 관계되는 장관들의 성과 이름이 적혀있다.
예외적으로 연속번호 16 번의 정세현 장관의 성명에 괄호가 적혀있는데, 이는 전 정권인 김대중 정권에서 유일하게 유임이 된 장관이다.
5. 장관들의 이름 뒤에 매겨진 번호는 임명된 총 78 명의 장관들의 연속번호가 괄호안에 적혀있다.
6. 횡렬로 그려진 점선들은 가장 윗행에 열거된 달에 관계되는 장관이 교체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7. 도표의 가장 하단에 나열된 숫자는 해당되는 달에 직책에서 해임이 된 장관들의 연속번호이다.
 - 7.1) 해임된 장관의 연속번호 옆에 사선(/)과 더불어 명시된 번호는 당해(當該) 장관이 다른 부처의 장관으로 배치되기 위해서 기존의 직위에서 물러나 **연이어 바로** 다른 부처에 새로이 장관으로 임명된 경우로서, 새로 임명된 연속번호를 명시한 것이다.
예) "17/21"의 의미: 2003 년 9 월에 해양수산부 허성관 장관(연속번호 17)은 행정자치부 장관(연속번호 21)에 새로이 임명되기 위해서 기존의 직위인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비워 준것이다.
 - 7.2) 해임된 장관의 연속번호 뒤에 대시기호(-)옆에 명시된 번호는 해당 장관이 퇴직한 후에 같은 대통령의 집권시기(즉, 노무현 대통령 정권기)에 다른 부처에 장관으로 **연이어 유임되지 않고 나중**에 장관으로 새로이 임명된 것을 의미한다.
예) "03-42"의 의미: 2004 년 2 월에 재정경제부의 김진표 장관(연속번호 3)은 퇴직한 후, 약 1 년 뒤인 2005 년 1 월에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겸 장관(연속번호 42)으로 새로이 임명된 것이다.
8. 부록 1 의 마지막 부분에 임명된 총 78 명의 장관들의 연속번호와 당해 장관들의 성명이 한자로 표시되었다.

1.2) 각 장관의 자료에 대한 목록(여러형태의 암호화된 목록)

이 목록은 암호화된 숫자나 알파벳 글자로 되어있으며 종렬로 18 개의 난(欄)으로 분류되었다. 각각의 구분된 난(欄)에 해당되는 암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구분 1) 임명된 총 78 명의 장관들의 숫자로 각 장관들의 연속번호에 해당된다.

>>구분 2) 장관들의 직무기간을 개월 수로 계산한 것이다.

구분 2.1) 명시된 달 수가 하나이거나, 첫 번째에 해당하는 달 수는 해당되는 연속 번호에 임명된 장관의 당해 직무기간을 개월 수로 표시한 것이다.

구분 2.2) 장관직에 한번이 아니고 두번 이상 임명된 장관의 경우에 첫 번째 숫자 다음에 두 차례의 임명에 해당되는 총(總) 재직기간을 표시한다.

****예컨데, 두번째 숫자 앞에 왼쪽 괄호 ‘(‘가 있는 경우는** 해당 임명의 재직기간(즉, 첫 번째 숫자) **후에** 또 장관에 임명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연속번호 17 번에 “08(24”가 의미하는 바는 당해 장관(해양수산부 장관)시기에 재직한 개월 수는 08 개월이고, **그 후에** 두번째로 장관(행정자치부 장관)이 된 재임기간은 17 개월로 총 재임한 개월 수는 24 개월이다.

****또한, 두번째 숫자 뒤에 오른쪽 괄호 ‘)’ ‘가 있는 경우는** 당해 장관의 재임 전에 이미 과거에 장관에 재임했던 적이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연속번호 30 번에 “14 22)D”가 의미하는 바는 당해 장관(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의 재임 기간은 14 개월이고 **그 이전인 D 정권시기**(김대중 대통령 정권시기)에 8 개월간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재임되었던 것으로 숫자 22 는 두번의 임명기간을 총 합산해서 나온 숫자이다.

구분 2.3) 두번째 숫자의 오른쪽 괄호 ‘)’ ‘ 뒤에 알파벳은 다른 대통령 집권시기에 장관직에 임명된 경우로 아래와 같이 약어로 대통령 정권을 표시하기로 한다.

단, 알파벳이 없는 경우는 재직 기간이 당해 장관직의 대통령 집권시기(즉,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기)에 해당된다.

N	Roh Tae-woo
K	Kim Young-sam
D	Kim Dae-jung
NK	Roh Tae-woo and Kim Young-sam

>>구분 3) 각 장관의 출생지를 나타낸다.

SE	Seoul	KY	Kyeonggi-do
KA	Kangwon-do	CH	Cheju-do
TB	Chungcheong-pukdo	TN	Chungcheong-namdo
CB	Cheolla-pukdo	CN	Cheolla-namdo
HW	Hwanghae-do	PN	Pyeongang-namdo
PB	Pyeongang-pukdo	HN	Hamgyeong-namdo
HB	Hamgyeong-pukdo	KN	Kyeongsang-namdo
KB	Kyeongsang-pukdo		

*한 명의 장관은 만주에서 태어났다. (MA)

*한 명의 장관은 중국에서 태어났다. (CI)

>>구분 4) 각 장관의 출생년도를 나타낸다.

>>구분 5) 장관 임명의 당해 년도시 장관의 연령

>>구분 6) 학부(학사학위)를 한국 국내에서 수료한 경우로 국내 대학교를 나타낸다.

SN	Seoul National University	KK	Keonguk University
EH	Ehwa University	KH	Kyeonghui University
TO	Tong-a University	KS	Kyeongsang University
CN	Cheonnam University	KB	Kyeongbuk University
YN	Yeongnam University	SG	Seongkyunkwan University
KO	Koryeo University	YS	Yeonsei University
MU	Korean Military University ---- A(Army) : MUA (육군 대학교)		
	M(Marine): MUM(해군 대학교)		

>>구분 7) 해외에서 공부한 경력이 있는 장관의 경우 어느나라인지 명시되었다. (독일어의 약자임)

U	USA	J	Japan
G	Grossbritannien	OE	Oesterreich
D	Deutschland	N	Niederlande
K	Kanada		

>>구분 8) 전공학과에 대한 내용이다. (독일어의 약자임)

JU	Jura (법학)	La	Landwirtschaft(농림학)
Po	Politikwissenschaften(정치학)	Pi	Philosophie, Philologie(인문학)
Pa	Pharmazie(약학)	P	Paedagogik(교육학)
Wi	Wirtschaftswissenschaften(경제학)	Mi	Militaerwissenschaften(군사학)
So	Sozialwissenschaften(사회학)	Me	Medizin(의학)
Ig	Ingenieurwissenschaften(공학)	Ch	Chemie(화학)

>>구분 9) 장관이 국회의원에 선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암호로 풀이해 각각의 의미를 전달한다.

00)국회의원이 된 적이 없다.

Ag)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국회의원 의석을 이미 획득했었던 경우

aG)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대부분이 장관직을 떠난 후에) 국회에 선출된 경우

AG)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 뿐만 아니라 임명된 후에도 국회에 선출된 경우

**암호 뒤에 괄호 속의 숫자들은 국회의 의석을 차지했던 빈도수를 표시한다.

>>구분 10)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차관이었던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여부를 명시한다.

(해당된 장관 임명의 소관사항과는 별개로 차관인 경우는 모두 해당된다.)

해당 암호 Vm (Vizeminister : 차관)

>>구분 11)에서 16)까지에서 각기 쓰여진 대.소문자들은 구분 9)에서 처럼 각각 해당되는 의미를 지닌다. 사용된 단축어는 다음과 같다. (독일어로 표현)

>>구분 11) Pm(Premierminister): 국무총리

>>구분 12) AI : 행정부에서 장.차관급의 직위.

단) 차관, 장관은 제외된다.

>>구분 13) Na(Fraktionschef): 국민회의(입법회의)에서 어느 한 당의 원내대표

PI(Parteichef): 국민회의(입법회의)에서 어느 한 당의 당대표

>>구분 14) Pg(Provinzgouverneur: 도지사) 또는 Buergermeister(시장)

>>구분 15) Bo(Botschafter: 대사)

>>구분 16) He(Stabchef des Heeres 육군수장)

Ma(Stabschef der Marine 해군수장)

Gs(Generalstabschef 총사령관)

Ur(Rektor einer Universitaet 대학총장)

Pc(Chef des Praesidialamtes 대통령 비서실장)

Ps(Senior Secretary oder Spezialberater im Praesidialamt 대통령 수석 비서관)

>>구분 17) 장관의 전직을 명시한다.

Ad(Administration 행정직)

Di(Diplomatie 외교직)

Mi(mililtaer 군대직)

LF(Lehre und Forschung 강의직 및 연구직)

Me(Medizin 의학계)

Jo(Presse 언론계)

Ju(Justiz 법계)

Wi(Wirtschaft 경제계)

Po/SL (Politik / NGO-Aktivist (social leader): 정치계/비정부기관의 사회주의 운동가)

>>구분 18) 각료 부처의 이름을 나타내며 약어는 도표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

16	17 30)D	MA	1945	58	SN	00	Po	00(0)	Vm	00	00	00	00	00	Ps/uR	LF	Un
17	08(24	KN	1947	56	TO	U	Wi	00(0)	00	00	00	00	00	00	00	LF	MAF
18	13 39)D	PN	1944	59	EH	00	Pi	AG(3)	00	pM	00	pL	00	00	00	SL	En
19	10	KB	1943	56	SN	J	P	00(0)	00	00	00	00	00	00	Ur	SL	EHR
20	19	CN	1943	60	CN	00	00	00(0)	00	00	00	00	00	00	Ur	LF	AF
21	17 24)	KN	1947	56	TO	U	Wi	00(0)	00	00	00	00	00	00	00	LF	GAH
22	02	KN	1953	50	KO	G	Ju	00(0)	Vm	00	00	00	00	00	00	Ad	MAF
23	16 30)D	CN	1948	55	SN	U	Wi	00(0)	Vm	00	00	00	00	00	00	Ad	MAF
24	14 35)K	SE	1941	62	YS	OE	Po	00(0)	00	00	00	00	00	00	00	LF	EHR
25	27	KB	1949	54	SN	U	Ig	00(0)	Vm	00	00	00	00	00	Ur	Ad	CIE
26	17	CB	1938	65	KH	00	Ju	00(0)	00	00	00	00	00	00	Al	Ad	CTr
27	11[70]NK	SE	1940	67	MUA/SN	U	Mi/Ig	00(0)	Vm	00	00	00	00	00	UR	06/Jo	ST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2월 25일 제6공화국 4기 정부로 제16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국무총리에 고건이 발탁되었다. 2월 28일 노무현 정권 첫 내각은 19부처를 중심으로 교육부장관을 제외한 18개 각처의 장관들이 각각 임명되었다.

2003년 2월 (임명 18명)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발탁배경으로 '대선 이전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 외교분야 정책 팀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고, 대통령직 인수위 간사를 맡았다.' 라고 전해진다. (JOINS 인물정보 2003.2.28)
서울대는 윤장관의 외교학과 교수직 휴직 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휴직 건의안을 낸 상태였다. (JOINS 인물정보 중앙일보 2003.3.19)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발탁된 참여정부 장관 중에서 최연소(44)장관으로 분배정의에 대한 신념과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삶이 노대통령과 흡사해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어진다. "노대통령과의 인연은 2002년 경남도지사 선거 때, 노풍의 주인공이 되겠다'며 민주당에 입당, 경남도지사에 도전하면서 시작됐다." (JOINS 인물정보 2003.2.28) "노대통령은 남해군수 출신인 김두관 행자부 장관을 거명하면서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오리지널(원형)이라고 하나요? 순수 지방자치전문가 출신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된 우수한 자원'이라면서 "고건 총리가 30대 장관으로 발탁된 이래 훌륭한 업적을 쌓은 것처럼 변화가 필요한 경우, 변화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2003.2.28)라고 발탁배경을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발탁이 되자마자 파격적 인사로 한나라당에 의해 사퇴압력을 받았다. 이는 1995년 경남 남해군수로 재직 당시 8개월 동안 '남해신문'(주간)의 대표직을 겸직함으로써 공무원의, 영리 기업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

또한 군수선거에 출마한 상대 후보를 비방한 기사를 남해신문에 실었다가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80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도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김 장관을 선거법 위반 전과자라며 김두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dongA.com 동아일보 2003.3.6/2003.3.7)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유능한 관료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을 정도. 인수위 부위원장에 발탁될 때부터 중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JOINS 인물정보 중앙일보 2003.2.27)

“노무현 대통령의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유능한 공무원’ 이란 말로 유명해졌지만, 이 말이 결코 과장된 게 아니라는 것이 경제부처 공무원들의 평이다.”(dongA.com 신동아 2003 년 4 월호 부록)

강금실 법무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이 ‘철의 여인’이라 했을 정도로 강단이 있다고 알려진 인물.” (dongA.com 신동아 2003.4 월호 부록) 노 대통령이 밝힌 발탁 이유는 법무부를 검찰에서 분리시키려고 한 목적에 있다. 당시에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면서 법무장관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검찰의 이익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경향이 있어 검찰과 법무부를 각각 독립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보인다. 한편 강금실 장관은 변호사로서 최초의 장관이 되었고 또한 최초의 여성장관이 되었다.(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3.2.28)

조영길 국방부 장관

“군 전략기획 및 전력증강 분야의 전문가로 ‘지장(智將)’ 소리를 듣는다.” (dongA.com 신동아 2003 년 4 월호 부록). 이것이 발탁 배경은 되었지만 풍양 조씨 종친회 인사인 모 신문사 간부가 조영길 국방부 장관을 추천하면서 후보로서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고 전해진다. (dongA.com 신동아 2006.8.1 통권 563 호(p172-185))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직후 ‘내가 본 가장 유능한 두 명의 관료 중 한 명’이라고 꼽을 정도로 업무능력을 인정받았다.”(JOINS 인물정보 중앙일보 2003.2.28)

노무현 대통령과의 첫 인연은 노 대통령이 부산 지역구 의원 시절 에서 부터 시작되었고 후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어서 당시 예산실장인 박장관에게 예산을 더 따내려고 술자리를 했다고 전했다. (dongA.com 2003 년 신동아 4 월호 부록)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겸 장관 임명의 누락

노무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모든 장관이 임명되었는데 교육부총리 기용에만 문제가 되었다. 당초 고건 총리의 추천으로 오명 아주대 총장이 확정되었는데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새 내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교육부총리는 누락되었다. 부심 끝에 청와대는 김우식 연세대 총장을 거명했으나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의 반발로 또 무산되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2003.3.4) (dongA.com 동아일보 2003.3.1)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참여정부에 기용된 대통령 측근들로부터 외유내강의 좋은 인상을 받은 것이 직접적인 발탁배경으로 밝혀진다. 그의 특징적 업적은 1997 년 청와대 조세금융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외환위기의 위험성을 미리 보고했다. (JOINS 인물정보 중앙일보 2003,2.28)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당초 이철 전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는데 대선 때 노 대통령을 앞장서 지지했던 문화예술계 인사인 문성근씨가 노 대통령을 찾아가 문화예술인을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지켜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영화감독인 이창동씨는 노사모 회원으로 노 대통령 대선 당시 노 후보 지지를 위한 방송 찬조연설에 나왔다. 이창동씨가 장관에 발탁되기까지는 문성근씨의 설득과 영화계의 지인이자 노사모의 회원들인 정지영씨, 명계남씨의 결정적 역할이 있었다. 한편 노대통령은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운동에 영화계와 뜻을 같이하면서 이들과 첫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JOINS 인물정보 중앙일보 2003.2.28) (dongA.com 신동아 2005.4.1(통권 547 호) 132-137 쪽) (db.chosun.com 조선일보 2003.3.1)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새 정부 조각(組閣) 과정에서 국무조정 실장 혹은 기획예산처나 건교부 장관에 임명되리라는 전망이 잇따랐고 결과는 예상대로 되었다. 최 장관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논리적인 사고력과 풍부한 정책 아이디어 소유자기 때문이다.”(dongA.com 신동아 2003.4 월호 부록)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지역(강원도)안배도 고려 된 듯”.(JOINS 인물정보 중앙일보 2003.2.28)

박호군 과학기술부 장관

30 년 이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재직하면서 원장으로 활약하며 연구소를 혁신하며 구조조정도 성공적으로 일구어 내면서 이미 입각이 예상돼왔다. (dongA.com 신동아 2003.4 월호 부록) 정통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 국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출연연구소의 연구체제 개혁을 선도한 공으로 발탁되었다. (JOINS 중앙일보 2003.2.28)

권기홍 노동부 장관

정부와 첫 인연을 맺은 경력은 1997 년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으로 지낸 적이 있다. 발탁배경으로 밝혀지는 내용은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 대구지역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으며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 문화, 여성분과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 (JOINS 중앙일보 2003.2.28)

김영진 농림부 장관

농업고 출신으로 10 년간의 농협근무와 15 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만 활동하여 국회에서는 농정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는 농민 및 농업 관계자와 직접 관계를 맺으며 발로 뛰는 현장 업무로 열정을 갖고 일해왔다. 4 선의원에서 의원 자리를 포기하고 농림부 장관을 택한 것은 그가 농업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dongA.com 신동아 2003.4 월호 부록) 발탁 배경은 “대선 때 당시 노무현 후보의 농정 특보를 맡았다. 줄곧 농민 편에 서왔던 입장에서 쌀 수매가 인하 등 현안을 다뤄야 한다.” (JOINS 중앙일보 2003.2.28)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대선 때 노대통령의 보건의료 특보를 맡으면서 해박한 지식으로 높은 점수를 얻으면서 장관에 발탁이 되었다.” (JOINS 중앙일보 2003.2.28) 그러나 중앙일보에서 밝힌 것과는 달리 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대선 기간 중에 권양숙 여사의 특보를 맡으며 개인적인 친분을 쌓은 것이 실제적인 발탁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부인 권 여사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김 장관이 보건복지부의 핵심과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A4 2003.2.28)

지은희 여성부장관

여성운동단체인 한국 여성 평우회를 만들고 공동대표를 지내고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도 6 년간 대표를 맡는 등 여성 운동 계에서 많은 활약을 해왔다. 특히 과거 여성운동이 여성의

독자적인 활동에 치우쳐져 있었던 것을 지 장관은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을 이끌어 내며 활동의 영역을 넓혔다. (dongA.com 신동아 2003. 4 월호 부록)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 관계자에 의하면 인수위가 1 순위로 추천한 후보는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는데 삼성 측에서 윤 부회장 대신 진대제 삼성전자 사장을 추천하면서 정부의 검증을 거쳐 발탁되었다고 전했다.(dongA.com 신동아 2006.8.1 통권 563 호(p172-185)) “한국을 IT 강국으로 끌어올릴 책임자라는 평가가 발탁 배경으로 꼽힌다.”(JOINS 중앙일보 2003.2.8)

한편, 진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는 집중적인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장관직에 임명이 되었다. 아들의 병역면제 및 이중국적 논란이 국민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법조계에서 이중국적을 확인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삼아 확대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dongA.com 동아일보 기사 DB 2003.5 A4, 3.7 A5, 3.8 A1, 3.10 A2, 3.11 A31, 3.14 A31)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법무장관은 보다 엄격한 검증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진 장관은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권위자라는 점에서 발탁한 것이어서 아들의 국적은 결정적인 하자가 될 수 없다는 데 인사위 구성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소개했다.”(dongA.com 동아일보 2003.3.5 A4) “문재인 수석은 회동 직후 ‘인사 검증과정에서 진 장관이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탁월한 능력과 평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발탁했다’고 전했다”(dongA.com 동아일보 기사 DB 2003.3.7 A5)

정세현 통일부 장관

김대중 정부의 전 부처 중 통일부의 정세현 장관만 유일하게 유임되었다. (ab.chosun.com 조선일보 2003.2.28) 정 장관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1977 년부터 통일원 연구관에서 줄곧 종사하면서 93 년에는 대통령비서실 통일담당 비서관이 되었고 98 년에는 통일부 차관에 이어 2002 년 통일부 장관이 되었다. 통일에 관한 그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경력으로 유임에 이바지했으리라 본다.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

1990 년대 초부터 노 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었고 부산 지역의 각종 시민단체 모임에서 관계를 유지해왔다. 특별히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부산지역 정치개혁 모임인 ‘희망연대’ 발기인 중의 한 사람으로 노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 전공이 재정 및 회계여서 사실 해양수산 분야에 책임자가 아니라는 시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탁이 된 것은 노

대통령의 당선에 공헌한 것이 발탁배경이라고 보여진다. (dongA.com 신동아 2003. 4 월호 부록)

한명숙 환경부 장관

분야는 다르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 장관으로서 ‘성공한 장관’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노무현 정부로 유임이 된 장관이다. (dongA.com 신동아 2003.4 월호 부록)

과거에 잠시 환경운동 위원으로서 활동한 적도 있었지만 그것이 환경부 장관으로 발탁된 배경이라고 소개되지는 않았다.

2003.03 (임명 1 명)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윤덕홍 대구대 총장과 노 대통령과의 첫 인연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대구사회연구소’에서 이사를 맡으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노 대통령과의 인연이 발탁으로 이어질 정도의 깊은 인연은 아니라고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전했다.

교원 및 학부모단체의 반발로 인선된 오명 아주대 총장을 임명할 수 없었던 전례 때문에 인사위원은 여러 후보를 거론하며 숙고한 끝에 윤덕홍 대구대 총장을 정했다. 윤 총장을 인선한 원인은 교육계의 당면 문제인 지방대학 육성과 교육의 세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인사로 선정되었으며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및 전국학부모회에서도 반대여론은 없었다. (dongA.com 동아일보 기사 DB A8 2003.3.7)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윤 총장은 교육개혁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고 대학 육성에 대한 식견을 갖춘 데다 8 년간 고교 교사를 해 중등교육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깊이 알고 있다’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JOINS 중앙일보 인물정보 2003.3.7)

2003.07(교체 1 명)

김영진 농림부장관은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새만금 사업을 법원이 집행 잠정 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의 긴급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표해 자신이라도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면 사의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노 정부의 첫 개각 이후 첫 번째 장관 교체를 하게 되었고 갑작스런 김 장관의 사표수리로 청와대의 인사추천위원들은 이례적으로 장관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면접 방식으로 심야 청문회를 열어 인선 작업에 들어가 점검한 후 허상만 신임 농림부 장관을 임명했다.(db.chosun.com 조선일보 2003.7.17/ 7.18/7.24)

순천대 식물 생산 과학부 교수인 허 장관은 농업과학연구소장 및 총장 등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특별히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호남지역에 산재된 농업에 관한 현안에 대해 이해와 추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 발탁되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dongA.com 동아일보 2003.7.23)

2003 년 9 월 (교체 2 명)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은 하기의 설명은 주로 (db.chosun.com

2003.8.12/8.13/8.30/9.2 A5 면, A1 면/9.3/9.4 A1 면, A3 면/9.5/9.8

A3 면,A1 면/9.9/9.14/9.15/9.16/9.19)에서 참고되었다.

2003 년 8 월 7 일 발생한 한총련 사태에서 발단이 되었지만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청와대와 야당간의 대결에서 유래된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한총련 학생들의 미군훈련장 기습시위 및 한나라당 당사 기습사태에 대해 일선 경찰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경비책임을 김두관 행자부 장관에게 돌렸다. 그에 대한 책임으로 한나라당은 김두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를 위해 외국에 나가있는 소속의원들에 대해 20 일 오전까지 전원 귀국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리는 등 소속의원 149 명 전원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 접촉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에 필요한 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37)의 찬성. 한나라당 의원이 149 명이므로 13 명 이상이 불참하거나 부(否)표를 던지면 부결된다. db.chosun.com 2003.9.1)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137 명)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현 의석 분포는 한나라당 149 명, 민주당 101 명, 자민련 10 명, 기타 12 명이어서 한나라당의 이탈표가 10 표를 넘지 않으면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db.chosun.com 2003.9.2)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해임건의안에는 한총련의 5.18 광주묘역 시위, 한총련 미국 대사관 기습시위, 한총련 미군부대 난입 시위, 한나라당 당사 연쇄 기습,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의 남북 충돌 사태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을 사유로 들고 있다. db.chosun.com 2003.9.3)

한나라당은 김 장관의 해임에 대한 이유로 노골적인 정치적 의도로 표현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홍사덕 한나라당 총무의 발언을 인용하면 “김 장관 해임 안은 노무현 정부 6 개월의 실정(失政)에 대한 중간평가이며 경제, 안보위기, 극심한 혼란상 전체에 대해 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직접적 방법이 마땅치 않아 반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김 장관을 선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이 염두에 둔 또 다른 분석은 김 장관이 야당의 지기기반인 부산.경남에 경남지사 출마 움직임을 보인 것에 대한 저지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김 장관의 해임에 관한 한나라당의 발언은 한총련 사태 등에 대한

‘치안 책임’으로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 노무현 정권을 타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민련, 민국당 의원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결됐다. 한나라당의 이탈 표가 거의 없이 가결되자 청와대는 어쩔 수 없이 해임 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고 국정 감사 후 해임결단을 내리겠다며 해임에 대한 거부를 나타냈다. 이에 야당은 김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김 장관의 ‘국회 출입금지’ 조치로 맞섰다.

김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신의 해임건의안을 다루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주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강행된 해임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에 불과하다고 야당 측을 공격했지만 추석연휴가 지난 17일 쯤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석 연휴 동안 강풍과 해일을 동반한 초속 60m의 태풍 ‘매미’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엄청난 피해를 속출시켰다. 전국을 강타한 태풍으로 어수선한 청와대는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수해복구가 끝날 때까지 일하도록 하면서 해양수산부 허성관 장관을 행자부 장관으로 내정한 후 공표했다. 노 대통령은 19일 김두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을 신임 행자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임명은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표문제가 검토되면서 이미 노 대통령은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을 내정했다. 발탁배경으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 마인드가 있는 허 장관을 정부 혁신과 지방분권을 추진할 책임자로 보고, 김 장관 후임으로 점 찍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db.cosun.com 2003.9.16 A6) 더 구체적인 발탁배경으로 “허 장관이 회계와 경영을 전공, 지방 재정 분권 및 경영 혁신에 책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db.chosun.com 2003.9.18 A5)

그러나 공식적인 발탁 내용 이외에도 거론된 발탁 배경은 노 대통령이 허 장관을 정치인으로 키워 내년 총선 때 부산 출마를 시키려고 경력관리에 들어갔다고 청와대 일각에서 비공식적으로 전했다.

한편 노무현과 허 장관의 인연은 학생운동을 하다 구속된 허 장관의 동생을 변호하면서 8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90년대 초 허 장관은 경실련 창립 주도자로서 부산에서 시민운동을 하다가 노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다. 지난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의 ‘자문교수단’으로 활동한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두 사람의 인연은 줄곧

끊이지 않고 이어져왔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3.9.18 A5) (dongA.com 동아일보 기사 DB 2003.9.18 A4)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은

허성관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행정자치부로 이동되면서 후임으로 최낙정 해양수산부 차관이 장관으로 내정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은 노 대통령이 6 대 해양부 장관 시절 당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인 최 내정자와 첫 인연을 맺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2003.9.18 A1) (dongA.com 동아일보 2003.9.18 A4)

2003.10(교체 1 명)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경질)

최 장관은 임명된 후 14 일 만인 10 월 2 일 경질되면서 해양부의 역대 장관은 물론 현 정부의 장관 중 최 단명으로 기록되었다. 경질된 이유는 강의를 하는 공식석상에서 거침없이 여과하지 않은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직접적 경질의 배경이 된 문제의 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대상 강연에서 ‘대통령은 태풍이 오면 오페라 보면 안 되는가’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최낙정 해수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3.9.30 A6) 둘째, “교사 상대 특강에서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교사들이 많은데 몇 놈이 교장 된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발언, 교원단체의 반발을 샀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3.10.2 A2) 당시 최 장관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교사들의 항의가 거세지면서 일부 20 여명의 교사들이 퇴장하는 등 강당이 소란해지자 최 장관은 사과의 표현으로 교사들에게 큰 절을 했다. 셋째, “목포 해양대 특강에서 ‘기자들 앞에서는 말 못하겠다’며 퇴장 시비를 빚었다.”(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3.10.3. A2)

이상의 세 가지 이외에도 최 장관의 무분별한 발언은 해양부 간부들과 정부 내부의 문제로 제기되었고 결국 고건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를 하며 경질되었다. 최 장관의 저서인 세창 미디어 판 [공무원은 좀 튀면 안 되나요]에서처럼 그는 자칭 ‘튀는 공무원’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평가를 받으며 자신은 변화와 개혁을 추구했지만 그의 지나친 언행은 장관의 격에 맞지 않았던 것이다. 퇴임식에서 그는 자신의 거친 발언을 순수한 스타일이었지만 장관의 자리에는 맞지 않았더라는 유감을 표현하며 동시에 자신이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보았다고 고백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3.9.27 A1/9.30A6/10.2A6/10.3 A2) (JOINS 인물정보 2003.7.30/2003.9.25)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은

10 월 2 일 경질된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자리에 장승우 전 기획예산처 장관(김대중 대통령 정권 시기 2002.1-2003.2)을 내정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장 신임 장관 내정자는 경제부처 요직을 두루 거친 경제기획통으로,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등 굵직한 경제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특히 2 년간의 해양부 차관(1996.12-1997.3) 경력을 바탕으로 해양부의 주요 현안을 원활히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탁배경을 밝혔다.” (dongA.com 동아일보 2003.10.4 A2)

2003 년 12 월(해임 1 명, 교체 4 명)

노무현 대통령은 12 월 28 일 하기에 언급된 3 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해임은 박 장관이 청와대 정책실장(장관급)에 내정되면서 교체가 되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3.12.29 A1) 박 장관의 해임은 국정소신을 외면한 개각이라고 야당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야당은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시점에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을 대통령 정책실장에 임명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고 비판했다.”(dongA.com 동아일보 기사 DB 2003.12.29. A1)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해임(경질)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7 월의 철도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강경노선을 택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은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최 장관의 사퇴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dongA.com 주간동아 2003.7.10 392 호 p30)

하지만 건설교통부에 넘쳐나는 산재된 업무량, 즉 부동산 파동부터 철도파업, 화물연대 운송거부, 고속철도 노선변경 등 정부의 굵직한 현안들로 최 장관은 집무실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 밖에 안될 정도로 몸을 바빠 움직여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2003 년 9 월 19 일 중앙일보의 인물 탐구 면에서 그가 전한 다음의 내용을 보면 스스로 퇴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 같다. “과거 선배 장관들이 퇴임할 때면 하나같이 ‘대과 없이 끝내 다행’이란 말을 꺼내 왜 저리 소극적일까 생각했다. 막상 내가 해보니 대과 없기도 정말 힘들구나 란 생각이 든다’는 그는 ‘최선을 다하고 명예롭게 떠나고 싶다’고 말한다”(JOINS 인물정보 2003.9.19)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임명에 대한 발탁배경은 그의 업무 경력에서 볼 수 있는 전문성이다. “옛 건설부와 교통부, 통합 건설교통부 등을 통틀어 20 여년 간 건설교통행정 실무경험이 있는 최초의 장관”(dongA.com 동아일보 2003.12.29 A4) 인천국제공항 건설 시 8 년간 현장에서 진두지휘 한 그의 업적 또한 발탁의 배경으로 꼽힌다. (db.chosun.com 조선일보 2003.12.29 A3, A6)

박호균 과학기술부 장관 해임의 이유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의 업무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때문이라는 점에서 공직 경험의 미숙한 점으로 본다.

(dongA.com 동아일보 2003, 12.29 A3)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 임명에 대한 배경을 알아보기로 한다. 첫 내각에서 교육부 총리자리에 인선이 되었으나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로 임명되지 않았다. 측근에 의하면 그 이후에도 노 대통령은 오 장관의 관청계, 학계, 언론계 등을 두루 망라하는 다채로운 경력 및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며 꼭 필요한 인물로 그에 대한 집착을 보였다고 전한다. 노 대통령은 오명 아주대 총장의 거둬들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위기 및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장관직 수락을 거듭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부총리로서 산업자원, 정보통신 분야까지 총괄하는 역할이 주어졌다는 후문이다. (dongA.com 동아일보 2003.12.29 A3)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해임은

“위도 핵폐기물처리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안사태 등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네이버뉴스 PRESSian 2003.12.12) 2003 년 7 월 부안을 원전센터 부지로 선정한 이후로 주민들의 촛불집회, 해상시위 등 반대 집회 시위가 장기전으로 돌입되고 있었다. 시위는 정부의 현금 보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점점 거세졌고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윤 산자부 장관의 발언으로 불안군민들의 시위는 더욱 거칠게 확산되어 가게 되었다. (chosun.com 인터넷뉴스 2003.8.1)

윤 장관은 12.12 일 사퇴성명서를 통해 “부안 원전센터 부지 선정후의 많은 혼란이 주무 장관인 저의 책임이며 장관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부안주민들과의 교감이 부족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네이버뉴스 서울경제 2003.12.12) 한편 “정찬용 대통령 인사보좌관은 ‘윤 산자부 장관이 그 동안 열심히 했으나 원전센터 부지문제가 여러 차례 뒤집어지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고 장관이 바뀐 이유를 설명했다.” (JOINS 인물정보 2003.12.16)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임명

“정찬용 대통령 인사보좌관은 ‘행시 출신인 이 장관은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탁월한 조정과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OINS 중앙일보 인물정보 2003.12.16) 발탁 배경으로 보여지는 그의 업적은 “지난 2000 년 자원정책실장 재직 중 전력노조 파업에 맞서 밤샘 협상을 진행하고 여야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이끌어낸 뚝심이 돋보인다.” (db.chosun.com
조선일보 2003.12.16 A9)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겸 장관 해임

윤 부총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로 인한 교육계 분열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복수정답 파문, 학교생활기록부 CD 롬 파동 등에 책임을 져야겠다고 판단했다” 고 말했다. (chosun.com 1 등 인터넷뉴스 2003.12.17 서울 연합뉴스)

또한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도와달라고 했고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이 개혁그룹의 수장노릇을 해달라고 강권하고 있으나 대통령에게도 소질과 역량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JOIN 중앙일보 인물정보 2003.12.18)

한편,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관련 단체들은 장관의 교체설에 교육정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현하며 교육장관 경질에 반대 성명을 냈다. 그러나 연말 개각 때 교체 대상에 오르면서 12 월 16 윤 부총리는 사의를 표명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23 일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안병영 신임 부총리를 임명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2003.12.16 A1/12.24 A1, A3) (dongA.com 12.16 홍성철 기자)

안병영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겸 장관 임명

발탁배경으로 정찬용 인사수석이 밝힌 내용은 “내년부터 대입 수능 관리가 더 복잡해짐에 따라 경험과 합리적인 업무 처리 스타일을 중시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3.12.24 A1) 발탁에 영향을 준 그의 업적은 김영삼 정권 시절 20 개월간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경력, 대안학교 제도 도입, 중·고교에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으로 교육의 민주화 기여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2003 년 초 교육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의 역대 장관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db.chosun.com 조선일보 2003.12.24 A3)

2.2)2004년도에 해임.임명된 장관

	2004.01.	2004.02.	2004.05	2004.06	2004.07	2004.10
PM				Lee Hae-chan.....		
FAT	Ban Ki-mun(28)-----					
GAH	-----					
FE	-----	Lee Hun-jai(30)-----				
Ju	-----				Kim Seung-kyu(36)-----	
ND	-----				Yoon Kwang-ung(37)-----	

PB Kim Byug-il(29)-----
 EHR -----
 CIE -----
 CTo ----- Chung Dong-Chea(33)-----
 CTr -----
 ST ----- Oh Myung(38)초대
 La ----- Kim Dae-hwan(31)-----
 AF -----
 HW ----- Kim Keun-tae(34)-----
 GE -----
 IC -----
 Un ----- Chung Dong-young(35)-----
 MAF -----
 En ----- Kwak Kyul-ho(32)-----

01 03-42,11,18 08,13,16 04,05 27

**27 오명: 부가 부처로 바뀌면서 명칭이 틀러지고 초대로 임명됨.

(목록 2004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8	35	TB	1944	58	SN	00	Po	00(0)	00	00	00	00	00	Bo	Ps	Di	FAT
29	13	KB	1945	59	SN	00	Pi	00(0)	Vm	00	Al	00	00	00	00	Ad	PB
30	14 22)D	CI	1944	60	SN	U	Ju	00(0)	00	00	00	00	00	00	00	Ad	FE
31	25	CN	1949	55	SN	G	Wi	00(0)	00	00	00	00	00	00	Ur	Sl	La
32	17	KB	1946	58	YN	U	Ig	00(0)	Vm	00	00	00	00	00	00	Ad	En
33	22	CN	1950	56	KH	00	Pi	AG(2)	00	00	00	00	00	00	00	Ad	CTo
34	19	KY	1947	57	SN	00	Wi	AG(3)	00	00	00	Na	00	00	00	Sl	HW
35	19	CB	1953	51	SN	G	Pi	AG(3)	00	00	00	00	00	00	00	Jo	Un
36	12	CN	1944	60	SN	00	Ju	00(0)	Vm	00	00	00	00	00	00	Ju	Ju
37	28	KN	1942	62	MUM	00	Mi	00(0)	00	00	Al	00	00	00	00	09	ND
38	17 70)NK	SE	1940	67	MUA/SN	U	Mi/Ig	00(0)	Vm	00	00	00	00	00	UR 06/Jo	ST	

2004 년 1 월(교체 1 명, 임명 1 명)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임명

12 월에 해임된 박봉흠 전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장관으로 옛 경제기획원 예산실에서 20 여년 간 경력을 쌓은 대표적인 예산통(通)으로 공사가 분명하고 일 처리를 꼼꼼히 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2003.12.29 A3, A6)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해임

윤 장관의 해임 배경은 2003 년 9 월 이라크 추가 파병안에 대해 윤 장관과 노 대통령의 견해 차이에서 시작되었다. 윤 장관은 노 대통령 대선 시절 부터 줄곧 노 대통령의 외교 참모로 손꼽히면서 참여 정부의 제 1 기 내각에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발탁되었다. 윤 장관과 노 대통령 사이가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한 배경에는 노 대통령의 또 다른 외교.안보의 참모로 북한학자 출신인 이종석 NSC(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총장과 외교 수장인 윤장관과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윤 장관은 대미 외교의 수장으로 '한.미 동맹파'이고 이종석 차장은 NSC 를 중심으로 한 '자주파'로 청와대에는 양면의 외교노선이 공존했는데 이라크 추가 파병안 에서 두 파는 각각 의견을 달리했다. '한.미 동맹파'인 윤 장관은 추가 파병을 주장했으나 노 대통령은 의견을 달리함으로써 결국 이종석 NSC 사무차장의 편에 서게 되었다. 그 후로 청와대에서는 윤 장관을 '미국의 국무장관'이라 비하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가 하면, 반대로 윤 장관을 주축으로 한 북미국 직원들은 청와대 NSC 를 노골적으로 비방하였다. 북미국 직원의 비방 발언은 외교통상부 내부 직원이 제보한 것으로 보이는 투서(投書)로 인해서 청와대의 집중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와대는 사석발언을 문제 삼아 전화추적을 하였다. 일명 '외교부 사태'조사 결과 조현동 북미 3 과장 등 핵심 관련자들이 징계되었다. 문제가 된 발언들을 몇 가지만 알아보기로 한다. 1)“미국도 모르는 NSC 가 외교를 망친다.”2) „ NSC 보좌진은 탈레반 수준.“3) „청와대가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등 4)최근 ,김정일 호감세력이 노무현 정권 지지층'이란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의 발언에 대해 „맞는 얘기 아니냐“ 5)„4 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이길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은 영향력이 없어지고 이 정권은 끝난 것이니 지금 하는 것 다 필요 없어진다“ 등이다.

결국 외교.국방부의 ,한.미 동맹파'와 NSC 의 ,자주파'간의 갈등이 빚어 낸 외교부 직원들의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한 모독성 발언은 윤 장관의 경질로 이어졌다. 조선일보 기사 DB(db.chosun.com) 2004 년 1 월 16 일 A1 면에서 박두식 기자가 전한 윤 장관의 경질 사유는 노무현 정부가 외교 노선의 축을 ,자주' 에 두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정찬용 인사 보좌관은 ,외교부 일부 직원들은 과거의 의존적 대외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참여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자주적 외교정책의 기본 정신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윤 전 장관의 경질에 대해 성실하고 유능한 장관이지만 기강이 무너진 상태라고 말했다. (db.chosun.com 2004.1.12 A2/1.13 A3 면, A1 면/1.14 A1 면/1.16 A1 면, A4 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임명

,외교부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질한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 후임에 반기문 대통령 외교보좌관을 임명했다. 청와대 인사수석이 밝히는 발탁배경은 반 보조관이 외교부 관련 직책에 경험이 많아 국제외교에 대한 감각이 밝고 노 대통령의 외교방침과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별히 '외교부사태'로 어수선해진 외교부 직원간의 인간관계 질서를 정립할 장관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db.chosun.com 2004.1.17 A1) (JOINS 중앙일보 인물정보 2002.1.17)

2004.2 (3 명 교체)

2003 년 12 월 27 일에 발표된 대로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 되었던 3 명의 장관들이 아래에 언급된 대로 공직을 사퇴하면서 장관들이 교체되었다.(donga.com 동아일보 2003.12.27)

김진표 재정경제부 부총리겸 장관의 후임으로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이 임명되었다. 이 신임 장관은 경제를 잘 아는 사람으로 평이 나 있어 첫 개각에서 경제부총리 후보로 검토되었으며 경제분야에 대해 노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해왔다. 발탁배경으로 국내외 시장을 안정시킬 책임자로 판단되어 청와대의 간곡한 부탁으로 임명되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2004.2.3 A5/2.11 A5)

권기홍 노동부 장관의 후임으로 김대환 인하대 경상대학장이 임명되었다. 김 신임 장관은 노동 경제학 전공 교수로 사회참여형 친 노동자적인 학자로 통한다. 하지만 그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 진보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 노동부 부처의 역할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접적인 발탁배경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노동운동 정치화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으며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기도 하는 소신 있는 노동계의 전문가로 보여진다. (db.chosun.com 조선일보 2004.2.11 A1, A5)(JOINS 인물정보 2004.3.12)

한명숙 환경부 장관 후임에 곽결호 현 차관을 승진. 임명했다. 곽 신임 장관은 환경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1996 년부터 환경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환경정책을 잘 이끌어갈 책임자라고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밝히고 있다. (db.chosun.com 2004.2.18 A1) (JOINS 인물정보 2004.2.18)

2004.5(고건 국무총리 사표 제출), 2004.6(이해찬 신임 국무총리 임명)

고건 국무총리가 5 월 15 일 자신의 임기를 다 했으며 스스로 사표의사를 밝혔다. 그 후 10 일이 지난 뒤 사표가 수리 되면서 고 총리는 장관의 임명에 대한 총리의 제청권에 대한

불쾌한 감정으로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다. 아래에 설명된 ‘각료 제청권’의 내용과는 달리 정부는 사의를 표명한 고 장관에게 대통령이 임명 하고 저 하는 3 개부처의 장관(통일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에 대해 각료 제청권을 행사해 달라고, 강권’했다.

이러한 정부의, 강권’은 총리에게 형식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으로 총리의 권한인 제청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청와대가 헌법을 경시한 태도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그럼에도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총리 제청권은 형식상의 절차’라고 주장하며 결국 개각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후임으로 이해찬 신임 국무총리가 임명되었다. 이로써 현 정부 1 기 고건 내각의 여소야대와 달리, 이해찬 내각’은 열린우리당의 현역 의원인 이해찬 의원이 총리직을 맡아 주도하고 제청권에서 문제시 되었던 3 개부처의 장관이 열린우리당으로 영입되면서 여대야소가 되었다.

발탁배경으로는 도덕성에 흠이 없고 내각에 주도권을 쥐고 당과 정부와의 관계를 책임감과 추진력으로 안정 속에서 진두 지휘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이라고 노 대통령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dongA.com 동아일보 기사 DB 2004.5.15 A1) (db.chosun.com 조선일보 2004.5.25 A1 A3/6.9 A1/6.30 A1 면, A5 면)

***“각료 제청권: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장관)으로 누구누구를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권한이다(헌법 87 조 1 항). 대통령이 국무위원 인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 헌법상 행정각부 통할권(86 조 2 항)을 갖고 있는 총리가 자신과 함께 일 할 국무위원을 고를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도 된다.” (db.chosun.com 조선일보 2004.5.25 A3)

2004.6(3 개부처 개각: 통일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이번 개각은, 정치 개각’, 이상한 개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총선을 고려해 필요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여당의 움직임으로 보여지다 보니 교체되는 장관들에 대해서 뚜렷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치를 위한 이상한 개각이라는 것이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장관직 기간이 그 정도면 충분히 교체할 때가 되었고, 또 장관직 자리에 앉아야 할 다른 인물을 위해서 양보를 해야한다는 식의 논리로 생각될 수 밖에 없다고 전해진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임으로 김근태 신임 장관을, 정세현 통일부 장관의 후임에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이창동 장관의 후임에 정동채 열린우리당 의원이 내정되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노무현 후보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냈고 선거 전부터 노대통령의 언론정책을 맡았다. 여권의 핵심 인사가 전하는 발탁요인은 ,언론개혁을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카드'라고 말했다. 이는 비판적 신문이 주도하는 신문시장을 강제로 바꿔 보려는 정부의 시도이다. (db.chosun.com 2004.7.1 A4)

통일부의 정동영 신임 장관은 대선주자로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장관자리가 주어졌다고 전해진다. (db.chosun.com 조선일보 2004.5.22 A6/7.1 A4)

2004.7(2 명 교체:법무부, 국방부)

두 부처에 대한 교체의 공통적인 배경은 노 대통령이 그 동안 검찰과 군 조직이 각각의 당해 장관들과 잘 융합되지 못하자 해당 장관의 장악력을 문제로 평가해 장악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이라고 전해졌다. (ab.chosun.com 2004.7.29 A1)

조영길 국방장관의 교체는 4.15 총선 후 부터 거론 되어왔으나 개각을 둘러싼 당과 청와대간의 이견으로 뒤로 미루어지다가 김선일씨 피살사건으로 국민적 비난이 커지자 자연스레 여.야 모두 조 장관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단, 조 장관의 교체 사유는 문책성이 짙고 경질성은 아니라고 정찬용 인사수석은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NLL 을 침범한 7 월 15 일 이후 교체에 대한 분석은 조 장관이 군 고위급 인사들을 잘 장악하지 못해서 NLL 보고가 누락이 되었으며 이는 조 장관이 군 장악력의 한계를 드러낸 점으로 직접적인 해임배경이라고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밝혔다.

(db.chosun.com 조선일보 2004.6.28 A5/6.29 A6/7.1 A1/7.29 A1)(JOINS 인물정보 2004.7.28)

조 장관의 후임에 윤광웅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임명되었다. 윤 보좌관은 2 함대 사령관과 해군작전사령관 등 해군 내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해군 참모차장의 경력이 있다.

청와대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노대통령의 국방 정책에 대한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NLL 사태로 심기가 불편해진 국방부와 청와대를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되었다. 노대통령과 부산상고 선배로 학연의 고리가 도리어 임명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었지만 그런 이유로 적임자가 배제되는 것 또한 역차별이라는 내정자들의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해졌다. (JOINS 인물정보 2004.7.28)

(db.chosun.com 조선일보 2004.7.29 A4)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교체도 역시 4.15 총선 후에 검토되었다. 강 장관의 경질소식에 검찰 내부에서는 뜻밖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 장관 또한 아침에 경질 통보를 받았다. 청와대는 강 장관이 1 년 5 개월 동안 검찰 개혁 등 많은 바 소임을 다했으므로 자연스런 퇴임이라고 밝혔지만 한편에서는 강 장관이 검찰개혁을 실시하면서 검찰 조직과 갈등이 많았던 점을 들며 조직 장악력의 한계가 해임 이유라고 전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강 장관이 17 대 총선 시 노 대통령의 총선 출마 요청을 거절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강 장관의 충성심에 회의를 품게 되었고 후임으로 이미 김승규 법무부 장관을 물색했다고 알려졌다. 또 다른 해임 이유로 여권과 코드 맞추기에서 강 장관이 여당의 편보다 검찰의 편에 서있다는 여당 인사들의 원성(怨聲)도 있었다. 결국 강 장관의 갑작스런 경질은 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과 코드 맞추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dongA.com 동아일보 2004.7.29 A1)

김승규 신임 법무장관이 강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검찰부장과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등 요직을 지냈다. 청렴한 원칙주의자라는 평을 받는다. (db.chosun.com 조선일보 2004.7.29 A4) (dongA.com 동아일보 2004.7.29 A1)

2004.10 (1 명 승격)

과학기술부 장관 오명이 부총리로 승격되면서 초대 부총리로 유임되었다. 국무회의에 부총리 1 명을 신설함으로써 과학기술부 장관이 겸임토록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등 과학기술부 기능 개편과 관련된 법안들을 심의, 통과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2004.7.28 A8)

2.3)2005년도에 해임.임명된 장관

2005.01	2005.03	2005.04	2005.06	2005.12
PM				
FAT				
GAH Oh Young-kyo(39)-----				
FE -----Han Duck-soo(46)-----				
Ju -----Chun Jung-bae(48)-----				
ND				
PB Byeon Yang-kyoon(40)-----				
EHR Lee Ki-jun(41),Kim Jin-pyo(42)-----				
CIE				
CTo				
CTr -----Choo Byung-jik(47)-----				
ST				
La				
AF Park Hong-soo(43)-----				
HW				
GE Jang Ha-jin(44)-----				
IC				
Un				
MAF Oh Keo-don(45)-----				
En -----Lee Jae-yong(49)-----				
GEF -----Jang Ha-jin(50)-----				
21,29,24,41,20,14,23	30,26		36, 44/50,32	34,35

(목록 2005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39	15	TN	1948	57	KO	00	Wi	00(0)	Vm	00	00	00	00	00	00	Ad	GAH
40	19	KN	1949	56	KO	U	Wi	00(0)	Vm	00	00	00	00	00	00	Ad	PB
41	01	SE	1938	67	SN	U	Ig	00(0)	Vm	00	00	00	00	00	Ur	LF	HER
42	19 32)	KY	1947	56	SN	U	Ju	aG(3)	Vm	00	Al	nA	00	00	Ps	Ad	FE
43	32	KN	1955	50	KS	00	La	Ag(1)	00	00	00	00	00	00	00	SL	AF
44	6(38	CN	1951	54	EH	00	So	00(0)	00	00	00	00	00	00	00	LF	GE
45	15	KN	1948	57	SN	00	Pi	00(0)	00	00	00	00	00	00	uR	Ad	MAF
46	17	CN	1949	56	SN	U	Wi	00(0)	Vm	pM	Al	00	00	bO	Ps	Ad	FE
47	20	KB	1949	56	KB	G	P	00(0)	Vm	00	00	00	00	00	00	Ad	CTr
48	14	CN	1954	51	SN	00	Ju	AG(4)	00	00	00	Na	00	00	00	Ju	Ju
49	10	KB	1954	51	SN	00	Me	00(0)	00	00	00	00	00	00	00	SL	En
50	33 38)	CN	1951	54	EH	00	So	00(0)	00	00	00	00	00	00	00	LF	GEF

2005.1 (교체 7 명)

노무현 대통령은 4 일 5 개 부처 장관(교육부총리, 행자부, 해양부, 여성부, 농림부) 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였다. 그 중 허성관 행자부 장관과 지은희 여성부 장관의 교체는 취임 시 노대통령이 제시한 2 년의 임기를 다 마침으로써 교체 대상이 되었다. 그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견은 “2 년쯤 일하면 아이디어도 다 써먹을 만큼 써먹고, 열정도 조금 식고 메너리즘에 빠질 때쯤이 된다”고 했다.

교육부와 농림부 장관 교체에 관한 공통적인 이유는 장관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항상 문제가 있는 부서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장관이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라고 노 대통령은 전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5.1.5 A4/1.4 A1)

2 년의 임기를 다한 허성관 행자부장관 후임에 오영교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을, 지은희 여성부장관 후임에 장하진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를 임명했다.(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5.1.5 A1)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취임 1 년 2 개월 만에 교체되게 되자 노 대통령은 농담조로 “장관 두 번 하셨으니 자리 내놓으십시오”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김대중 정부 말기에 예산처장관을 했었다. 후임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직무대행을 임명했다. 신임 오거돈 해양부장관은 부산시장 보권선거에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되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5.1.5 A4)

허상만 농림부장관의 교체에 대해 노대통령이 밝힌 내용은 “이번 쌀 협상 하고 나면 농림부장관 쫓아내라고 되게 시끄러울 줄 알고 인사 교체 계획을 세웠는데 이외로

조용해서 인사를 취소할까 하다가 계획된 것이라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2005.1.5 A4)

신임 농림부 장관으로 박홍수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임명되었다. 경남 이어리의 이장으로 활동하면서 농민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농민 운동을 하는 등 남해군수에 당선되었다. 노 대통령과 오래 전부터 농촌 문제를 놓고 토론하던 사이였고, 2002 년 대선 때는 경남과 충청지역 농민표를 끌어오는 데 공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 또한 농림부 장관은 농민 출신 중에서 발탁하겠다고 약속했다. (db.chosun.com 2005.1.5 A13, A4)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교체는 수능부정사건이 문제였다. 노대통령은 “지난해 교육혁신 과정은 대단히 좋은 성과였지만 교육이란 아무리 잘해도 불만이 가득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체배경과 관련해 ‘민심 수습용’임을 밝혔다. 후임으로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을 임명했다. (JOINS 중앙일보 인물정보 2005.1.5/ db.chosun.com 2005.1.5 A4)

이기준 교육부총리는 임명된 지 3 일만에 시민과 교원단체 등이 도덕성을 문제 삼아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이 있었고 결국 사퇴를 내게 됨으로 노무현 정부 장관 중에서, 역대 교육부 장관으로도 최 단명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이 신임 부총리의 사퇴배경은 첫째, 장남 동주씨가 1986 년 당시 부정적으로 연세대 화학공학과에 정원 외로 특례 입학했다는 의혹이 일어났다. 당시 화공과 학과장은 김우식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김 비서실장과 이 신임 부총리는 충남 출신이고 대학시절부터 친분을 쌓고 미국 유학을 함께 한 40 년 절친한 친구 사이로 영향력 행사 의혹이 일면서 이번 인사가 ‘정실인사’라 의혹을 받게 되었다. 한편, 정실인사의 관행에 대해 노 대통령은 당선 직후 분명한 개혁의사를 보이며 ‘인사청탁을 하면 패가망신을 시키겠다’는 발언을 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3.2.28 A2) 이기준 장관의 임명 오류는 노 대통령 정부의 인사정책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전면 개선이 요구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을지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정책도 마련되었고 2006 년 2 월부터 첫 청문회가 실시 되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5.1.1 A4/1.12 A5) 하기에서 인사시스템과 국회청문회의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둘째는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던 장남이 사실 2001 년 이후 서울에서 LG 전자 북미총괄 마케팅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부총리의 도덕성에 상당한 치명상을 가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셋째는 2002 년 서울대 총장 재직 시 정부가 승인한 그의 판공비는 3000 만원이었지만, 자금을 편법을 조달해 4 억 5100 만원의 판공비를 썼다. 또한 그 해 총장을 재직하며

LG 사외이사를 겸직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겸직 금지조항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으며 결국 임기 6 개월을 남겨두고 조기 퇴진했다.

넷째는 경기도 수원에 시가 18 억원에 이르는 신축 건물을 자식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한편 이 부총리가 재산 신고를 부정직하게 했다고 주장되었다.

이 부총리의 사퇴 파동은 청와대 인사 담당자들에게도 위협이 되었는데, 정찬용 인사 수석, 박정규 민정수석, 이 부총리를 추천한 이해찬 국무총리가 한나라와 시민.교육단체의 문책 및 사퇴압력을 받았고 사표를 냈지만 결국 사퇴 파동의 전말은 청와대 정찬용 전 인사수석과 박정규 민정수석이 물러나게 되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2005.1.5 A4/1.6 A6/1.8 A1 면, A3 면, A4 면/1.10 A1,A3 면/1.13 A6)

****시스템인사**

첫 단계는 1200 여명이 들어있는 인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적당한 인사들을 추려낸다. 인사수석실에서 한다. 2 단계는 인사추천회의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이 회의는 인사•민정•홍보수석 등이 참석, 후보군을 3~4 배수로 압축한다. 3 단계는 압축되는 인사들에 대한 검증이다. 민정수석실에서 맡는다. 마지막 단계는 비서실장과 인사수석이 검증을 통과한 인사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 직전에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최종 낙점은 대통령이 한다. 청와대는 “과거엔 사람이 인사를 해서 문제가 있었다”며 “이제는 시스템이 인사를 한다”고 말해왔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5.1.8 A4)

****국회 청문회**

■어떻게 추천하나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실(직원 20 여명)이 3~5 배수의 후보를 추려 ‘인사추천회의’에 보고한다. 인사추천회의 멤버는 인사수석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민정•시민사회•홍보수석 등 6 명. 인사수석실은 현재 1200 여명의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

■누가 검증하나

인사수석실에서 명단을 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직원 15 명)이 검증을 맡는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인사수석실에 통보한다.

■어떻게 검증하나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중앙인사위원회, 국세청, 국정원, 경찰 등의 자료(일명 존안자료)를 토대로 검증한다. 국정원이 1 년에 두 차례씩 차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만드는 평가 보고서도 참고자료다.

■무엇을 검증하나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경우는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출가 전 자녀의 재산과 병역 등만 조사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탐문하기도 하고, 미심쩍은 부분은 가끔 당사자에게 직접 묻기도 한다. 그 이상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때문에 조사하기 어렵다고 한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고위직은 청문회에서 질문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기초 조사를 한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현 정부 출범 초기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16 년간 미국 영주권자였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번에도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주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확인하지 못했다.

■검증 얼마나 걸리나

청와대의 검증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1~2 일 정도일 수도 있고, 10~20 일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db.chosun.com 조선일보기사 DB 2005.12 A5)

교육부 부총리의 후임에 전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였던 열린우리당의 김진표 의원이 발탁되었다.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겸 장관이 임명되자 교육 관련 단체들은 경제관료 출신을 교육총수로 세웠다고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 대통령의 교육부 부총리에 대한 인선 기준은 대학은 산업이고 개혁이 필요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시장원리로 접근했다. 그러나 학자나 교육행정가 출신은 교육 논리로 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에 과감한 교육개혁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과 같은 맥락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은 경제마인드를 갖고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기업인처럼 대학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db.chosun.com 2005.1.27 A1/1.28 A1, A3)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이 1.27 일 갑자기 “앞으로 1 년을 더 할 힘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그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도 별다른 설명이 없고 „용퇴 차원“이라고만 말했지만 이와 관련해 청와대측 으로부터 그만두라는 모종의 암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후임으로 기획예산처 차관인 변양균 신임 장관이 승진. 임명되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2005.1.27 A1,A8/1.28 A3)

2005.3(교체 1 명, 해임 1 명)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하고 노 대통령은 수리했다. 2004 년 2 월 임명되기 전에 이 부총리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제대로 조사 또는 확인되지 않았다. 2005 년 2 월에 공직자 재산 변동 내역이 공개되면서 이 부총리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다. 2000 년 8 월 재경부장관 퇴직 당시 25 억 1127 만여원이었으나 2004 년 2 월 재경부장관으로 복귀할 때 부동산 매매차익으로 86 억 3511 만 4000 원으로 경증 뒀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시민단체나 국세청의 고발이 있을 경우 수사 가능성도 있다고 검찰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db.chosun. com 2005.3.8 A1/3.9 A2)

새 경제부총리에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되었다. 발탁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과의 경쟁에서 여러 가지 엇갈린 찬.반의 의견들이 있었다. 첫째는 통상 전문가가 경제수장의 역할을 하기에는 경험이 미숙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2000 년 중국과 마늘협상이 진행될 때

협상의 일부 내용을 은폐했다 폭로되면서 공직에서 물러났다. 셋째는 합리적이며 머리가 좋다라는 평과 동시에 능력 검증이 안 되어 불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혹평에도 불구하고 한 실장이 인선이 된 이유는 장관으로서의 자질보다도 도덕성에서 흠이 없는, '약점 경쟁'에서 타 후보보다 우위의 점수를 받았다. 또한 이해찬 총리가 한 실장의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맥은 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 정우성 외교보좌관과도 경기도 63 회 동기 동창이다. (db.chosun.com 조선일보 2005.3.14 A5/3.15 A3)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의 해임이 된 배경은 한 일간지에서 강 장관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재직 시 처제와 고교 동창이 용유·무의 관광단지 인근 땅을 매입한 것에 강 장관이 개입되었는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 장관은 강경 자세로 부인했다. 이 때를 같이 하여 아들의 인사청탁에 대한 비리가 터져 나왔으며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감사원의 조사를 의뢰한 상태였다. 이에 대응해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지만 특히 아들의 채용청탁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거셌고 여론은 악화되자 청와대도 사임을 고려하는 분위기로 변화되어갔다. 결국, 강 장관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지만 최근 불거진 의혹 때문으로 본다. 한편, 강 장관의 사임에 건교부 직원들은 아까운 장관을 잃게 되어 안타까워했다. (JOINS 중앙일보 인물정보 2005.3.27/3.28)

2005.4(임명 1 명)

강 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의 후임에 추병직 전 건교부 차관이 임명되었다. 추 신임 장관은 89 년 이래로 줄곧 건설부에서 요직을 거쳤으며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대에는 건설교통부의 차관으로 1 년간 재직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17 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총선 과정에서 2600 만원 상당의 響應(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 만원을 선고 받았고 형량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장관후보로 적절치 못한 인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 김완기 인사수석은 공직 임용에 결격 사유는 아니므로 피선거권이 주어졌다고 전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2005.4.5 A1)

2005.6(교체 2 명, 부처의 명칭 변환)

김승규 법무부장관의 교체는 김 장관이 국정원장으로 내정되면서 후임에 천정배 열린우리당 전 원내 대표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천 신임 장관은 96 년 이래로 줄곧 법조계에 경력이 아닌 국회의원직에 경력을 쌓은 정계인이다. 그런 정치인이 장관으로 선택된 이유는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원칙에서 나타난다. 이는 검찰 출신은 검찰 조직의 이해관계 틀 속에서 정책을 펴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첫 내각의 전 강

법무부 장관에 이어 계속 개혁을 추진할 장관으로 검찰출신이 아닌 천 의원을 택한 것이다. 또한 그는 노 대통령과 가깝고 노 대통령의 생각을 잘 아는 사람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실세장관'이라고 전해진다. (db.chosun.com 조선일보 2005.6.25 A6/6.27 A2) (JOINS 인물정보 2005.6.28)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장관직을 그만두겠다고 전했고, 그 스스로도 장관 년 수를 다 해 사표를 제출한다고 밝혔지만 환경부 관계자들은 곽 장관의 사의를 갑작스럽게 여겼다.

신임장관으로 이재용 전 대구 남구청장을 내정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4 월 17 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적이 있어 노 대통령이 배려한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한 근거는 아래에 소개된 노무현이 여당 당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서 밝힌 대로 낙선 인사 기용은 노 대통령의 주축이 되는 영남지역에 자신을 지지할 인재를 기용할 목적이며 지역구도의 극복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과의 인연은 2002 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2004 년 총선 때 열린우리당을 선택함으로 소신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면서 환경부장관 낙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2005.6.27 A1/6.28 A1/6.29 A1,A4)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 당원에게 보낸 편지**

노대통령은 지난해 6 월 열린우리당 당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몸담았던 정당은 영남에서 지지가 없다 보니 명망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선거 때만 되면 인물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당내에서도 자연 소외된다“며 ,경력관리용' 장관 기용의 배경을 설명했다.

(dongA.com 동아일보 기사 DB 2006.3.3. A3)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부 라는 부처 명칭이 2005 년 6 월 23 일 날짜로 여성가족부로 바뀌면서 부처의 새로운 명칭과 더불어 윙임이 되었다.

2005.12(해임 2 명)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부분 개각의 대상으로 청와대 관계자에 의해 밝혀지면서 두 장관은 30 일 공식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내년 초 당으로 돌아가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ab.chosun.com 조선일보 2005.12.28 A1/2006. 1.1 A6)

2.4)2006년도에 해임·임명된 장관

2006.02	2006.03.	2006.04	2006.07	2006.08	2006.09	2006.10	2006.11	2006.12
PM		Han Myeong-sook.....						
FAT	-----							Song Min-soon(67)
GAH	-----Lee Yong-sup(56)-----							Park Myung-jae(68)
FE	-----Kwon O-kyu(61)-----							
Ju	-----Kim Sung-ho(64)-----							
ND	-----Kim Jang-soo(66)-----							
PB	-----Jang Byung-wan(62)-----							
EHR	-----Kim Byong-joon(63)-----Kim Shin-il(65)-----							
CIE	Chung Sye-kyun(51)-----							
CTo	-----Kim Myung-gon(57)-----							
CTr	-----							Lee Yong-sup(69)
ST	Kim Woo-sik(52)-----							
La	Lee Sang-soo(53)-----							
AF	-----							
HW	Rhyu Si-min(54)-----							
IC	-----Rho Jun-hyong(58)-----							
Un	Lee Jong-seok(55)-----							Lee Jae-joung(70)
MAF	-----Kim Sung-jin(59)-----							
En	-----Lee Chi-beom(60)-----							
GEF	-----							
	25,38,31	39,33,15,45,49	46,48,40,42	63	37	28,47	56/69, 51,55	

(목록 2006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51	11	CB	1950	56	KO	U	Ju	AG(5)	00	00	00	00	00	00	00	Po	CIE	
52	25	TN	1940	64	YS	00	Ig	00(0)	00	00	00	00	00	00	00	LF	ST	
53	25	CN	1946	60	KO	00	Ju	Ag(3)	00	00	00	00	00	00	00	Ju	La	
54	16	KB	1959	47	SN	D	Wi	AG(2)	00	00	00	00	00	00	00	Po	HW	
55	11	KY	1958	48	SG	00	Po	00(0)	00	00	00	00	00	00	00	LF	Un	
56	10(24	CN	1951	55	CN	U	Wi	aG(1)	00	00	Al	00	00	00	Pc	Ad	GAH	
57	15	CB	1952	54	SN	00	Pi	00(0)	00	00	00	00	00	00	00	LF	CTO	
58	18	SE	1954	52	SN	00	Ju	00(0)	Vm	00	00	00	00	00	uR	Ad	IC	
59	15	KN	1949	57	SN	U	Wi	00(0)	00	00	Al	00	00	00	uR	Ad	MAF	
60	18	TN	1954	52	SN	00	Pi	00(0)	00	00	00	00	00	00	00	SL	En	
61	20	KA	1952	54	SN	U	Wi	00(0)	00	00	Al	00	00	00	Ps/Pc	Ad	FE	
62	20	CN	1952	54	SN	U	Wi	aG(2)	Vm	00	00	00	00	00	uR	Ad	PB	
63	02	KB	1954	52	YN	U	Po	00(0)	00	00	Al	00	00	00	Ps	Ad	HER	
64	12	KN	1950	56	KO	U	Ju	00(0)	00	00	Al	00	00	00	00	Ju	Ju	
65	18	TB	1941	65	SN	U	P	00(0)	00	00	00	00	00	00	00	LF	EHR	
66	15	KN	1948	58	MUA	00	Mi	aG(1)	00	00	00	00	00	00	Gs	10	ND	
67	14	KN	1948	58	SN	00	Pi	aG(1)	00	00	00	00	00	00	Bo	Pc	Di	FAT
68	14	KB	1947	59	YS	N	Po	00(0)	00	00	Al	00	00	00	uR	Ad	GAH	
69	15 24)	CN	1951	55	CN	U	Wi	aG(1)	00	00	Al	00	00	00	Pc	Ad	CTr	
70	15	TB	1944	62	SN	K	Pi	Ag(1)	00	00	Al	00	00	00	Ur	SL	Un	

2006 년 2 월 (3 명 교체:과기부, 산자부,노동부)(2 명 임명:통일부, 보건복지부)

이번 개각은 측근과 여당 정치인을 포진시킨 대표적 친위(親衛)형, 보은(報恩)인사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민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강력한 혹평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개각이라고 비판되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장관 인사청문회 결과에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으나 청와대 인사수석은 5 개부처 장관들이 중대한 흠결(欠缺)이 없다며 당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며 노 대통령은 장관 임명에 강행했다. 또한 청문회 개정법은 위헌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임명은 정당하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dongA.com 동아일보 기사 DB 2006.1.3 A3 /2.9 A5)(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6.2.11 A1)

이번 개각으로 물러난 이희범 산자부장관의 후임에 이어 새로이 임명된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은 3 선의원으로 여당의 경제통으로 불리 운다. 노무현 대통령과는 1998 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 현장을 함께 방문하며 인연을 맺었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다수 의원들이 전당 대회를 앞두고 당 의장을 장관으로 내정, 발표한 것에 대해 청와대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했다. (dongA.com 동아일보 기사 DB 2006.1.3,A2/A1)

오명 과학기술부 부총리겸 장관의 후임에 김우식 전 대통령 비서실 실장(2004.2-200.8)이 임명되었다. 당시 여권과 야권 또는 보수와 진보간에 중간 역할을 했다는 평이 있다. 청문회 결과 부동산 증액 문제, 장남의 편법 증여 의혹이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전문성 행정 경험 능력 등을 갖췄다는 의견도 있었다. 20 대에 기술직 사원을 시작으로, 주정공장, 상고 출신으로 공대 졸업, 공대 교수에 이어 연세대 총장까지 오른 다양하고 성공적인 경력으로 현정부에서는 이미 차기 과기부 장관 물망에 올랐었다. (donga.com 동아일보 기사 DB 2006.1.3 A2/2006.2.9 A5/ JOINS 중앙일보 인물정보 2006.1.11)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 이유는 청와대가 비 정규직 법안,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등 거둬드는 노동 현안 을 타결 지으려는 일환으로 보여진다. 새로 교체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대표적 보은인사형으로 공.사를 혼동한 최악의 인사로 꼽힌다. 2002 년 대선 당시 당내 입지가 약한 노무현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장을 맡으며 선거자금을 총괄했으나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수감됐었다. 그의 구속은 노 대통령에게 마음의 부담이 되었고 8.15 때 노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사면이

되었다. 사면복권 후 10.26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번 장관 발탁으로 노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지은 신세를 확실히 갚게 된 것이다.

노대통령과의 사적인 인연은 1987년 대우조선 노동자 사망 사건 때 노 대통령과 인권 변호사로 노동자 측을 옹호하다 구속된 전력이 있다.(dongA.com 동아일보 기사 DB 2006.1.3, A3.A2)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5년 12월에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이 새로이 임명되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결과 1.2 개각에서 ‘가장 부적절하다’라는 평가와 더불어 전문성이 부족하며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대통령 마음대로 인사’(강준만, 2011, 12)라는 비난이 있었다. 더욱이 여.야당을 불문하고 반대가 빗발쳤다. 특히 당내 반대는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거셌다. 그에 대한 의혹은 정책개발비 횡령 논란, 학력 및 자격시비, 적십자회비 외면, 말 바꾸기, 국민연금 미납과 관련한 말 바꾸기, 이종으로 배우자 소득공제 등 의문점들이 꼬리를 물었다.

이러한 반발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유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입각시키려는 이유는 유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경력이 있어서 라기 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다. 2002년 노 대통령 대선 과정 시절 때부터 ‘노무현 지키기’에 앞장섰으며 노 대통령의 집권 후에도 노 대통령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유 의원은 노 대통령에게 가장 사랑 받는 의원으로 꼽히고, 유 의원 또한 노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 총리가 유 의원을 복지부 장관으로 제청했다. 유 의원과 이 총리와의 관계는 1988년에 유 의원이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이었다. 두 사람은 서울대 운동권 선.후배 사이이며, 학술문화진흥재단 기획실장으로 밀어준 사람도 이 총리였다.

거론되는 또 다른 이유는 노 대통령, 유 의원, 이 총리의 세 사람 사이가 성격도 비슷하며 형제처럼 서로 밀고 끌어주며 도움을 주는 관계라는 의견도 있었다.

노 대통령은 여당의 반발 배경에는 유시민 개인에 대한 것보다 여당 내 정파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며, 전문성이 있는 유의원이 복지부의 연금개혁 등 갈등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6.1.3 A1.A3 /2006.1.5 A4 /2006.2.7 A6)

전당대회를 앞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이후로 새로운 장관에 이종석 NSC(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차장이 임명되었다.

이종석 신임 통일부 장관은 북한 전문학자로 자주파의 대표적 인물로 과도한 대북 포용정책과 불안정한 한.미 관계의 구도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런 성향 때문에 통일.외교 정책에서 국민들과 합의를 보는데 어려움이 예상될 거라는 의견이 청문회경과보고서에서 제기되었지만 도덕성에 큰 하자가 없어 중간 의견을 찾았다. 발탁배경에 대해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NSC 사무총장직을 맡으면서 참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통합조정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으로 장관을 하며 상임위원장을 겸직 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2003 년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 당시 균형 있는 조정을 이끌어낸 것에 대통령이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dongA.com 동아일보 기사 DB 2006.2.9, A5/db.chosun.com 2006.1.4 A4)

2006 년 3 월(이해찬 국무총리 사퇴)

이해찬 국무총리의 사퇴 배경은 '3.1 절 골프'에서 시작된다.

3.1 절에 이해찬 총리는 한 부산지역 유력 기업가들과 골프회동이 있었다. 이 기업가들의 모임은 처음부터 로비를 위해 결성됐던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 이유는 2004 년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시기에 모임이 결성되었고 조사가 시작된 지 바로 1 주일 뒤에 이 총리와 류 회장이 골프모임을 매개로 만남을 가졌고, 이후 류 회장의 회사는 진행 중인 조사에서 무혐의로 처리됐다.(db.chosun.com 2006.3.11 A4)

조선일보 2006 년 3 월 11 일자 신문에 '3.1 절 골프 회동이 비리와 관련되어 있다' 라고 소개된 부분을 인용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영남제분이 작년 11 월 自社柱(자사주) 195 만주를 일시에 처분, 67 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둬 당시 장외 시장에서 영남제분 주식을 사들인 곳은 기관투자가들인 것으로 10 일 확인됐다. 부산의 한 업체가 '주가 조작'으로 뭉치돈을 만드는 흐름을 중앙의 기관투자가들이 '완성'해준 것이다. 그것도 교직원공제회와 같은 公的(공적)연. 기금이 동원된 흔적이 눈에 띈다. 영남제분 '주가조작'과 로비 의혹이 있는 부적절한 '골프회동'등 모든 과장을 총괄 지휘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이 때문에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과 이해찬 총리, 이기우 교육부 차관, 김평수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등과의 잦은 골프 회동 등 친분관계가 주목을 받는다. '공제회 투자? 주가 상승? 주식 처분? 기관 인수'의 순환 고리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3.1 절 골프 회동 배경이 이 모든 의혹을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db.chosun.com 2006.3.11 A4 기고자: 강훈, 전수용)

결국 영남제분 회사는 주가 조작 및 로비의 의혹을 받게 되었고 이 총리는 골프 접대 및 금품 로비의 의혹 여부로 조사 대상이 되었다.

‘3.1 절 골프 파문’이 더 문제가 커진 이유는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골프 참석자들이 류 회장의 참석을 부인하고 이 총리를 보호하느라 연속적인 거짓말로 문제를 확대시켰다. 또 각각의 참석자들의 말이 각자 달랐다.

조사 과정 시 밝혀진 사실은 이해찬 총리가 3.1 절 골프에 골프장 예약을 가명으로 했고, 비정규 시간에 앞뒤 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이른바 ‘황제골프’를 했으며, 골프를 마친 뒤에는 목욕탕을 단독으로 일행만 이용할 목적으로 목욕중인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이 오니까 서둘러 나가달라고 재촉했다라는 제보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이해찬 국무총리는 ‘부적절한 3.1 절 골프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국 물러나게 되었다. 이기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이 총리를 대신해 골프 파문에 대한 해명에 나섰지만 거짓 해명인 것으로 드러나 차관에 임명된 지 43 일 만에 물러났다.

이해찬 전 총리 경질로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총리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노대통령은 새 총리로 열린우리당 한명숙의원을 지명했다. (db.chosun.com 2006.3.11 A1.A4.A5/3.13

A4/3.15 A1) (dongA.com 동아일보 기사 DB 2006.3.16 A1) (db.chosun.com 2006.3.17 A6/2006.3.25 A1)

2006 년 3 월(교체 4 명, 1 명 해임)

노 대통령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4 명의 장관들과 1 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충남지사의 후보로 출마 확정됨에 따라 신임 행자부장관에 이용섭 청와대 혁신관리 수석이 신임되었다. 발탁배경은 “국세청장 재직 시절 행정 혁신에 높은 평가를 받아 청와대 수석에 이어 장관까지 발탁되었다.”(db.chosun.com 2006.3.3 A2)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경기도지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노준형 현 차관이 장관으로 승진 발탁되었다. 발탁배경으로 “90 년대 이후 굵직한 정보기술 정책을 입안해 왔고 차관 재직 시에는 2 년 연속 정보통신부를 정부업무평가 최우수부처로 이끌었다.” (db.chosun.com 2006.3.3 A2)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신임 장관으로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이 내정되었다. “행정부 내 ‘예산통’으로 청와대 비서관 시절 참여정부의 혁신과제를 정리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db.chosun.com 2006.3.3 A2)

이재용 환경부 장관은 대구시장으로 출마하면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신임장관의 임명은 노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이후로 늦춰지면서 4월에 이루어졌다. (dongA.com 동아일보 기사 DB 2006.3.2 A2/3.3 A1)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6.3.1 A1/3.3 A2)

한편 이재용 환경부장관은 2004년 총선에서 낙마한 뒤 환경부장관으로 재임했고 뒤이어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서 또 떨어졌다. 그런데 전 이재용 환경부장관을 2006년 8월에 청와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의 인사파행의 극치라는 비판이 전해졌다. (강준만, 2011, 108)

정동채 문화부 장관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지만 재임기간(1년 9개월)이 길어 교체대상이 되었다.

후임 장관으로 김명곤 전 국립중앙극장장이 내정되었다. 6년동안 국립극장장으로 재직 시 국립극장을 정부 산하 책임운영기관 중 A등급에 올려놓았고 그 업적을 인정받은 것이 발탁배경으로 보여진다.

장녀의 국립극장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려 학교에 제출토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문회에서 코드인사라는 논란이 있었다. (dongA.com 동아일보 기사 DB 2006.3.2 A2/3.3 A1/3.20 A2)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6.3.1 A1) (JOINS 중앙일보 인물정보 2006.3.22)

2006년 4월(새 총리 임명)

이해찬 국무총리가 3.1절 골프파문으로 사임되고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임명되었다. 한 총리가 임명된 배경을 알아보면, 당초 노 대통령은 두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고심을 했다. 정책을 기준으로 보면 김병준 정책실장을 최근의 정치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한 의원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배경은 다음의 인용문에서 잘 확인되고 있다. “23일 ‘인터넷을 통한 국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총리 인선 문제에 대해 ‘정치라는 것이 개인의 소신만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소신대로라면 정책을 꿰뚫고 있는 김병준 실장을 지명해야 하는데. 소신과 달리 정치 상황을 감안해 한 의원을 지명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6.3.25 A3 기고자 신정록)

한 지명자는 국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국무총리의 책임자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는 전 이해찬 총리가 ‘실세총리’ ‘小통령’이라 말과 상반되는 상황으로 한 신임 총리의 임명으로 청와대 기능은 확대되고 총리실 기능은 축소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재적의원 297명 중 264명이 표결에 참석했고 찬성 182, 반대 77, 기권 3, 무효 2 표였다. 이로써 대한민국 첫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db.chosun.com 2006.3.6 A3/3.25 A3/4.20 A2)

2006 년 4 월(1 명 임명)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이재용 환경부 장관의 후임에 이치범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을 신임 장관자리에 내정했다. “이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2002 년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의 시민사회특보를 지냈고 현 정부 출범에 기여한 공기업 출신 인사들 모임인 ‘청맥회’ 회장을 지내 ‘보은인사’논란이 제기됐다.”(dongA.com 동아일보 2006.3.16 A5) 이때문에 청문회에서 ‘코드 인사’라는 논란도 일었다.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고양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지낸 환경운동가 출신이며 전임 이재용 장관과 가까운 사이이며 이신범 전 의원의 사촌이다. 청문회에서 1999 년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2 천만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일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dongA.com 동아일보 기사 DB 2006.3.16 A1.A5/ 4.6 A8)

2006 년 7 월(교체 3 명, 해임 1 명)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추천으로 인선이 되었다. 그러나 ‘3.1 절 골프 파동’으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교체되면서 한 부총리 역시 재경부 안팎에서 낙마설이 계속 돌았다. 부가적인 해임 이유로 여권 내에서 한 부총리가 리더십이 부족해 정책을 잘 이끌지 못해 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에 패했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db.chosun.com 2006.7.1 A3.A1)

후임으로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교체되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대사로 있다가 지난 4 월 7 일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차관급)으로 발령이 난 이후 바로 5 월 30 일 정책실장(장관급)이 됐고 한 달 만에 부총리에 내정되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은 노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권 내정자를 부총리로 기용할 의도를 갖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게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석달 안에 차관급, 장관급의 고속 승진을 해서 이룬 부총리의 자리는 짜맞추어진 설명에 불과하다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권 실장이 청와대 수석으로 간 것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추천에 따른 것이었으며, 교체된 권 부총리는 강 의장과 경제정책의 라인을 장악하게 되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6.7.1 A1. A3/7.4 A4)

김진표 교육부총리 해임:

취임 시 10 여개 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책임자로 임명되었지만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는 별 다른 진전을 하지 못했다. 초.중등 교육정책에서도 교원평가,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교장공모제 등 각종 정책이 갈등과 반발,

혼선으로 정책을 정립시킬 수 없었다. 특히 자립형사립고와 외고 정책에서 ‘자율과 경쟁’을 주도하려 했던 그가 정권과 전교조의 코드에 맞추어 도리어 ‘평준화’를 이끌었다는 비난이 있었다.

김 부총리는 6 월 중순쯤에 이미 노 대통령에게 임시국회가 끝나면 임기가 1 년 6 개월이 되기 때문에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부총리는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최근에 일어난 급식파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6.7.1 A3/A1)

교육부총리 후임으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되었다. 발탁 배경이 된 여론을 들어보면, 김 신임 장관은 학계 인연자중에서 노 대통령과 가장 깊은 인연을 맺고 있으며 세상을 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을 보는 시각도 비슷해 ‘노무현 정책 코드’라고 불리었다. 이런 이유로 코드인사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노 대통령은 그가 정무적 감각과 판단능력을 갖춘 책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시각과는 달리 교원단체나 시민단체, 전교조에서는 교육계의 여론을 무시한 지명이며 김 내정자를 교육계 비전문가라고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현했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은 그를 교육부총리로 강행 임명했지만 김 내정자의 도덕성이 문제로 불거졌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외고를 졸업한 김 내정자의 딸이 동일계열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것이 문제시되었다. 둘째, 김 내정자가 교수시절 펴낸 저서에서 ‘민초들은 등신’ ‘권력의 거지’등 막말을 한 것이다. 셋째는 가장 문제가 된 내용으로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재직 시 학자로서 도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이는 당시 성동구청장인 신용우 제자의 박사논문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제자 논문 표절 시비가 된 것이다. 또한 동일 논문을 2 개의 실적으로 중복해 연구실적 부풀리기를 한 것이다. 2001 년에는 성북구청장의 박사학위 통과에서 부적절한 거래와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630 만원을 받은 것에 시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외에도 학술진흥재단에서 받은 연구비로 연구한 결과를 다른 기관에 실적으로 올려 이중으로 연구비를 받은 것이다.

학계에 관련되어 다양한 이유로 연일 터져 나오는 의혹으로 도덕성 시비에 휘말린 김 부총리는 언론에 사과나 시인을 하는 대신 합리화와 궤변으로 항변하여 학계 관련자들의 비판을 받았고 자연스레 그의 임명은 정치적 이슈화가 되면서 한명숙 총리는 자진사퇴를 권유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사퇴는 무슨 사퇴’라며 계속 항의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에 한 총리는 해임건의를 통한 사퇴를 알렸고 노 대통령도 ‘사퇴 불가피’ 입장을 정했다. TV 를 지켜보던 시민들 의견도 우호적이던 교원단체들도 김 부총리의 사퇴를 압박했다. 결국,

그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힘을 잃었고 부총리가 된 지 18 일만에 사퇴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6.7.1 A3/7.4 A3,A4/7.6 A8/7.25 A1,A5/7.28 A3,A1/8.2 A3,A4/8.3 A1,A5/8.8 A2)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내정되었다. 부산 출신인 그는 노무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실세 관료로 통해왔으며 ‘준비된 정책실장’이란 평이 많다.. 노 대통령이 당선되자 바로 차관으로 승진하더니 장관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까지 갔다. (db.chosun.com 조선일보 2006.7.1 A3 신정록/7.4 A6)

후임으로 기획예산처차관인 장병완이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내정되었다. 변양균 전임 장관의 적극적인 천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3 년간 재산 100 배 증가한 점을 들어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재산 형성과정에서 집중추궁을 받으면서 도덕성에 논란을 제기하자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이였다. 96 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 만원을 물은 것으로 도덕성 문제도 지적되었다.

발탁배경으로 리더십과 추진력을 갖추었고 당면과제인 복지, 국방 분야의 재정 관리를 하면서 기획예산처를 맡을 책임자로 지목됐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6.7.1 A3 신정록/7.4 A6) (dongA.com 동아일보 기사 DB 2006.7.20 A6) (JOINS 중앙일보 인물정보 2006.7.20)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7.26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직후 장관직에서 물러나 열린우리당으로 복귀하기로 함에 따라 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인선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에 마무리될 것이고 압축된 후보는 인사 검증 절차에 들어갔다 고 알려졌다. (db.chosun.com 동아일보 기사 DB 2006.7.19 A1/7.22 A6)

2006 년 8 월(1 명 해임, 1 명 임명)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사퇴에 따라 그 후임으로 김성호 국가청렴위 사무처장이 지명되었다. 노 대통령 정권에서는 처음으로 검찰 출신 첫 법무장관이 발탁되었다.

노 대통령은 김 내정자가 대구지검장 시절 쓴 부패 관련 책에 감명을 받고 간곡한 부탁을 한 끝에 그를 국가청렴위 초대 사무처장으로 발탁했다.

중앙일보 2006 년 8 월 9 일자에서 개재된 김 신임 장관의 발탁배경에 대해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국가청렴위 사무처장으로 2 년 7 개월 동안 일해오는 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업무 역량과 철학 등을 직접 검증해온 게 발탁 배경”이라고 밝혔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6.8.9 A1,A6/JOINS 중앙일보 인물정보 2006.8.9)

2006 년 9 월(1 명 임명)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퇴임한 이후로 3 명으로 압축된 부총리 후보의 검증에 많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결국 25 일만에 새 교육부 총리로 김신일 전 서울대 사범대 교수가 내정되었다. 발탁배경으로 청와대 인사수석은 “김 교수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산학협력, 평생학습과 인적자원 개발 연계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6.9.1 A1/9.2 A1)

2006 년 10 월(해임 1 명)

윤관웅 국방부장관이 10 월 23 일 노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윤 장관의 사의표명에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윤 장관은 2 년 3 개월간 장기 재직했고,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 문제를 매듭지었다는 점을 사의 배경으로 표명했으나 사실 전시작전권 추진 과정에서 군 안팎에서 받은 비판도 사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6.10.25 A1/dongA.com 동아일보 기사 DB 2006.10.25 A1,A6)

2006 년 11 월(해임 1, 경질 1, 임명 1)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이 단일후보로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추천되면서 10 월 13 일 제 8 대 사무총장으로 공식 선출되었다. 비록 선출되었을지라도 북 핵실험이라는 비상상황을 감안해 돌발사태 시 관련국들과 외교협의를 필요로 하는 자리를 공식으로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당분간 장관직을 유지하다 11 월 10 일 공식 사임했다. 한편, 반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 뒤 배경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반 장관을 후보로 노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렸다는 것이다. (db.chosun.com 2006.10.9 A2/10.14 A1, chosun.com 인터넷뉴스 2006.10.11/11.11)
이에 따라 전개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외교.국방.통일부 장관의 개각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윤관웅 국방부장관의 사임 및 북한 핵실험 이후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관리체제로 외교.국방.통일부 장관에 개각이 요구되었다. 이에 통일부 장관에 이재정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국방장관에 김장수 육군참모총장, 외교부 장관에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 내정되었다. 그러나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이재정 장관 내정자와 송민순 장관 내정자에 대해 ‘친북반미성향’을 이유로 각각 ‘절대불가’ ‘불가’ 판정이 내려지면서 두 장관은 임명이 되지 못하고 ‘무난’ 판정을 받은 김장수 국방부 장관에게만 11 월 23 일 임명장이 수여되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6.11.1 A1/11.23 A5)(chosun.com 프레시안 2006.11.23)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데에는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요청일로부터 20 일이 경과하면 임명장 수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송민순, 이재정 내정자에 대한 임명절차도 다음 달 초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chosun.com 프레시안 2006.11.23)

김장수 신임 국방부 장관은 코드형 인사는 아니지만, 파격인사로 육군참모총장에서 국방장관으로 직행 승진한 유례가 없어서 발탁배경에 의구심을 낳았다.

군내에서 추측 되어지는 발탁 배경은 “육사 30 기까지 군사령관 진출이 가능해 진급 적체를 해소하면서 특정 인사를 발탁하는 물갈이 인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비롯,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려면 3 군중 육군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과 특정지역(광주일고 출신)에 대한 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6.11.1 A3)

인사청문회의 과정에서 서해교전 시 아군 사상자 수(24 명)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한반도 주변 4 강 국방장관의 이름을 몰라서 국방후보자 자질로서의 논란이 있었지만 청문회 평가가 ‘무난’으로 판정되면서 11 월 23 일 공식 임명되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2006.11.17 A4) (chosun.com 프레시안 11.23)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신도시 조성 사실을 성급하게 발표해 시장교란을 심각하게 야기시킴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문책을 당하는 등 한명숙 국무총리에게도 강한 질책을 받았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 모두 추 장관의 교체를 주장했다으며 악화된 여론을 이기지 못했다. 결국 신도시 개발과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인정을 하며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 그러나 사표 수리는 후임이 결정되는 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편 추 장관의 교체는 자발적 사의표명인 형식으로 취해졌지만 정책 실패에 따른 문책성 경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이 청와대를 향해 추 장관의 경질이 결국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반문하자,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추 장관 스스로의 언행 및 정치공세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6.10.28 A5/11.14 A1, A4/11.15 A1/11.17 A1) (chosun.com 1 등 인터넷뉴스 2006.11.14) (미디어다음, YTN 2006.11.15)

2006 년 12 월(임명 2, 교체 2, 해임 1)

새 외교통상부 장관은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임명되었다. 당시 북한의 핵실험 사태가 최대 사안이었으며 이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송 실장이 적임자라고 다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의 의견과는 달리 송 후보의 임명 반대가 정치권에서 처음부터 제기되었다. 송 실장은 최근 ‘미국이 전쟁 가장 많이 한 나라’라는 발언을 해서 한.미 관계의 갈등을 유발했고 이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해명을 요구 받는 등 ‘친미’에서 ‘반미’로 바뀐 듯한 그의 태도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원들 사이에 쟁점이 되었다. 그의 안보성향이 반미주의로 바뀌기 시작한 기점은 2005 년 차관보에서 차관을 건너뛰어 바로 장관급인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파격 승진 되면서부터이다. 그때부터 송 실장이 출세의 줄에 서기 위해 노 대통령의 코드에 맞춘 것으로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는 정치권의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흐름과 송 후보의 파격 승진은 노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이 있었고 그로 인해 정치권의 반대기류에도 불구하고 송 실장이 장관으로 발탁되었다며 ‘배려인사’라는 논란이 있었다. “한나라당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의 친북 반미 코드에 충실한 인물로 균형 감각이 결여돼 있다’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가’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기속하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dongA.com 동아일보 기사 DB 2006.11.21 A5)

결국 12 월 1 일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공식 임명되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6.10.25 A5/10.27 A6/11.1 A3/11.2 A6/11.17 A4/12.1 A2)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장관으로 임명될 때부터 ‘사상 편향’으로 문제가 되었고 대북관계에 문제가 될 때 마다 그의 이념은 논란이 되어 임명 8 개월 만에 해임되었다. 대북관계에서 여론이 악화된 사건은 5.24 일 경의선. 동해선 열차 운행을 북측이 갑자기 연기하면서 정부와 통일부가 북한을 오판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최대 위기는 7 월 5 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 월 9 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자신의 사퇴배경이 정책적 실패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돌렸다. 우선 대북정책의 핵심인물인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 중심이 되면서 외교안보라인의 인사들이 다 바뀐 것에 부담이 있었던 것이다.

이 장관은 노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외교 안보 정책자의 ‘실세 중의 실세’라는 평을 받았지만 북한 핵실험 뒤 노 대통령은 이 장관과의 면담 횟수도 줄어들면서 둘 사이의 거리가 확연히 멀어졌다. 사의를 수락한 노 대통령은 북 핵실험 후 대응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한 문책의 성격도 있고 바뀐 외교안보 부처 간의 팀워크를 감안해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 장관은 10 월 24 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12 월에 이임되었다. (JOINS 중앙일보 인물정보 2006.10.25/10.26)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6.10.26 A4/2006.12.6 A6)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유력해지면서 코드형 인사로 보은인사라는 비판 속에 강행되었다. 이재정 신임 장관은 성공회 신부 출신으로 2002 년 대선 때 노무현 선대위 유세위원장을 맡으면서 한화그룹으로부터 10 억원을 받아 노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었다. 2 심에서 풀려나긴 했지만 노 대통령에게는 부담스런 은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으로 보은인사라는 지적이다. 국회 청문회에서 이 내정자는 ‘친북좌파’로 판정을 받게 되었다. “한나라당이 이 내정자를 친북좌파라고 규정한 직접적인 이유는 17 일 인사청문회에서 6.25 전쟁이 남침인지에 대해 ‘여기서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 ‘북한의 인권 유린이나 불법 행위의 증거가 없다’고 한 그의 발언 때문이다.”(dongA.com 동아일보 기사 DB 2006.11.21 A5) 8 개 시민단체에서도 그의 이념 성향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수준으로 보고 이 장관의 내정을 반대하는 입장 발표를 했다. 한나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적격 여부의견만 낼 수 있을 뿐 인준 표결 규정은 없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막을 수 없다.”(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6.11.21 A1)

이러한 문제로 임명이 늦어졌지만 12 월 중순에 결국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이임되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6.11.1 A3/11.21 A1/12.6 A6, dongA.com 동아일보 기사 DB 2006.11.21 A5)

이용섭 신임 장관은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연임되면서 건설교통부의 장관에 이임되었다. 발탁배경의 핵심은 이 내정자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국세청장을 지낸 세제 전문가로 정부가 건설교통부 장관 자리에 세제 전문가를 기용한 것은 부동산 투기및 수요 억제

의 제어장치로 ‘세금공세’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신임 장관은 초대 국세청장을 시작으로 대통령혁신관리수석비서관, 행자부 장관에 이어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두번째 장관직을 맡게 돼 대표적인 ‘회전문’인사라는 지적이다. (dongA.com 동아일보 기사 DB 2006.11.24 A2)

>>>회전문 인사란, 일부인사가 주요보직을 돌아가면서 맡는다는 뜻으로 "공직 퇴임뒤 민간기업, 단체 등에서 활동하다 다시 공직에 발탁되는 경우"를 말한다

http://krdic.naver.com/search.nhn?dicQuery=%ED%9A%8C%EC%A0%84%EB%AC%B8+%EC%9D%B8%EC%82%AC&query=%ED%9A%8C%EC%A0%84%EB%AC%B8+%EC%9D%B8%EC%82%AC&target=kr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x=0&y=0 (네이버 사전 2013.2.6)

박명재 신임장관은 이용섭 행자부 장관이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이임되면서 행자부 장관자리에 임명되었다. 박 내정자는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 후로 ‘행자부 장관 후보 0 순위’로 거론 되면서 대표적인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다. (dongA.com 동아일보 기사 DB 2006.11.24 A2)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사의 표명에 대한 발언으로 정부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다 했으며 그동안 밝혀온 대로 열린우리당으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chosun.com 1 등 인터넷뉴스 2006.12.29/12.30)

2.5) 2007년도에 해임.임명된 장관

	2007.01	2007.03	2007.04	2007.05	2007.06	2007.08	2007.09	2008.02
PM			Han Duck-soo.....					
FAT	-----							
GAH	-----							
FE	-----							
Ju	-----						Chung Soung-jin(76)-----	
ND	-----							
PB	-----							
EHR	-----							
CIE	Kim Young-joo(71)-----							
CTo	-----			Kim Jong-min(72)-----				
CTr	-----							
ST	-----							
La	-----							
AF	-----					Im Sang-gyu(75)-----		
HW	-----				Byun Jae-jin(74)-----			
IC	-----						Yoo Young-hwan(77)-----	
Un	-----							
MAF	-----			Kang Moo-hyun(73)-----				
En	-----						Lee Kyoo-yong(78)-----	
GEF	-----							
				57,54,59		64,43,58	60	67,68,61,76,66 62,65,71,72,69 52,53,75,74,77 70,73,78,50

(목록 2007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71	13	SE	1950	53	SN	U	So	00(0)	00	00	00	00	00	00	Ps	Ad	CIE
72	09	TB	1949	58	SN	U	Ju	00(0)	Vm	00	00	00	00	00	00	Ad	CTo
73	10	KA	1951	56	YS	G	Pi	00(0)	Vm	00	00	00	00	00	00	Ad	MAF
74	09	KN	1953	54	SN	U	Wi	00(0)	Vm	00	00	00	00	00	00	Ad	HW
75	07	CN	1949	58	SN	U	Po	00(0)	Vm	00	Al	00	00	00	uR	Ad	AF
76	06	KB	1940	67	SN	00	Ju	00(0)	00	00	Al	00	00	00	Ur	Ju	Ju
77	06	SE	1957	50	Ko	U	Wi	00(0)	Vm	00	00	00	00	00	00	Ad	IC
78	06	SE	1955	52	SN	00	Ju	00(0)	Vm	00	00	00	00	00	00	Ad	En

2007 년 1 월(임명 1 명)

정세균 산자부장관의 후임으로 김영주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되었다. 노 대통령의 비서실 정책기획수석, 경제정책 수석을 거쳐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는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도 잘 파악하며, 일 잘하는 '특 A 급 공무원'으로 통한다. 정 내정자의 철두철미한 업무와 탄탄한 관료행적은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매일 새벽예배 생활이라고 전한다. 산자부 부처의 장관자리에 경제.기획원 출신의 관료가 내정되었지만 검증된 그의 능력으로 임명 과정 시 아무런 논란이 없었다. (chosun.com 1 등 인터넷 뉴스 2007.1.5)(dongA.com 주간동아 2007.1.16 569 호 p8)

2007 년 3 월, 4 월(국무총리 교체)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겠다는 방침을 굳히면서 열린우리당 출신인 한명숙총리가 교체되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한 총리 본인이 당 복귀 의사가 강해 교체가 된 것이라고 하는 반면에 여당의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한 총리의 업무 장악력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 총리가 총리직을 포기하면서 당 복귀를 하는 이유는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갈 계획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신임 총리의 인선 기준은 '실무 행정형 총리'로서 임기 말까지 국정 운영을 잘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후임으로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가 내정되었고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는 여러 반응이 엇갈렸지만 의원총회에서 한 총리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업무 수행에 따른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자유투표로 표결에 참여키로 했다. 임명동의안이 무기명 투표 표결에 국회의원 270 명이 참석, 찬성 210 표 반대 51 표 무효 9 표로 통과됐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7.2.22 A1.A4/3.6 A8/4.3 A1) (chosun.com 1 등 인터넷뉴스 2007.3.5 /연합뉴스 2007.3.9)

2007 년 5 월(2 명 교체, 1 명 해임)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의 교체 이유로 모두 그만두겠다는 본인의 의사가 있었다며 두 장관 모두 경질성 개각이 아니 라고 청와대 박남춘 인사수석은 전했다. 또한 맡은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도 했고, 새롭게 일을 맡아 할 후보자자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라고 박 수석은 교체 이유를 밝혔다.

교체되는 두 장관의 새 기용자들은 내부 전문가들로, 업무 연속성을 기할 수 있는 분들을 발탁했다. 김종민 문화관광부 내정자는 옛 문화체육부 차관을 지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관, 수산정책국장, 해운물류국장 등 해수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dongA.com 실시간뉴스 2007.4.19)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법 개정에 직면해 4 월초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노 대통령은 사의 수용을 유보했다. 이는 국민연금법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제약산업의 FTA 영향이나 의료법 전면개정안 등이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 월 21 일 유 장관은 그 동안 장관으로서 맡아왔던 주요 정책들이 대체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뜻을 전했고 노 대통령은 사의를 수락했다. (chosun.com 1 등 인터넷뉴스: 이데일리 2007.4.9/연합뉴스 2007.5.21)

2007 년 6 월 (1 명 임명)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후임으로 변재진 현 차관이 내정되었다. 그는 복지부에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로 온화한 성품으로 상사는 물론 부하직원들 사이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또한 합리적인 사고로 업무처리에서도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 발탁배경으로는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 복지부에서 이미 진행 중이거나 미결된 정책의 내용을 알고 있는 내부 직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복지부 차관을 내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복지부 현안인 국민연금법 및 의료법 개정에 적합한 인사라는 평을 받았다.(chosun.com 1 등 인터넷뉴스 2007.5.23 이지혜 기자/이데일리 5.23)

2007 년 8 월(2 명 해임, 1 명 교체)

김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은 김 장관의 발언이 정부나 노대통령에 반대 되는 입장으로 이미 수개월 전부터 문제가 되어온 데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김 장관은 외부강연에서 현 경제 정책의 라인과 다른 ‘친기업적’ 발언을 했다. 특히 경질의 주된 배경이 된 발언은 노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었을 때 노 대통령이 ‘선거법 9 조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조항’이 “위헌”이라고 한 것을 김 장관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국회 법사위 답변에서 발언을 한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노 대통령 측에게 불리하고 당혹스러운 반면 한나라당에게는 유리한 기세를 준 것이었다. 본인의 소신대로 거침없이 한 그의 발언은 청와대의 코드와는 맞지 않았고 공직사회의 기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청와대는 판단했다. 경질설이 여론에 보도 되자 김 장관은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 법무장관에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이 내정되었다.

(chosun.com1 등인터넷뉴스 2007.8.7/8.6 연합뉴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밝힌 사의 표명은 '정통부의 주요 현안에 대한 방향이 정리되었고, 유능한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며, 민간인으로 쉬면서 새로운 일을 모색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 장관의 사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돌연 사의 표명이라 정통부에서는 의아해했다.

박홍수 장관의 사임 또한 갑작스러웠고 특별한 사임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한편, 박홍수 농림부 장관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의 사임은 특별한 요인이 없어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임기 6 개월을 남겨두고 기존 장관들을 밀어내고 신세를 진 인사들에게 장관자리의 기회를 주려는 '마지막 보은 인사'라는 분석이다. (db.chosun.com 1 등 인터넷뉴스 2007.8.7 김종호, 안용현 기자/8.6 연합뉴스)

신임 임상규 농림부 장관

"내정자는 현 정권에서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 초대 본부장을 하면서 노 대통령 눈에 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는 발탁 배경으로 '새만금특별법 수정안 마련 등 농정관련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chosun.com 1 등 인터넷뉴스 2007.8.9 신정록 기자)

2007 년 9 월(2 명 임명, 1 명 교체)

신임 법무부 장관에 국가청렴위원장 정성진이 발탁되었다. 93 년 부인 서씨의 고액 재산으로 검찰직을 떠난 이래로 2004 년에 장관급인 청렴위원장으로 공직의 자리에 돌아오게 되었고, 현 정부의 개각때마다 법무장관의 하마평(下馬評)에 올랐다.(dongA.com 주간동아 2007.8.7 597 호(p11) (chosun.com 1 등 인터넷뉴스 2007.8.9 신정록)

신임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은 정통부 차관에서 발탁이 되었다. 2003 년 IT 정책의 근간이 'IT 839'전략을 입안. 정통부의 '정책통'으로 불린다. (chosun.com 1 등 인터넷뉴스. 2007.8.9 신정록)

이치범 환경부장관이 대통합민주신당 이해찬 전 총리 캠프로 가기 위해 사퇴를 표명했다. 후임에 이규용 환경차관을 승진. 발탁했다.(dongA.com 실시간뉴스 서울 연합뉴스 2007.9.4) (chosun.com 1 등 인터넷뉴스 2007.8.31. 연합뉴스)

***2007 년 들어서면서 당시 내각에서 20 명중 15 명이 관료 출신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임기 말에는 조직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한 듯, 해당 부처 차관이 곧바로 장관으로 발탁된 경우가 많았다. (dongA.com 실시간뉴스 서울 연합뉴스 2007.9.4)

2008 년 2 월(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종료에 따른 기존 장관들의 교체)

2008 년 2 월 24 일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통상적으로 그 동안 정권 교체기에 기존 장관들은 새 대통령 취임 며칠 전 사표를 내고 이.취임 시점에 맞춰 수리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구 내각의 교체가 여야간 정부조직개편 협상 결렬로 이.취임 시점에 이뤄질 수 없게 되었다. 이명박 당선자가 임명한 새 장관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전 정권의 장관들이 장관직과 국무위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새 정부가 내각을 통.폐합해서 13 부처의 장관과 2 명의 특임장관으로 구성돼 15 명의 국무회의 최소 구성요건을 간신히 채우고 있는데 새 정권의 후보자(여성.통일.환경부)가 사퇴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3 월 3 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참석 대타를 위해 전 노 대통령의 장관을 유임키로 했다. 사퇴한 해당 장관 중 통일부의 이재정 장관은 친북성 발언 논란이 있어서 제외시키고, 여성부의 장하진 장관은 새 정부와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반응으로 유임에서 제외되었다. 대신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이규용 환경부 장관 3 명을 국무위원으로 유임시켰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8.2.19 A2,A1/2.20 A1,A3/2.29 A4)

3.해임 배경이 된 정치적, 사회적 배경

: 이 부분에서 배경을 설명하는 방법은 그 사건을 간단 요약하고 소관 장관이 해임이 된 배경에 중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기로 한다.

3.1) 2003 년 7 월 ('새만금 간척사업' 잠정 중단 법원 결정)

:김영진 농림부장관의 해임에 관련

새만금 사업은 정부가 13 년간 1 조 4000 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완공을 앞둔 대형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이 환경오염의 피해에 관한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강영호 담당 부장판사가 '새만금 간척사업' 잠정중단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담당판사가 주된 근거를 둔 판결은 새만금의 수질오염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현재 상황으로는 4 급수 수질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 중단의 법원결정에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들은 우려를 표시하며 당황스러운 결정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반면에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이라며 찬반 법리 논란을 벌였다.

전북 부안군과 전북 사회단체 대표들은 은 새만금사업 중단에 대한 항의를 하며 전주 전국체전을 포기하고,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유치를 철회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에 따라 전북 부안군민들은 ‘초. 중학생 자녀 등교 거부 투쟁’에 들어가 원전수거물센터 유치 신청 철회집회를 벌이며 부안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또한, 이번 결정을 이끌어내며 환경단체를 옹호한 정권 관계자인 한명숙 환경부장관, 이창동 문화부장관, 허성관 해양수산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영진 농림부장관은 전체 국민의 70%가 친환경적 개발에 찬성하는 새만금 사업을 절대로 중단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법원의 결정에 반발, 사표를 제출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3.7.17 A1,A5,A4)

3.2). 2003 년 7 월 (철도파업)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의 해임 관련

철도파업은 최 장관이 장관 재직 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지만 그 문제로 최 장관의 직접적인 해임배경이 되었다는 설명은 없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정부의 철도개혁법안은 민영화를 목표로 했지만 노 대통령 집권 초기에 친노(親勞)성향인 대통령직 인수위의 제안에 따라 ‘공사화’로 전환되었다. 또한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어 ‘100% 고용 승계와 근로조건.정년 등의 불이익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공사.공단 직원이 되면 급여가 10-20% 오르고 비용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최근 5 년 3 조 194 억원의 영업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었고, 현 상태로 2020 년까지 고속철 건설부채 상환을 포함해 추가로 50 조원이나 쏟아 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철도를 국영체제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구조개혁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공사로 전환되더라도 고속철도를 포함한 건설 부채 (총 11 조 1000 억원)의 국가 승계와 공무원연금을 승계 가능하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의 승계는 현행법상 근무 연수 20 년이 안 된 공무원은 수령 자격이 없으며, 20 년이 넘어도 33 년에 미달하면 퇴직 후 연금은 받지만, 공무원으로 남는 것에 비해 다소 불리하다. 이 때문에 공무원 신분 상태로 남도록 처리해 달라는 것이며, 이는 조합원들을 최대한 파업 참여로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연금법의 근간을 흔드는 특례 요구로 향후 다른 업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고속철도 건설 부채의 인수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전반적인 요금 인상의 원인이 되므로 건설교통부는 반대했다.

정부는 그 동안 철도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시도한 구조개혁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무리하다고 판단해서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국회 입법사법위원회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국회에서 의결이 예상됨에 따라 “입법화 자체를 중단하고, 강행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라”는 요구를 하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수도권전철은 평소의 58%,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30% 등 전체 평균 43% 운행에 그쳤으며 서울 곳곳에서 철도뿐 아니라 도로에서도 정체현상과 출근대란이 벌어졌다. 화물열차 운행률 역시 28 일 평소의 33%, 29 일 10%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특히 시멘트 수송 등의 차질로 물류대란이 우려되며 건설공사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했다. 열차 운행 취소가 잇따르면서 서울역에서 162 편의 열차 중 34 편만 운행되었다. 물류수송 차질로 수출화물에도 피해가 확산되었다.

29 일 정부는 최종 업무복귀에 응하지 않은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파면, 정직(停職)등 중징계 조치를 밝히며 경찰력을 투입하며 초강경 대응을 했지만 노조측은 대 정부 투쟁을 천명하며 노.정 대치 양상을 보였다. 민노총은 성명을 통해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불법파업은 사법처리 대상이며 노조와 타협하지 않았다.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노조 집행부와 파업 주동 적극 가담자는 사법 처리하고 파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은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나치게 적정 수준을 넘으면 반발 소지가 있다면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적절하게 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db.chosun.com 2003.7.2 A1)

30 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자 더 이상 파업할 명분을 잃게 되자 노조원들 사이에서 갈등 조짐이 보이는 등 일부 노조원은 불안감을 느끼며 업무 복귀의사를 보였다. 미 복귀 조합원들에 대해 정부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고 총 624 명을 직위 해제하는 등 초강경 자세를 취하자 파업 나흘째에는 철도노조가 조건 없이 파업을 철회했다.

한편, 인천지하철 파업을 주도해 지하철공사에 4 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노조위원장 등 4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결국 나흘 동안의 파업은 7 월 1 일 전 조합원의 즉각 복귀로 노조의 대정부 투쟁은 끝이 났다.

“철도청은 7 월 18 일.....노조 지부장 급 간부 40 명을 심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책임을 물어 18 명은 파면, 7 명은 해임, 15 명은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종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은 조합원은..... 징계대상은 조합원 9888 명의 무려 87%인 8648 명에 이르며, 철도청은 매주 2 차례씩 징계위를 열어 100 명씩 처리될 예정이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2003.7.19 A6)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3.6.28 A1,A6/6.30 A1,A3,A4,A9/7.1 A1,A3,A4,A9/7.2 A1,A3/7.3 A7/7.5 A10)

3.3) 2003 년 7 월 (전북 부안군 방사성폐기물 시설 단독후보지로 결정 - 주민들 반대. 과격 시위):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해임 관련

2003 년 7 월 11 일 전북 부안군이 방사성 폐기물(이하 방폐물) 관리시설 유치를 단독으로 신청하면서 15 일 단독후보지로 결정되었다. 1986 년 이래로 정부가 건립을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20 여년 묵은 최장기 국책 미제(未濟)사업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된 셈이다.

유치 후보지로 선정된 전북 부안군 위도는 부안군 격포항에서 14km 떨어진 전북도 내 최대 규모의 섬이다. 다른 지역이 반대하는 방폐물 시설 유치를 전체 유권자 1200 여명 중 978 명이 유치에 찬성한 가장 큰 배경은 경제적 반대급부이다. 후보지로 결정될 경우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역발전 기금에 관심을 갖은 위도 주민들은 지역 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유치를 자발적으로 신청했다.

위도 주민들이 '개발과 보상'을 기대하며 핵폐기장을 환영하는 반면에, 육지의 부안군민은 정부의 투자유발효과를 믿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새만금 공사 중단 결정까지 내려져 위도 폐기장 유치 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 때문에 17 일 부안군민들은 후보지 신청 철회를 주장하며 군 청사로 진입하려는 100 여명의 군민들이 이를 막는 전경 15 개 중대와 대치하게 되는 등 초.중학생 자녀들의 등교를 막았다. 반대의견은 한의사회와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으로 확산되면서 19 일 400 여 군민이 참가해 집회를 가졌다. 22 일에는 반대 집회가 과격 시위로 돌변하면서 참가자 6 천여명이 군청사에 돌, 각목, 젓갈 등을 던져 시위대와 전경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고 청사 유리창이 깨졌다.

계속되는 주민들의 유치 반대 시위에도 전북 부안군수는 유치 방침을 유지했고 산자부 또한 위도를 방폐물 처리장 부지로 24 일 최종 확정했다. 부안 군민들은 "주민 의견수렴과 합의가 없는 방폐장 부지 확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계속했다. 26 일에는 주민 7 천여명이 집회를 열어 행진. 성토대회, 촛불시위를 벌였다.

29 일 정부는 위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 현금 지원은 하지 않고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했다. 대신, 위도를 떠나려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주대책비 지원 등 각종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위도 주민의 상당수는 현금 지원을 요구했다. 사실 방폐장(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가 위도로 확정 발표된

이후 보상을 노리는 전입자들이 390 명이 증가했다. 정부의 현금 보상 불가 방침에 위도 주민들은 뒤숭숭해졌다.

‘핵폐기장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촛불시위 행진은 8 월까지 계속되며 13 일에는 3 천여명이 참석해 김종규 부안군수 퇴진 등을 요구했다. 지난 7 월 31 일에 이어 8 월 21 일에는 변산면 격포항에서 집회를 벌이며 300 여척의 각종 어선에 나누어 타서 해상시위를 벌이는 등 주민 100 여명이 한꺼번에 바다에 뛰어들기도 했다. 9 월 8 일에는 부안군수가 부안군민들로부터 집단으로 폭행당해 6 주 진단을 받았다. 9 월 중순에는 부안지역 학생 1,500 여명과 학부모 500 여명등이 ‘등교거부’결의대회를 열었다. “부안지역 학교운영위원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장관들이 약속을 어기고 군수 폭행 사건을 빌미로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공포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chosun.com 1 등 인터넷뉴스 2003.9.15 부안 연합뉴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주민들의 시위와 반발은 도가 지나치고 공권력을 무력화 시킬 정도라며 시위문화 정립을 위해서라도 엄단 처벌 방침을 지시했다. 시위의 제지를 강도 높게 받게 된 주민들은 소극적 폭력에서 점차 화염병 투척과 공공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반발이 거세졌다.

결국 12 월 12 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핵폐기물처리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안 사태등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db.chosun.com 2003.7.12 A6/7.15 A1 ,A10/ 7.16 A8/7.17 A6/7.24 A8/7.25 A1,A4/7.26 A8/7.30 A1/7.31 A4) (chosun.com 1 등 인터넷뉴스 부안 연합뉴스 2003.7.19/7.22/8.10/8.13/8.21/9.9/9.15/11.21)

3.4). 2003 년 8 월 (한총련 사태 발발)

: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 관련

2003 년 8 월 7 일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전국에 분포된 미군 부대에 계획된 반미시위를 동시에 기습적으로 벌였다. 미 8 군 영평 종합사격훈련장 앞에서 한총련 학생 12 명은 ‘한반도 전쟁 반대’ 및 ‘미군 철수’등의 구호를 외치며 부대 안 50m 지점까지 진입 해 성조기를 불태웠다. 서울에서는 한총련 소속 대학생 30 여명이 을지로 5 가 주한미군 극동 공병단 앞에서 페인트병을 정문에 던지는 등 시위를 벌였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국토순례’중이던 한총련 대학생 260 여명이 미군 공군기지 앞까지 행진을 하며 ‘선전전’을 벌였으며, 충북 청주에서도 250 여명이 유인물을 나눠주며 시위를 벌였다.

주한미군은 이번 사건을 위험한 수위로 판정하고 관련자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며 유감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심각하게 다루었다. 정부관계자들도 한.미 관계를

우려하여 한총련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그 동안 추진해온 한총련 합법화 논의를 재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핵심 인사들의 한총련에 대한 기본 시각을 문제삼아 “노 대통령과 정부의 비호 아래 김정일 노선을 추종하는 일부 과격단체들이 나라의 안보와 민주헌정체제를 흔들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이 노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3.8.11 A3)

또한 한나라당은 한총련이 미군을 기습한 점과 한나라당 당사(목표,대구시,전남도,전북도,부산시,원주시등)가 한총련의 습격을 받은 점에 대해 시위를 예방.저지하지 못한 경비책임을 물어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3.8.8 A1/8.9 A3/8.11 A1,A3/8.13 A2/8.20 A2) (chosun.com 1 등 인터넷뉴스 2003.8.8)

3.5). 2003 년 9 월 (태풍 매미가 남부지역을 강타)

: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과 관련

사상 최고의 강풍으로 폭우를 동반한 제 14 호 태풍 ‘매미’가 추석 연휴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을 강타하면서 곳곳에 피해가 심각했다. 해일과 산사태로 교통망이 무너지고 사망자와 실종자가 생기고 건물과 가옥이 초토화 되고 논과 과수단지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농림부 조사에 의하면 농작물 침수 3 만 258ha, 비닐하우스 1,156ha, 인삼시설 32ha, 축사 232 동, 가축폐사 21 만 6000 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3.9.15 A5 박종세 기자)

산업계가 밀집된 영.호남지역이 큰 타격을 받았고, 특히 부산항은 완전 복구를 위해 1 년이 걸릴 것으로 수출 차질에 비상이 걸렸다. “중소기업청은 619 개 중소기업이 282 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부산 녹산공단에서는 220 여개 업체가 해일로 인해 물에 잠겼으며.... 설비들이 염분에 부식돼 못쓰게 되면 피해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특히 석유화학업체가 몰려 있는 울산단지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액이 100 여억원이고, 생산차질 액은 355 억원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db.chosun.com 조선일보기사 DB 2003.9.15 A5 장일현,이길성기자)

남해안 어촌은 양식장.어선.어구.집.상가등 생계수단이 태풍과 해일에 휩쓸려가거나 부서졌다. 경남지역에서만 수천억원대의 피해액을 입은 것으로 예상되었다. 울릉도는

방파제 7 곳과 접안시설과 같은 항만시설 4 곳이 손실돼 모두 43 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78 동의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16 일 오후 4 시 현재 전국 재산피해액이 1 조 8540 억원, 인명피해 126 명(사망 104 명, 실종 22 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db.chosun.com 조선일보기사 DB 2003.9.17 A2 이항수)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총 피해액이 1 조 5000 억원을 넘으면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가능하므로 김두관 행자부장관은 피해조사를 벌인 뒤 24 일쯤 선포할 것이다.그러나 피해규모는 당초 예상을 넘어 3 조 4601 억원(신고액)으로 집계되었다.한편, 미국과 일본은 각각 5 만달러와 12 만여달러의 구호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3.9.14 A1/9.15 A5,A8/9.16 A1/9.17 A2,A8,A5 /9.19 A2)

3.6). 2003 년 11 월(대학 수학능력 시험 복수 정답 파문)

: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해임 관련

수능시험에서 언어영역 17 번 문제에서 정답이 3 번으로 결정되어 채점이 된 후에 5 번도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제기되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들은 복수정답을 인정했다. 그로 인해 수능의 공신력이 훼손되고 3 번 정답을 쓴 학생들이 교육부를 대상으로 ‘복수 정답 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지만 기각 결정되었다.

한편, 3 번 정답에 이의를 제기해 복수 정답 파문에 시발점이 되게 한 수험생은 최 모 교수의 딸이었고, 3 번 정답자의 일부 네티즌은 최 교수를 비난하기도 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3.11.24 A10,A1/11.25 A12/11.26 A8/11.27 A8/12.2 A10/12.11 A10) (chosun.com 1 등 인터넷뉴스 2003.12.17 서울 연합뉴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해임 관련

전국 1 만 1000 여 초·중·고교와 시·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를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해 학교 교육과 행정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03 년 개통됐다. 대입 전형 등 각종 입시 자료로 활용된다. 교사들이 학생의 성적·출결 등을 입력하며, 학부모가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다. (1 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포커스 <http://focus.chosun.com/sajun/keyword/keyword.jsp?id=1255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27 개 영역 중 문제가 된 3 개 영역(교무.학사, 보건, 진학.입학)을 분리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이는 학생들의 예민한 개인정보이므로 학교 이외에서 관리하는 것은 인권의 침해라고 인정되어 이 자료를 교육부나 교육청이 보고 저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ongA.com 팝업-실시간뉴스 2003.12.15 홍성철기자)

**학교 생활기록부 CD 롬 파동

: 윤덕홍 교육부 부총리 해임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가 담긴 CD 롬은 대입 전형시 각 대학이 NEIS 을 통해 전산자료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NEIS 의 오랜 쟁점이 된 학생들의 인권침해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면서 교육부와 전교조사이의 갈등을 낳게 했다.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CD 롬 제작 중단을 요구하며 법적인 수단을 취했고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에 따라 각 대학은 정시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출신학교 코드 등이 수록된 명부를 갖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나 인근 시도교육청에 마련된 지역센터를 방문해 자원자의 학생부 자료만을 다운받을 수 있다. 한편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교육부가 CD 롬의 배포 방법만 바꾸었을 뿐 학생들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 활용한 것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dongA.com 팝업-실시간뉴스 2003.11.28 홍성철기자, 김수경기자/12.3 홍성철기자)

3.7) 2004 년 2 월 (이라크 파병안 국회 통과)

: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해임 관련

(직접적 해임배경이 된 점은 일명 ‘외교부 사건’이고 윤 장관의 해임란에 자세히 설명됨.)

2003 년 9 월 4 일 미국이 한국에 이라크 파병을 요청하면서 정부는 10 월 18 일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

정부의 파병 결정에 전국 곳곳의 일부 시민 사회단체들이 파병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추가 파병 당시 반대 운동과 함께 파병 찬성 의원에 대한 총선 낙선 운동을 병행하게 되면서 각 정당은 추가 파병을 적극적으로 찬성 할 수 없는 입장에 서면서 국회의 파병 동의안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었다.” (우경림 2010, 54-55) 악화된 국민의 여론에 이어 11 월에 이라크 국회조사단이 목은 호텔이 피격되고, 오무전기 직원이 피격되어 2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면서 정부의 파병에 연속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12 월 2 일에 현지탐사를 마친 조사단은 ,지역담당 독립부대’를 제안했고 노대통령은 국회조사단의 협조로 파병반대의 확산을 차단하며 17 일에 3000 명의 독자적 지역담당 혼성부대를 추가 파병하는 최종적인 안을 확정했다. 파병기간은 2004 년 4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연장이 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12 월 말까지 소요될 파병비용은 2300 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2004 년 2 월 13 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1 명 가운데 212 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5 명, 반대 50 명, 기권 7 명 등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추가파병안을 가결시켰다” (dongA.com 팝업-실시간 뉴스 2004.2.13 연합뉴스)

자이툰부대로 명명된 파병군은 전후복구 지원과 구호활동, 평화정착과 재건 지원, 이라크 자치행정기구 기능 발휘 지원 등의 임무를 맡게 되며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갖고

파견부대의 경비를 한국 정부가 담당한다. (dongA.com 팝업-실시간 뉴스 2003.10.18, 10.19 연합뉴스, 12.17 연합뉴스, 12.23 김정훈.윤상호기자, 2004.2.13 연합뉴스)

3.8) 2004 년 6 월 (김선일씨 피살)

: 조영길 국방부장관 해임 관련

이라크의 가나무역에 근무하던 34 살의 김선일씨가 바그다드에서 팔루자 방향으로 35km 떨어진 곳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아랍계 위성방송인 알 자지라의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알 카에다의 무장단체인 ‘알 타우히드왈 지하드(유일신과 성전)’에 의해서 처형되었다고 전했다.

이 사건으로 2 월에 국회안이 통과된 이라크 파병문제가 다시 국민과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되었다. 김선일씨와 같은 희생자가 또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시민단체들은 파병을 반대하였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국제적 시각에서 테러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반인륜적 행위임을 알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파병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씨의 피살사건으로 외교및 안보부처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감사원의 조사대상이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 일부 인사들의 교체도 검토되었다.(dongA.com 팝업-실시간뉴스 2004.6.23 연합뉴스/6.27 연합뉴스)

3.9) 2004 년 7 월 (북 경비정 서해 NLL 침범)

: 조영길 국방부장관 해임 관련

2004 년 7 월 14 일 서해 연평도 서쪽 15 마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한 척이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서 0.7 마일까지 남하했다. 네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아 우리측 군이 경고사격을 가한 후에야 북측 경비정은 NLL 북측으로 돌아갔다. 이 경비정은 2002 년 서해상에서 우리 군을 선제 공격해 6 명의 해군을 사망하게 했던 경비정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북의 침범에 해군작전사령부는 군 최고지휘부인 합동참모본부에 보고를 하지 않아 군과 청와대간의 정치적 문제로 파장되었다. 노 대통령이 이 사건에 추가조사를 요구하자 군은 청와대가 군에 대해 신임이 없다는 표시로 받아들였다.

추가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군은 남북한 해군 간에 기밀이 될 수 있는 교신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언론의 유출은 군이 자기 방어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청와대의 비난을 받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여객선서도 청취가 가능한 국제공용주파수를 사용한 교신으로 군사기밀이 아닐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언론 유출 혐의자로

정보참보본부장 박승춘 중장이 지목되었고, 그는 자진 전역을 신청하여 군 생활을 떠나게 되었다.

한편, 노대통령은 북한 무선송신 내용을 고의적으로 보고누락을 했지만 군의 사기를 고려하여 관련자들에게 경고적 조치만 취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조영길 장관은 해군작전사령관의 고의적 보고누락 사실을 여론에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것에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북의 NLL 침범은 15 일에 이어 18 일, 21 일, 26 일에도 전투함인 경비정이 침범하며 북측은 NLL 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NLL 무력화를 시도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4.7.15 A1/ 7.17 A1/7.19 A2/7.20 A1,A4/7.21 A1,A3/7.22 A1,A4/7.24 A4/7.27 A3/7.28 A1)

3.10) 2004 년 11 월 (수능부정 사건)

: 안병영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해임 관련

광주지역의 8 개 학교에서 핸드폰을 이용한 대규모 수능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이 부정사건의 배후조직으로 ‘일진회 연합조직’이 주축이 되어 전개되었음이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담자는 모두 141 명으로 공부를 잘하는 선수 39 명, 고 2 학년생 또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도우미 37 명, 금전을 지불한 후 답을 전송 받는 후원자 42 명으로 구성하여 ‘원멤버’로 팀을 구성했다. 이 원멤버의 구성은 선수가 답을 전송하는 수신조로, 도우미들은 그 답을 모아서 종합정리 하는 정리조로, 정리된 답을 후원자들에게 다시 보내는 발신조로 3 개조로 나뉘어 분담.역할을 하였다.

그들이 거래한 돈의 액수는 과목당 30 만원 내지 50 만원으로 후원자 42 명으로부터 수금한 돈은 모두 2085 만원이었다. 그 돈의 일부는 휴대전화 및 주변기기 비용, 도우미들의 식대.교통비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된 고시원 임차비 및 복사비로 사용되고 620 만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부정행위를 수능 감독관들이 알면서도 수험생의 장래를 생각해서 처리하지 못하고 못 본 척 했다고 전해졌다.

광주 수능 휴대전화 부정행위의 파문으로 전국적으로 다른 행태의 부정행위가 고발되었는데,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대리시험 및 카메라 펜이나 손목형 휴대전화를 이용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4.11.23 A1,A12,A13/11.24 A1,A13

3.11). 2004 년 12 월 (쌀시장 개방 협상 타결 및 결과 발표)

: 허상만 농림부장관 해임 관련

쌀 시장 개방협상안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계각국의 쌀 수입국들과 다음과 같은 협상결의를 보았다. 첫째,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10 년간 추가 연장한다. 둘째,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쌀의 물량은 현재 국내 소비량의 4%에서 향후 10 년간인 2014 년까지 7.96%로 늘린다. 세째, 내년부터 수입쌀의 10%는 밥쌀용도로 시판이 허용된다. 이로써 내년 6 월부터 미국산, 중국산, 태국산등 2 만여톤의 수입쌀이 국내에서 시판된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4 12.8 A14/12.18 A1/12.31 A1)

3.12) 2006 년 6 월 (학교 급식파문)

: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서울.인천.경기지역 초.중.고교의 수도권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했다. 이는 주로 C 식품업체로부터 위탁급식을 받은 학교에서 발생이 되었으며 인천지역에서는 9 개 학교에서 1184 명의 학생이, 서울 북아현동 중앙여고에서는 21 명이 식중독 증세인 구토, 두통, 설사로 집단조퇴, 기말고사 연기조치 등이 취해졌다. 또한, 그린푸드라는 소규모 위탁업체에서 음식을 위탁 받던 인천 문성 정보미디어 고교에서도 16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학교 급식에 대한 불신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급식 대신 자체 도시락을 준비하는 등 주변의 할인점을 이용하기도 했다.

정부는 대규모 식중독을 일으킨 C 대기업 위탁업체를 조사하여 책임 판정이 나올 경우 형사 고발 및 영업폐지를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위탁업체대신 학교 직영 운영의 급식을 권장하여 설비 및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2 억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교육당국에서는 지난 16 일 첫 식중독 학생이 발생했는데 1 주일이 지난 23 일에 늑장대처 했다는 비난으로 김진표 교육부장관이 사과발언을 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6.6.24 A1, A8/chosun.com 1 등 인터넷뉴스 2006.6.27)

3.13) 2006 년 7 월 (북한 미사일 발사)

: 이종석 통일부장관 해임 관련

북한은 7 월 5 일 오전 3 시 32 분경부터 오후 5 시 22 분에 걸쳐 두 군데 장소에서 총 7 발의 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했다. 첫째로 발사된 장소는 강원 안변군 깃대령에서 단거리 미사일인 스커드와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 1 호 5 발이 발사됐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발사된 미사일은 일본 북단 홋카이도 서쪽 500-600km 지점과 니카타 서북쪽 700km 해상에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두번째 발사된 시험장소는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대포동 2 호 1 발이 발사되었다. 이것은 장거리 미사일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정돼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미사일로 한.미.일 삼국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조사결과 42 초동안만 정상비행하다가 이상이 생긴 상태에서 수백 km 를 비행하다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dongA.com 동아일보 기사 DB 2006.7.6 A2/2006.7.7 A1)

3.14) 2006 년 10 월 (북한 핵실험,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 합의)

: 이종석 통일부장관 해임 관련, 윤관웅 국방부 장관 해임 관련

북한이 외무성을 통해 핵실험을 하겠다고 예보를 한 이후로 6 일만인 10 월 10 일에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핵 실험 발표 하루 전 9 일 오전에 우리측 지질연구소에서 진도 3.6 의 지진파가 측정이 되었다. 그러나 정확한 실험장소에 대해서는 잘 관측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측의 탐사로 대기 중에서 방사능 물질이 함경북도 풍계리 근처에서 탐지되면서 북한의 지하 핵실험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간의 관계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던 민간 사업인 금강산관광을 중단기로 정부는 결정했다. 10 월 20 일 제 38 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간에 발표된 14 개항의 공동 성명 중에서 전시작권통제권(전작권) 단독행사 시기에 대해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양국간에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결국 정확한 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채 미국측이 주장하는 2009 년 사이에서 우리측이 주장하는 2012 년 3 월 중으로 시기를 정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전작권 시기가 거론되어 결정된 것은 남한의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 북한에는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잘못된 전달이 될 수 있어 우려되는 사항이 되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6.10.10 A1/10.17 A1/10.19 A1/10.23 A1.A3.A4/10.24 A1)

3.15) 2006 년 10 월 (신도시 추가 건설)

: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해임 관련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지역의 집값 오름세를 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성 동탄과 파주 운정에 신도시를 조성,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 검단지구에는 340 만평으로 주택 5 만 6000 가구가 2009 년 12 월부터 분양된다. 김포에서 원당간 도로 신설 및 1 호선과 2 호선 전철에 연결되는 신도시 계획이다. 파주 운정 1.2 지구에 284 만평, 3 지구에 212 만평이. 특히 3 지구에는 주택 2 만 8470 가구가 건설되어 2010 년부터 분양된다. 신도시 건설 계획 과정에서 추 장관은 관계 부처 및 청와대와 조율하기 전에 언론에 서둘러 발표하면서 개발지역에 투기를 부추기면서 하룻밤 사이에 5000 만원씩 오르게 하여

부동산 정책에 엄청난 교란을 야기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6.10.24 A1.A6/10.27 A1.A2.A6/10.28 A1)

3.16) 2007 년 4 월 (국민연금법 개정안 합의)

: 유시민 복지부 장관 해임 관련

“노무현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2004 년부터 55%로 내리고 2008 년에는 50%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수령액이 5 년 뒤 20% 가까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2002 년 소득 대비 9%에서 2030 년까지 15.9%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2010 년에 보험료를 10.38%로 올린 뒤 매 5 년마다 1.38%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현승윤, 2004, 279)

그러나 이 정책은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높아지는 정책으로 노사 모두가 반발하면서 2004 년 이래로 4 년을 끌어오던 기존의 국민연금법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안이 이번 2007 년 4 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기존에 유지되던 국민연금법은 국민들에게 도 불만이 컸지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으로 정부측에서도 연금고갈에 대한 부담으로 개정이 요구 되었다. 국회에 상정된 안은 국민연금법과 노령연금법을 서로 상관시켜 패키지 법안으로 제시되었고 여당과 야당에서 각자의 의견으로 두 가지가 나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에서는 연금보험법으로 보험료율은 현행 소득의 9%에서 12.9%로 높이고 수령 연금액은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로 줄이는 내용으로 소위 ‘더 내고 덜 받는’ 것이다. 대신 노령연금법으로 65 세 노인의 60%에게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에서는 연금보험법으로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되 연금수령액을 40%로 낮추어 ‘덜받는’ 것이다. 그러나 65 세 이상 노인의 80%에 평균소득액의 10%를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예상치 않게 통합신당(열린우리당 탈당파) 소속 의원들이 법 개정안의 주도자인 유시민 장관에 대한 당내의 집단 감정 및 불신을 반영하여 많은 수가 기권함으로써 부결되고 말았다. 반면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에서 제안한 노령연금법은 통과되었다. 그러나 통과된 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법과 패키지를 이루어 같이 통과되도록 장치된 상정안이므로 통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국정실행에는 불합리성이 있어 국무총리 및 청와대 관계자에 의해 다시 검토대상이 되었다.

한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이 자신 때문에 다수의 통합신당 소속 의원들이 기권을 함으로써 법령이 통과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짓고 이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사표를 내었지만 사표수리가 되지 않았다.

결국, 4 월 19 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처럼 월 소득의 9%대로 유지하되 연금수령액은 현재 평균소득의 60%를 매년 1%씩 낮추어 10 년 뒤에 40%를 목표로 낮추게 하는 내용으로 ‘보험료는 안 올리고 받는 돈만 줄인다’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2 일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하는 데는 이견차가 커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계속 협상기로 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7.4.3 A10/4.4 A12/4.7 A1.A6/4.9 A6/4.12 A4/4.20 A1.A12)

3.17) 제 17 대 대통령 선거 (2007 년 12 월 19 일)

: 10 명이 후보로 출마하였고 선거인수 37,653,518 명 중에서 총 23,732,854 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63%로 역대 대통령선거의 최저율을 보였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다. 아래의 도표를 통해 후보자별 득표를 알아보기로 한다.

득표순위	기호	이름	정당	득표수 (명)	득표율(%)
1	2	이명박	한나라당	11,492,389	48.7
2	1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6,174,681	26.1
3	12	이회창	무소속	3,559,963	15.1
4	6	문국현	창조한국당	1,375,498	5.8
5	3	권영길	민주노동당	712,121	3.0
6	4	이인제	민주당	160,708	0.7
7	8	허경영	경제공화당	96,756	0.4
8	10	금민	한국사회당	18,223	0.07
9	7	정근모	참주인연합	15,380	0.06
10	9	전관	새시대참사람연합	7,161	0.03
-	5	심대평	국민중심당	기권	-
-	11	이수성	화합과도약을 위한 국민연대	기권	-
총 투표수			23,732,854 명		

***득표율은 총투표수 대비 백분율을 가리킨다.

출처: 위키백과-대한민국 제 17 대 대통령 선거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C17%EB%8C%80_%EB%8C%80%ED%86%B5%EB%A0%B9_%EC%84%A0%EA%B1%B0

4. 노무현 대통령 정부 장관들의 재직기간 집계

: 재직 기간을 집계함으로써 노 대통령 장관들의 재임 기간이 어느 정도 짧고 길었는지를 보기로 한다. 이 집계의 자세한 정보는 결론부의 도표를 참고한다.

1 달 미만: 3 명

6 개월까지: 4 명

6 개월이상 1 년까지(7 개월-12 개월): 19 명

1 년 6 개월까지(13 개월-18 개월): 30 명

2 년 까지(19 개월 -24 개월): 10 명

2 년이상(25 개월이상): 10 명이며, 이 중에서 30 개월 이상은 4 명이다.

(27 번과 38 번(오명), 44 번과 50 번(장하진)은 동일인물로 1 번만 포함했다.)

III. 분석

1. 분석 방법

1.1) 범주(category)를 정하는 기준

본문에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78 명 모든 장관의 발탁 과 해임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해임 또는 발탁 배경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내어 범주(category)를 정해본다. 우선적인 범주의 설정은 선행연구를 한 김호균 연구가가 설정한 임명기준과 교체기준을 기본 설정으로 삼았다. 기본설정에서 더 세부적인 사항은 김호균이 세부적으로 분류한 범주 이외에도 참여정부에서 나타난 특징도 아울러 세부범주로 분류되었다. 또한 R.Dormels 가 ‘Politische Kultur und Ministerrekrutierung in Südkorea’ 2006 (p302,303,304)의 내용 중에서 ‘대한민국 장관의 재임기간이 짧은 이유’에 대해 범주요소를 정해놓은 것을 기준으로 삼되 노무현 대통령 정부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범주기준에서 제외시키거나 노 정부에 나타난 특징에 맞게 기준을 정하여 세부적인 범주를 설정했다. 우선 김호균 선행 연구가의 임명기준을 알아보면 1)정치적 보상차원으로 대통령의 측근, 국회의원 선거후에 대가성이나 낙선자 배려인사이다. 또한 정당내 계파를 고려한 경우들이다. 2)상징적 대표성 차원 출신지역, 성 등 특정연고 관련자를 임명하는 것이다 3)일반관리성을 기준으로 임명된 경우로 관련부처와 해당되는 행정경험이 없는 자를 임명하는 경우이다. 예컨데 내무부 관료출신이 교통부에 임명된 경우이다. 4)전문성에

의거해 임명된 경우로 예컨대 경제학자가 재정경제부에 입각된 경우이다. (김호균 2002, 9-10)

교체사유의 범주는 경질사유의 범주로 역시 선행연구가 김호균이 기준을 삼은 것을 참고로 한다. 1)부처업무의 책임을 물어 교체되는 경우이다. 2)도덕적인 문제 등 스캔들로 경질되는 경우이다. 3)정치적 사유로 분류되는 경우는 권력관계의 변화, 현직장관을 국회의원을 선거출마시키는 경우, 타 부처로 인사이동, 새로운 정부의 등장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 물러난 경우이다. 4)상징적 사유로 장관의 책임 사유가 아니지만 민심수습이나 국정쇄신 차원에서 경질되거나 직무수행을 오래했다는 등의 이유로 희생양 차원에서 장관을 물러나는 경우이다. 5)기타사유로 알 수 없는 사유로 분류된 경우이다. 이상의 교체사유는 크게 장관이 책임이 있어 물러나는 귀속책임과 책임과 무관하게 물러나는 비귀속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김호균 2004, 56)

이상은 임명과 해임에 대한 범주 설정에서 선행연구가가 사용한 기준을 설명하였고, 이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는 범주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필자는 김호균 연구가의 기준은 물론이거니와 참여정부의 특성을 살린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범주를 정했고 마지막 결론부분의 도표를 통해서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1.2) 해임 배경의 분석을 통한 범주(category) 설정

: 일반적으로 장관이 퇴임하는 당연한 이유로 사망 또는 질병으로 건강상의 이유가 되거나 다른 공직에 임명이 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 이외에 내각이 바뀌는 중요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찰되었다. (R.Dormels 2006, 302)

아래에 정해진 범주의 정의를 기술해보고 해당되는 장관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1.2.1) 법에 의해 정해진 규정(선거출마용): 비귀속 책임, 총 9 명

: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의원의 입후보자는 행정 집행기관의 고위관직에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입후보를 원한다든지 당 또는 대통령의 후보자인 장관은 선거 2-3 개월 전에 장관직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러한 법 규정의 근거는 장관들이 그들의 막강한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재정경제부 부총리 겸 장관, 권기홍 노동부 장관, 한명숙 환경부 장관(2004 년 2 월 해임)

: 4.15 총선에 투입되면서 장관직을 그만두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2005 년 12 월 해임)

: 이듬해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공식적인 사의를 표명했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2006 년 3 월 해임)

: 차례대로 각각 충남지사의 후보로, 열린우리당 경기지사 후보로,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개각대상이 되었다.

이재용 환경부 장관(2006 년 4 월 해임)

: 5.31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후보 출마를 위해 해임되었다.

1.2.2)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 따른 업무적 과실(도의적 책임 및 민심수습용): 총 6 명

: 귀속 또는 비귀속책임성을 띤다.

장관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업무결과가 장관의 무능력으로 인정되거나 추정될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장관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집중을 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으려는 일환으로 장관 교체가 요구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장관의 무능력한 업무능력으로 추정되어 경질성 해임을 띠기도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하에 물러나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국민들의 불만이나 원성을 야기시킨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장관이 책임을 짓고 그 정책의 소관부처 장관이 물러나기도 한다. 이는 국민정서를 달래기 위한 민심수습용으로 소관장관이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2003 년 12 월 해임)

: 원전 센터부지문제와 관련 불안군민들 반대 시위가 폭력화, 장기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짓고 사임했다. 정찬용 인사보좌관의 교체배경에 근거해 보면 윤 장관의 사임은 업무적 과실 성격보다는 불안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번진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은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비귀속, 상징적사유)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겸 장관(2003 년 12 월 해임)

: 여론에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해임배경이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교육계 분열에 따른 도의적 책임, 총선출마 여부, 연말 개각에서 교체대상으로 그 배경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윤 장관이 밝힌 사임 표명에서는 교육계의 여러 가지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해임 배경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JOINS 인물정보에 나타난 윤 장관의 이력을 근거로 볼 때 윤 장관이 퇴임 후 4 개월 뒤에 열린우리당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으므로 그의 사임 배경은 다소 대통령의 강권으로 ‘총선 출마용’으로도 보여진다. (비귀속 책임성, 상징적사유)

조영길 국방부장관(2004 년 7 월 해임)

: 개각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비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고, 특히 북한이 NLL(북방한계선)을 침입했을 때 보고누락 및 기밀유출 등 군 장악력에 한계를 보인 것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문책성 해임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귀속성 책임에 속한다.

안병영 교육부총리(2005 년 1 월 해임)

: 민심 수습용 (비귀속책임성, 상징적사유)

윤관웅 국방부 장관(2006 년 10 월 해임)

: 2 년 3 개월 장기 재직으로 교체시기도 되었지만 군 관련 한.미 관련 업무에 대한 책임성 사의로 보여진다. 귀속책임성

이종석 통일부 장관(2006 년 12 월 해임)

: 외교.국방부에서 노 대통령의 실세 참모였던 이 장관은 북한의 열차운행 중단, 미사일 발사 등 특히 핵 실험 강행 등으로 대북 정책 실패에 따라 문책성 경질로 이어졌다. 또 다른 이유는 새로이 교체된 외교부 인사들과의 협력 업무관계를 위한 조치였다. 귀속책임성

1.2.3) 개인적 업무과실 및 물의(스캔달): 총 8 명

: 귀속책임성으로 개인 스캔들이 해당사유에 해당된다.

업무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원인이 개인적인 실수로 인정되는 경우로 특히 신중치 못한 행동이나 견해표명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장관들이 해당된다. 또는 발탁이 되자마자 언론 및 정치권에서 임명 취소를 요구할 때 해임이 되는 장관들이 있다. 이 경우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개인의 인격에 하자가 있다 라든가 과거에 행해진 부패, 뇌물수수, 부동산 투기로 재산증여 의혹 및 자녀들을 둘러싼 병역기피와 부정 채용 등이 원인이 된다.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2003 년 10 월 해임)

: 공식석상에서 여과되지 않은 ‘돌출발언’ 으로 정부에 누를 끼치면서 임명된 지 14 일 만에 경질이 되었다. 그는 스스로 공무원 사회에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한다면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지만 그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교사 대상 강의에서 큰 절을 하며 공식으로 사과하는 등 해당 부처와 정부에 물의를 일으켰다.

이기준 교육부총리(2005 년 1 월 해임)

: 임명 3 일만에 장남의 부정입학 뿐 아니라 본인의 도덕성이 여러 가지로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물러났다. 한편, 그의 장관임명에 정부의 측근들을 둘러싼 정실인사라는 의혹을 받았다. 인사책정을 잘못 한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물러났다.

이헌재 경제부총리(2005 년 3 월 해임)

: 공직자 재산 변동 내역이 공개되면서 부동산 매매차익으로 60 억 이상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명쾌한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사의를 표명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2005 년 3 월 해임)

: 친.인척의 비리 및 아들의 인사청탁으로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자 사임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2006 년 7 월 해임)

: 리더십 부족으로 여권 내에서 교체를 주장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2006 년 7 월 해임)

: 학계에 관련해 여러 가지의 형태로 도덕성이 문제되어 취임 18 일 만에 사표를 내야만 했다.

그러나 사퇴후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회전문 인사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2006 년 10 월 해임)

: 신도시 조성 발표 과정에서 추 장관의 부주의한 언행으로 국민들의 투기를 부추키게 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혼란을 가져오게 했다.

김성호 법무부장관(2007 년 8 월 해임)

: 공적인 장소에서 지나친 소신발언으로 현 정부의 기조 또는 노 대통령에 불리한 발언으로 공직사회에 파장을 일으키자 사의를 표명하고 해임되었다.

1.2.4). 내각개편용 (교체 또는 로테이션의 원칙): 총 12 명

: 비귀속책임성으로 타부처로 이동은 정치적 사유로, 재임기간 2 년을 채운 경우는 상징적 사유로 분류된다.

내각 개편은 주로 대통령 측에서 해당 장관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내각 개편을 통해 행정 집행기관에 새로운 활기를 주어서 각 부처에 업무를 고무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변화가 없는 내각에 대해서 때로는 비난이 있기도 한다.

새로이 임명된 장관은 해당 부처에 새 바람을 불게 하여 정책의 혁신을 가져오게 하므로 교체를 시키거나 다른 부처로 이동시키기도 한다. 장관의 재임 기간은 대략 2 년을 원칙으로 하고 교체가 된다. (R.Dormels 2006, 303)

그러나 R.Dormels 에 의해 정의된 내용과는 달리 2 년의 원칙 기간을 채운 장관은 단지 10 명으로 실제적으로 노 정부의 내각개편은 2 년의 원칙과는 상관없이 조사결과 내각 개편용으로 발표된 장관을 포함시켰으며, 또한 실제적으로는 해임된 배경을 근거로도 분류하여 범주에 포함시켰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2003 년 12 월 해임)

: 건설교통부에 지나친 업무량과 그에 관련되어 끊이지 않는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되면서 최 장관은 문제된 일들이 마무리 지어지는 대로 퇴임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적으로 자진사퇴로 분류된다.

박호균 과학기술부 장관 해임(2003 년 12 월 해임)

: 다른 부처와 상호 조율이 원만치 않아 업무해결에 있어서 미숙하다는 평이 있었다. 업무 수행능력의 부족으로 소관 부처에 발전을 위해 타당하게 개각대상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 지은희 여성부 장관(2005 년 1 월 해임)

: 규정된 장관 재임기간 2 년을 수행한 경우이다.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2005 년 1 월 해임)

: 노 대통령이 밝힌 바로는 근거도 없이 2 년을 채우지 않은 장 장관을 교체하며 개각 대상에 올렸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준비시키기 위해 후임자로 오거돈 장관을 발탁하기 위한 교체임을 알 수 있다.

허상만 농림부장관(2005 년 1 월 해임)

: 쌀 협상으로 인한 농민들의 민심수습용으로 노 대통령이 교체를 준비하면서 개각 대상이 되었다. 단, 농민의 원성이 없었으므로 개각성 해임으로 본다. 이상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교체배경을 설명한 것이고 실상은 여당의원을 내각에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여지고 또한 노 대통령의 대선에 공헌을 한 박홍수 장관에 빚을 갚기 위한 보은 인사로 볼 수 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2006 년 2 월 해임)

: 개각 대상으로서 해임이 되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2006 년 2 월 해임)

: 오랫동안 지속된 노동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환으로 장관을 교체시킨 개각형 교체이다. 해임의 이유도 나름 타당성이 있어 내각개편형으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노 대통령이 은혜를 갚기 위해 이상수 장관을 후임자로 발탁한 보은인사로도 강하게 보인다.

정동채 문화부 장관(2006 년 3 월 해임)

: 재임기간 1 년 9 개월로 개각 대상이 되었다.

***회전문(로테이션 원칙): 내각 개편으로 교체되면서 다른 부처의 장관으로 다시 연임되었거나(회전문 인사), 고위직으로 이동된 경우(직위이동) 따로 분류했다. 정치적 사유로 비귀속성책임건이다.(총 5 명)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2003 년 12 월 교체)

: 장관부처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의 자리로 내정되면서 교체된 경우이다. (직위이동)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2003 년 9 월 교체)

: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임되면서 해양부의 허성관 장관을 행자부로 연임시켰다.

(회전문 인사)

김승규 법무부 장관(2005 년 6 월 해임)

: 김 장관이 국정원장으로 내정되면서 교체되었다. (직위이동)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2006 년 7 월 해임)

: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내정되어서 교체되었다. (직위이동)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2006 년 12 월 해임)

: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연임되었다.(회전문인사)

1.2.5) 여.야간 당파경쟁이나 여권 내 권력다툼: 총 2 명

: 비귀속책임성이며 정치적 사유에 해당된다. 특히 여기서 분류된 두가지 경우는 정치적 불화관계에 의한 경질에 해당된다.

과거 50 년대나 60 년대에 빈번하게 내각 교체의 원인이 되었던 범주였다. 노 정부 시대에도 해당되는 장관이 있어 범주를 설정해보았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2003 년 9 월 해임)

: 해임의 계기는 한총련 사태에 대한 책임과 태풍 “매미”에 대한 미숙한 대응으로 접근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한나라 야당이 정부 야당을 향한 공격 대상으로 김두관 장관이 지목된 것이다. 이러한 근거는 한나라당이 노골적으로 김 장관을 노무현 정권 타격용이라고 한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그 이외에도 한나라당은 김 장관이 야당의 지지기반인 경남지역에 도지사로 출마하려는 움직임에 우려하여 필사적으로 그를 장관자리에서 해임시키려 했다. 결국 국무위원 결의안에서 한나라당의 절대 압권표로 김 장관의 해임안이 가결된 점으로 볼 때 김 장관의 해임은 여.야 당파간의 경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2004 년 1 월 해임)

: 윤 장관의 직접적 해임 배경으로 노 대통령이 밝힌 바로는 외교부 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그러나 그의 본질적인 해임 배경에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의견 대립 및 이종석 NSC 사무총장과의 갈등에서 시작되었다. 이 사무총장은 외교.안보 방면에서 노 대통령의 참모로 외교수장인 윤 장관과 같은 수준의 권력 선상에서 대통령을 보좌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이종석 사무총장과 뜻을 같이 하면서 윤 장관은 외교수장으로서 권력이 약화되었다. 이는 윤 장관이 이종석 사무총장과의 권력 경쟁에서 권력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그로 인한 연속적인 부작용으로 ‘외교부 사태’가 이어졌고 윤 장관이 경질되게 되었다.

1.2.6)기타사항(기타사유)

: 비귀속책임성으로 상징적 사유도 정치적 사유로도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로 정한다.
(김호균 2004, 57)

1.2.6.1)자진 사퇴: 총 5 명

김영진 농림부 장관 (2003 년 7 월 해임)

: 정부의 새만금 사업 정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자진 사표를 제출했다. 발탁배경에서 보여지듯이 김장관의 농민에 대한 열정과 애정은 남다르다. 농민을 위한 정책 앞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의 강한 집념이 자진 사표로 이어진듯하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93 년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상에 반대하며 제네바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JOINS 인물정보 중앙일보 2003.2.28)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2007 년 5 월 해임)

: 장관 본인들의 의사대로 행해진 사퇴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2007 년 5 월 해임)

: 4 년동안 국회 주요 상정 건으로 미결로 유지해오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유 장관의 주도하에 해결되려는 과정에서 유 장관에 대한 통합신당(열린우리당 탈당파)의 집단 불신으로 대거 기권하면서 부결되었다. 그에 대한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맡은 바 업무를 정리한 뒤 40 여일 만에 사표가 수리되었다.

이치범 환경부장관(2007 년 9 월 해임)

: 새로이 교체되는 정부의 대통령 후보자인 이해찬 전 총리 캠프로 가기 위해 사표를 냈다.

1.2.6.2)정치 개각용(정치적 사유): 총 3 명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정세현 통일부 장관, 이창동 문화부 장관(2004 년 6 월 해임)

: 해임이 된 3 개 부처의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에 대한 별다른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임된 장관들의 후임자리에 새로이 임명된 장관들을 살펴보면 그 원인이 보인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다음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할 사람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대선 준비를 위해 입각이 필요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언론 정책을 관리하려는 정부의 시도라고 전해진다. 그러므로 해임이 된 3 개 부처의 장관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개각이라고 전했다.

1.2.6.3)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결핍: 총 1 명

강금실 법무부 장관(2004 년 7 월 해임)

: 노 대통령이 거듭 부탁한 총선 출마를 강 장관이 거절하면서 노 대통령은 강 장관에 실망하면서 둘 사이의 관계변화가 있었고 그때부터 후임장관 자리가 물색되었다.

1.2.6.4)알 수 없는 해임: 총 4 명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2005 년 1 월 해임)

: 개각의 대상도 아니었고, 업무상 문제도 없는데 갑자기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또한 본인이 영광스럽게 자진 사퇴 내었다고 하지만 알 수가 없다.

곽결호 환경부 장관(2005 년 6 월 해임)

: 갑작스런 사표에 항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장관으로 보여진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박홍수 농림부 장관(2007 년 8 월 해임)

: 임기 6 개월을 남겨둔 갑작스런 사표로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

1.2.6.5)유엔 사무총장 선출: 총 1 명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2006 년 11 월 해임)

: 반 장관은 단일후보로 제 8 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1.2.6.6)국회의원으로 복귀:총 3 명

김진표 교육부 총리(2006 년 7 월 해임)

: 재임기간 1 년 6 개월을 마친 김 장관은 스스로 사의를 비치며 국회로 돌아갈 뜻을 밝혔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2006 년 7 월 해임)

: 열린우리당으로 복귀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2006 년 12 월 해임)

: 장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본다면 열린우리당으로 복귀할 것을 밝혔다.

1.3)임명(발탁)배경의 분석을 통한 범주 설정

범주를 설정하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장관 임명 및 해임권에 관한 헌법 규정을 알아보기로 한다. 헌법 규정상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찬성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국무총리가 장관을 제청하는 권리가 헌법상 명시되어있지만, 형식적일 뿐 실제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고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각 개편은 대부분 대통령이 원하는 의지대로 행해지고 있다. 1988 년 이래로 규정상 대통령 재임이 불가능해지면서 매 5 년마다 새로이 선출되는 대통령 하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있다. 새로이 들어선 정부는 거의 예외 없이 각 부처의 장관들을 새로이 임명하고 있다. (R.Dormels 2006, 302)

한편 고건 국무총리는 2004 년 5 월에 장관의 임명에 대한 총리의 제청권한이 청와대에 의해 무시당했다라는 이유로 불쾌한 감정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5 년 1 월 ‘이기준 인사 파동’ 이후 인사검증 시스템으로 처음으로 장관 임명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들은 공직 후보자로서 적합성을 검증 받게 된다. 그러나 이는 검증만 받는 상징적인 과정일 뿐 ‘인준’의 효력은 없다.

다음 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각 부처의 장관 들을 발탁 할 때 기준을 두었던 발상이나 근거를 알아보기로 한다. 하기에 분류된 10 가지의 범주의 기준은 발탁된 배경에 근거를 두고 정치 전문가나 보도를 하는 정치부 기자들에 의해서 대부분 사용된 표현이다. 이는 당시의 발탁 배경을 대표하는 표현법이므로 이를 범주의 축으로 삼아 분석.분류하였다.

1.3.1)코드인사: 총 16 명

: 주로 노무현 대통령 정부와 출범한 첫 내각의 인선 기준이 된 형태이다. 영어로 암호(유전자), 부호를 의미하는 ‘코드’라는 말은 ‘노 대통령과 주파수가 맞느냐’ 또는 ‘생각이 비슷하냐’를 따질 때 쓰인다. 노대통령에게 ‘코드가 맞는다’는 말은 “철학과 원칙이 같은 사람을 써야 한다”는 인사관이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3.3.3 A4) 이러한 코드인사의 기준을 갖춘 인물들은 과거 또는 현재에 노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면서 업무적으로나 사적으로 서로 공유하며 노 대통령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인물들로 분류되었다.

단, 필자가 수집한 자료에서는 노 대통령과 장관들의 친분 여부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코드인사를 선별하는 데 기준이 애매한 관계로 수집된 정보(특히 dongA.com 2006.8.1 통권 563 호 p172-185)에 근거하여 코드인사를 분류했다. 동시에 필자가 분석한 것에 의해 노 대통령의 친분이 드러나는 부분도 코드인사에 포함시켰다. 특별히 임기 말에 속한 코드인사는 필자가 분석한 코드인사이다.

파격인사로 분류된 경우는 참여정부에서만 나타난 분류기준이므로 임명된 기준에 따라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이중 범주로 나누었다.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2003 년 2 월 임명)

: 노 대통령 뿐 아니라 경제부처 관료들에 의해서도 이미 유능한 관료로 평판이 나 있었고 요직의 자리에 배치될 것이 예상 되어 있었다. 전문성 기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2003 년 2 월 임명)

: 아들과 관련되어 반대 의견이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보산업을 이끌 책임자로 능력이 인정되어 임명되었다. 전문성 기준.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2003 년 2 월 임명)

: 대선 기간 중에 권양숙 여사와의 친분이 계기가 되었지만 김 장관의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노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김호균의 설명에 의하면 행정경험도 없고 부처업무에 전문식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여성안배 차원이나 특정연고 관련자로(김호균, 2002, 10) 임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상징적 대표성 기준.

한명숙 환경부 장관(2003 년 2 월 임명)

: 전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유능한 장관’이라는 이유로 노 대통령 정부로 유임이 된 경우이다. 그러나 전 정부에서 여성부 장관이었고 새로이 발탁된 환경부에서도 발탁의 근거를 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추었다라고 보기에는 환경 분야에 경력이 미약하다. 일반관리성을 기준.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겸 장관(2003 년 3 월 임명)

: 다른 부처와는 달리 교육부 장관의 임명에는 시민들의 여론이 강하게 반영되어 임명이 결정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윤 장관의 임명 공표에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없어서 임명 결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윤 장관이 발탁된 배경은 교육의 현안을 해결 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되어 인선되었다. 전문성 기준.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 년 9 월 임명)

: 허 장관의 발탁 배경은 그의 능력을 배경으로 책임자로서 밝히고 있지만 여러 형태로 노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로 임명이 된 듯하다. 출범 내각부터 허 장관은 경력과 연관이 없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 후 행정자치부로 연임되었다. 행자부로 발탁된 배경은 경영 전문가로서 그의 능력이 인정된 면도 있지만 총선 출마용이라고도 전해졌다. 두 번에 걸친 허 장관의 발탁 배경은 오랫동안 유지된 노 대통령과의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듯하다. 일반관리성 기준.

김대환 노동부 장관(2004 년 2 월 임명)

: 노동 관계 학계 인물로서 노동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전문성 기준.

윤광웅 국방부 장관(2004 년 7 월 임명)

: 현 정부의 국방정책을 잘 수행해 나갈 책임자로 발탁되었다. 전문성 기준.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겸 장관(2005 년 1 월 임명)

: 현 정부의 출범 내각에서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로 재직한 경제관료 출신인데 노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시장개혁의 원리에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 장관을 개혁의 책임자로 인선했다. 일반관리성 기준.

천정배 법무부 장관(2005 년 6 월 임명)

: 검찰의 개혁을 계속 추진하려는 노 대통령의 의지로 법조계인이 아닌 정계인을 인선한 배경도 있지만 천 장관은 노 대통령과 생각이 잘 통하는 가까운 사이이다. 전문성 기준.

김우식 과학기술부 부총리 겸 장관(2006 년 2 월 임명)

: 능력도 갖추었지만 김 부총리의 남다른 성공적인 인생이 노 대통령의 삶과 비슷한 역정(歷程)으로 노 대통령에게 주목 대상이 되었다. 전문성 기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2006 년 2 월 임명)

: 유 장관 발탁배경의 인사분류는 혼합형으로 대선 과정에서 입은 보은인사, 이 총리의 제청으로 인선된 정실인사, 노 대통령과 성격이 비슷해 상호간에 이해를 잘 하는 코드인사로 분류될 수 있다. 정치적 보상차원성.

이종석 통일부 장관(2006 년 2 월 임명)

: 노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에서 이 장관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며 외교.통일.국방의 나침반으로 삼았다. 노 대통령이 이 장관을 적극 지지한 것은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이 해임되게 된 일명 '외교부 사태'의 2004 년 1 월 윤 장관의 해임 배경에서 잘 나타나있다. 전문성 기준.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2006 년 3 월 임명)

: 노 대통령과 비교적 가까운 사이였고 예술인이지만 국립극장 장으로 재직 시 행정업무 능력이 탁월함을 인정받으면서 '검증된 코드인사'로 문화예술계에서는 준비된 장관감이라는 평이 있었다.(JOINS 중앙일보 인물정보 2006.3.2/서울신문 2006.3.21) 전문성 기준.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장관(2006 년 7 월 임명)

: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차관급)으로 발령이 난 이래로 3 개월안에 장관급으로 고속 승진해 부총리직을 미리 염두에 두었던 대통령의 의도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겸 장관(2006 년 7 월 임명)

: 노 대통령과 가장 오래된 인연을 유지하고 있는 학계인물로 전해진다. 업무적인 일 뿐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각에서도 노 대통령과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 코드인사로 분류된다. 전문성 인사.

1.3.2)보은인사: 총 6 명

: 정치적 보상차원으로 분류된다. 내각 개편을 더욱 독촉시키는 이유중 하나는 장관직에 희망을 품고 있는 인물들이 줄지어 대기해 있다라는 점이다.(R.Dormels 2006 p304) 이들은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과거 또는 현재에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대통령을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후원한 인물들로 그 공로의 대가로 장관에 임명되기를 바란다.

후원을 받은 대통령 또한 그 해당 인물에게 장관직을 제공함으로써 은혜를 갚아야 하는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에 공헌한 인사들이 해당된다. 단, 필자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간혹 일부 보은인사를 코드인사에 포함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코드인사로 따로 명시함) 그러나 필자는 위의 정의에 의해 대가성 인사에 해당될 경우 '보은인사'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코드인사와 분류했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2003 년 2 월 임명)

: 대선때 대구지역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서 발탁되었다고 전한다. (코드인사)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2003 년 2 월 임명)

: 재정 분야의 전문가가 해양수산부의 요직으로 임명된 것이 비적절한 것이다. 허 장관의 발탁은 노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것에 대한 대가라고 전해진다. (코드인사)

박홍수 농림부 장관(2005 년 1 월 임명)

: 이장, 군수 출신으로 농민들과의 연계가 있으며 그런 인맥으로 노 대통령 대선에서 농민표를 끌어오는데 공헌한 대가로 임명된 보은인사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2006 년 2 월 임명)

: 노무현 대통령 대선 자금 총괄과 관련하여 수감된 적이 있었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낙선되자 노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장관자리로 신세 진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다.

(코드인사)

이치범 환경부 장관(2006 년 4 월 임명)

: 노 대통령 대선에 기여했고, 노 정부의 출범에 기여한 기업인들의 회장직에 있다가 임명되었다. 전 환경자원공사 사장이었던 점으로 볼 때 능력형 인사로도 분류된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2006 년 12 월 임명)

: 노 대통령 대선때 한화그룹에서 10 억원을 받아 노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것 때문에 노 대통령의 은인으로 장관직에 내정되었다는 지적이다. 자료에 의하면 코드형 보은인사로 분류된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친북좌파'로 인정되어 임명 '절대불가' 판정이 내려졌지만 노 대통령의 강행으로 임명되어 노대통령의 오기인사라도 분류된다.

1.3.3)총선출마용, 대선주자 수업용(발탁배경의 정보에 의한 집계수는 2 명)

: 정치적 보상차원에서 임명된 경우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2004 년 6 월 임명)

: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할 준비로 입각되었다.(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4.7.1 A4)

오거돈 해양부장관, 이재용 환경부장관 발탁배경을 근거로 보면 낙선자 배려인사 이지만, 해임배경을 근거로 보면 지방선거를 대비한 대선주자 수업용이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2005 년 1 월 임명)

: 과거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차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고 통상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이므로 행자부의 임명과 관련 특별한 발탁배경이 없고, 해임배경이 5.13 지방선거에 대비한 점으로 볼 때 미리 대선을 위해 장관자리에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코드인사로 분류되어 있지만 환경부처장관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탁 되었고, 해임 배경이 4.15 총선에 출마용인 점을 볼 때 총선출마용으로 장관직에 오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보은인사로 분류되어 있고, 노동분야에도 생소한 인물이다. 해임배경이 4.15 총선출마용이다.

*** 위에 명시된 장관들 중 발탁배경으로 ‘대선출마용’으로 알려진 장관은 김근태 장관과 정동영 장관뿐이다. 나머지 6 명에 대해서는 발탁배경이 명쾌하지 않아 해임배경을 근거로 ‘선거출마용’으로 분류했다.

1.3.4)소관 부처내의 승격 인사(관료형, 실무형,업무 충실형): 총 20 명

: 기본 분류도 전문 관료형으로 분류된다. 주로 노 대통령 집권 중반기에 채택된 인사형태로 과거 전 정부의 소관 부처 또는 당해 정부내 소관 부처의 차관이나 관료가 장관으로 승진.임명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과거 정권에서 동일한 소관 부처에서 장관직에 있었던 인물도 해당된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2003 년 2 월 임명)

: 기획예산처의 정통 인물로 전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1 년간 기획예산처에서 차관직을 맡으면서 업무능력에서 인정을 받았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2003 년 2 월 임명)

: 건설교통부 차관을 역임한 점과 강원도 출신이라는 점이 발탁 배경으로 꼽힌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2003 년 2 월 연임)

: 전 정권에서 유임이 된 경우로 통일에 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2003 년 7 월 임명)

:해양수산부 차관이 장관으로 등극된 경우이다.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2003 년 10 월 임명)

:전 기획예산처 장관직에 있었고 해양부 차관직에 있었던 관료출신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2003 년 12 월 임명)

: 전 정권에서 산업자원부 차관의 경력도 발탁에 기준이 되었겠지만 밝혀진 내용으로 보면 문제 해결 능력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공로가 인정된 것이다.

안병영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겸 장관(2003 년 12 월 임명)

: 전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경력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바탕이 임명 배경이 되었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2004 년 1 월 임명)

: 전문 예산통이며 전 정권의 기획예산처 차관직에 있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2004 년 1 월 임명)

: 외교부와 관련한 화려한 경력과 더불어 전 정권에서 외교통상부 차관이었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2004 년 2 월 임명)

: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다.

곽결호 환경부 장관(2004 년 2 월 임명)

: 현 차관에서 장관으로 승진. 임명되었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2004 년 7 월 임명)

: 전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직을 지냈으며 검찰 행정 분야에서도 전문성이 인정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2005 년 1 월 임명)

: 소관 부처의 현 차관에서 장관으로 승진. 임명되었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2006 년 3 월 임명)

: 현 차관에서 장관으로 승진되었다. 차관 재직 시 정보기술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업무능력도 인정되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2006 년 7 월 임명)

: 당해 정부의 기획예산처 차관에서 장관으로 승진. 임명되었다. 부동산 투기와 도덕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책임자로 판단되어 임명되었다.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2007 년 5 월 임명)

: 전 정부에서 문화체육부 부처에서 차관직에 있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2007 년 5 월 임명)

: 해수부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당해 정부의 차관에서 장관으로 승진한 경우로 대표적인 ‘업무충실형’인사로 분류된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2007 년 6 월 임명)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2007 년 9 월 임명)

이규용 환경부 장관(2007 년 9 월 임명)

: 당해 정부의 소관 부처에서 장관으로 승진했다.

1.3.5).능력형 인사: 총 16 명

: 전형적으로 전문성 임명기준에 해당된다. 임명된 소관 부처와 관련해 전문성을 겸비했다거나 경쟁력이 있다라고 인정된 경우로 주로 전공학부와 연관된 전문가 및 발탁 부처와 관련해 경력을 갖춘 인물이 임명된 경우에 해당된다.

조영길 국방부 장관(2003 년 2 월 임명)

: 국방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임명되었다. 반면에 사관학교가 아닌 갑종(甲種) 출신의 대장이 임명되었다는 점에서 파격인사라고도 분류될 수 있다.(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4.7.29. A3)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2003 년 2 월 임명)

: 전 정권에서 재정경제부의 차관 출신이 산업자원부에 임명된 것이 생소하지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는 강단 있는 관료로 새로 들어선 노 정부의 측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면서 발탁되었다.

박호균 과학기술부 장관(2003 년 2 월 임명)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원장 재직 시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경영효율화를 잘 이루어 낸 점으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김영진 농림부 장관(2003 년 2 월 임명)

: 농정전문가로 농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돋보이는 인물로 현안이 되는 농정 문제를 풀어나갈 적임자로 발탁이 되었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2003 년 2 월 임명)

: 여성.사회문제 운동의 대표자로 여러 활동을 통해 영역을 넓힌 능력이 인정되었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2003 년 7 월 임명)

: 농업분야의 학계출신으로 농업의 현안을 해결 할 수 있는 적임자로 발탁되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2003 년 12 월 임명)

: 건설과 교통부에 업무 경력이 쌓여 실무 및 전문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물로 평가 되어 발탁되었다.

오명 과학기술부 부총리겸 장관(2003.12 월 임명)

: 과거 정권에서 3 번에 걸친 장관직의 경력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오 장관의 경력이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그의 발탁에 노 대통령은 심혈을 기울였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2006 년 3 월 임명)

: 행정 혁신의 공로가 인정되어 발탁되었다.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2006 년 3 월 임명)

: 기획예산처.중소기업청 등을 거친 경제관료로서 업무 능력에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임명되었다. 그러나 경제.예산의 전문관료로서 경력이 전무한 해양수산부에 임명이 된 점이 납득이 가지 않지만 별 다른 비판이 제기되지 않았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2006 년 8 월 임명)

: 노 대통령의 간곡한 부탁 끝에 국가청렴위 사무처장으로 지명된 후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장관으로 발탁되었다.

김신일 교육부 부총리 겸 장관(2006 년 9 월 임명)

: 교육부 부처 업무와 관련해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아 발탁되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2006 년 12 월 임명)

: 현 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직에서 건설교통부로 이임된 대표적 회전문 인사이다.

발탁배경으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세금으로 제어하겠다는 목표 하에 세제 전문가인 이 장관을 적임자로 건설교통부에 임명했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2007 년 1 월 임명)

: 관료로서 부처에서도 한 개인으로서 사생활에서도 철두철미한 사람으로 아무런 잡음 없이 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재정경제.기획예산처의 전문가이므로 산업자원부처와 연관성은 없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2007 년 9 월 임명)

: 검찰직 경력이 오래 쌓인 전문가이며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 교체가 있을 때마다 임명대상이 되었었다.

임상규 농림부 장관(2007 년 8 월 임명)

: 노 정권의 과학기술혁신본부 초대 본부장으로 재직 시 농정과 관련 중요한 현안을 잘 해결하면서 노 대통령에게 능력을 인정받았다.

1.3.6)낙선자 배려인사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총 4 명

: 정치적 보상차원에 해당된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인물을 장관자리에 배치한 것이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2005 년 1 월 임명)

: 학부나 경력을 고려해 볼 때 해양수산부 부처에 임명될 수 있는 전문성은 없다. 다만 밝혀진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열린우리당 소속 부산시장 선거 낙선에 따른 낙선자 배려인사로 보여진다.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배려인사’ 또는 ‘보은인사’라고도 칭해졌다.

이재용 환경부 장관(2005 년 6 월 임명)

: 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낙선자 배려인사이다. 그럼에도 dongA.com 신동아 2006.8.1 통권 563 호 p172-185 에서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코드인사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장관은 노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이로 추측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2005 년 3 월 임명)

: 전 정부에서 건설교통부의 차관이었고, 건설 분야에서도 전문 인물이므로 실무형 인사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또 다른 발탁배경으로 열린우리당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점을 볼 때 낙선자 배려 인사로도 보여진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2006 년 12 월 임명)

: 열린우리당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이후로 장관후보의 대열에 속했다.

1.3.7)파격인사: 총 5 명

: "첫 내각의 특징은 개혁 성향의 인물들로 나이와 경력은 물론 여성 장관을 대거 기용하는 등 파격을 원칙으로 삼았다.....중략... 특히 사회.문화 쪽 장관의 인선은 말 그대로 '파격'이다." (매일경제신문 정치부, 2003, 138) 파격인사는 참여정부에서는 개혁을 중심으로 기존의 장관 인선기준에서 벗어나 장관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코드인사와 더불어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이다.

연령과 성 및 서열에서 기존의 인사관행에서 벗어나 발탁된 장관이 속한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기조로 정부의 개혁을 시도하려는 노 대통령의 발상으로 기존의 인사원칙을 탈피해 파격적으로 인사를 기용한 경우이다.

일부 장관은 수집된 정보에 의해 코드인사로 분류되어 있지만 필자는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장관은 파격인사로 분류했으며 동시에 코드인사로 따로 명시했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 년 2 월 임명)

: 44 세로 최연소 장관으로 남해군수의 출신이 장관으로 발탁된 경우는 전례가 없었던 경우로 파격인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김 장관의 신념과 삶이 노 대통령과 비슷하다라는 점을 볼 때 '코드 인사'로도 분류된다. 상징적 대표성 차원.

강금실 법무부 장관(2003 년 2 월 임명):

법무부와 검찰청을 독립시키려는 개혁을 결단한 대통령의 의지로 발탁된 강 장관은 40 대로 첫 여성 장관이며 첫 변호사 출신으로 보수적이고 서열을 중시하는 법무부와 검찰계에서 파격적인 발탁이다. (JOINS 중앙일보 인물정보 2003.2.28) 코드인사로도 분류된다. 전문성 기준.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2003 년 2 월 임명)

: 현역 영화감독이 장관에 발탁된 것은 기존의 인사관행에서 벗어난 경우로 파격적인 인사로 분류될 수도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지지세력인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의 결사적인 중재역할로 이 장관이 발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코드인사'로도 분류된다. 상징적 대표성 차원.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2003 년 2 월 임명)

: 현역 서울대 외교학부 교수로 외교부내에 국장급들이 윤 장관의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서열상 파격적인 인사이다. 노 대통령은 한.미 관계 정립을 위해 기존의 관료보다는 개혁적 인사를 고용했다.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3.2.28 A3) 파격적 인사로 분류되었지만 외교.정치부의 학계 전문가로 능력형 인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의 기준으로는 전문성 인사로 분류된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2006 년 11 월 임명)

: 육군 참모총장이 국방장관으로 직행 승진한 유례가 없어 파격인사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추측되는 발탁배경으로 국방개혁을 위한 정책으로 육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전문성 기준.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2005 년 1 월 임명)

: 재정경제부 수장이 교육부의 수장이 된 사례로 교육정책을 기업식으로 운영해 교육개혁을 시도해보려는 노 대통령의 발상으로 파격인사로 여겨진다. 일반관리성 기준.

1.3.8)정실인사: 총 1 명

: 사적인 정이나 관계로 연결되어 임명이 되는 경우로 상징적 대표성 차원에서 임명된 경우.

이기준 교육부 부총리 겸 장관(2005 년 1 월 임명)

: 현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들과 이해찬 총리의 친분 관계로 임명되어 정실인사라는 의혹을 받았다.

1.3.9).기타사항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2004 년 6 월 임명)

: 언론 정책과 관련 신문시장을 바꿔보려는 노 대통령의 시도라고 전해진다.

장하진 여성부 장관(2005 년 1 월 임명)

: 밝혀진 발탁배경은 없으나 과거에 한국여성 연구소 소장 및 개발원 원장으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어 능력이 인정된 부분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추측되어 지는 인선 배경으로 장관의 집안이 정치,관료,학계등 사회 지도층에 속하고 있고 특히 동생인 장하원이 현재 열린우리당 정책실장으로 여당의 정책 핵심인 인 점을 볼 때 인맥으로 출발된 인사로

보여진다.(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5.1.5 A13) 상징적 대표성 차원으로 보여진다.

한덕수 경제부총리(2005 년 3 월 임명)

: 후보자들과의 경쟁에서 도덕성에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검증된 능력자라기 보다는 ‘약점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인선되었다. 일반관리성 기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2006 년 1 월 임명)

: 특별히 밝혀진 발탁 내용은 없고 관계부처와 연관된 경력을 연관시켜 보면 쌍용그룹의 상무로 지냈고 여당의 경제전문가(dongA.com 동아일보 기사 DB 2006.1.3 A2)로 불리운다. 여당 의원을 내각에 확보하려는 대통령의 의중이 있던 것으로 추측된다. 전문성 기준과 동시에 정치적 보상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2006 년 12 월 임명)

: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출세의 가도에 서기 위해 자신의 신조를 버리고 외교및 안보기조를 노 대통령의 정책에 맞춘다는 정치권의 강한 비판이 있었다. 여.야의 강한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파격 승진 되어 ‘배려인사’라는 논란이 있었다. 한편 국회 청문회에서 ‘친북반미성향’으로 판정되어 임명 ‘불가’판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되어서 대통령의 오기인사로도 분류된다. 전문성 기준.

2. 분석결과

이상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 장관들의 해임과 발탁 배경에 대해서 조사했고 그 발탁과 해임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분석해서 분류해보았다. 다음에 올 내용에서는 조사된 내용과 분류된 범주를 년도 별로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노무현 정부 내각의 해임과 발탁 배경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2.1) 2003 년도의 특징

: 새 정부의 출범으로 발탁된 취임 내각의 발탁배경은 크게 3 가지 유형으로만 분류된다. 19 명의 부처 관리 중에서 50%인 10 명의 장관이 ‘코드인사’로 특징되어 분류되었다. 나머지 50%는 관료.실무형과 능력형으로 분류되었다. 노 대통령은 나름 원칙과 기준으로 장관을 인선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는 보수성향의 안정지향적인 인사를, 경제 분야에는 관료 중심으로 ‘실무.관리형’ 인사를 발탁했다. 그러나 사회.문화 분야에는 개혁성이 보이며 노대통령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파격인사를 발탁했다. (dongA.com 주간동아 2003.6.12 (388 호, p20-22))

취임 초 노대통령은 장관의 임기로 2 년 정도를 보장했는데(db.chosun.com 조선일보 2003.9.18 A5) 2003 년도 당해 취임년도에 9 명이 해임되거나 교체되었다. 대부분이 납득될 만한 나름대로의 교체이유가 있는 반면에 허성관 해양부장관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임명된 점에 대해서 아무런 특별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7 개월도 안되어서 행자부로 이동시킨 일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교체배경과는 달리 2003 년 12 월의 연말개각(개각대상 부처로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은 장관의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합당한 인사교체를 했다. 강동석 건교부장관,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 오명 과기부 장관, 안병영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겸 장관이 내정된 것에 대해서 경륜지사(經綸之士) 형으로 전문성을 갖춘 안정적인 인물이 발탁된 평이 있었으며 첫 출범 내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파격적이고 개혁을 지향한 인사에서 탈피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교육부장관의 발탁은 시작부터 원만치 않았지만 반대여론 없이 내정된 윤덕홍 부총리 겸 장관은 비록 자진 사표이지만 노 대통령이 취임 시 교육부장관과 임기를 같이 하겠다는 공언과는 달리 취임 9 개월 만에 해임되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 정부 집권 5 년의 기간 동안 각각의 19 개 부처가 평균적으로 4 번 교체된 것으로 산출된 반면에 교육부는 6 번의 교체가 있었다. 대통령이 취임 당시 의지했던 바와는 달리 잦은 교체가 있었던 것은 대통령의 불합리한 교체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보여진다. 물론 검증절차에 문제를 드러낸 청와대 인사정책 탓으로 이기준 장관이 5 일 만에 김병준 장관이 18 일 만에 물러난 데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잦은 교체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항시 촉각이 서있는 분야로 지속적인 사회 현안으로 존재하며 교육부의 정책에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2.2)2004 년도의 특징

: 출범 내각 1 년 5 개월이 지난 시점(2004 년 7 월 29 일)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19 개 부처의 장관 중에서 지은희 여성부 장관과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만 제외하고 모든 부처에 교체가 있었다. 2004 년도의 장관교체 이유로 현저하게 보이는 점은 4.15 총선 및 대선출마 등 정치적 이유로 해임된 장관이 6 명이나 된다. 첫째로 김 재정경제부부총리, 권 노동부장관, 한 환경부장관이 4.15 총선에 투입되면서 해임되었다. 둘째로 교체된 장관들 중에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 개각은 전문성을 가진 정세현 통일부장관과 김화중 보건부장관 대신 정동영 장관과 김근태 장관을 각각 내정한 것을 차기 대권주자의 '권력관리용'으로 '정치개각'이었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의 정동채 장관 또한 언론개혁용으로 또 다른 '정치개각'으로 분류된다.

관료.실무형으로 소관부처 승격으로 발탁된 인물이 5 명으로 집계되었다.

2.3)2005 년도의 특징

: 2005 년 1 월 5 일 년초개각이 단행되면서 2003 년 노 대통령의 정부와 출범한 내각 멤버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보통신부의 진대제 장관만 남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최악의 인사로 손꼽히는 이기준 교육부총리는 아들과 본인의 부도덕성이 문제되면서 임명 3 일만에 사퇴하게 되었다. 본인의 부도덕적인 행위는 많은 부분에서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김우식 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해찬 총리와 관련한 개인적 친분으로 발생한 '정실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실인사는 출범내각시 노 대통령이 인선기준에서 금지하겠다고 라는 강한 의지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인사채용에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었다. 이기준 장관의 임명 오류는 노 대통령 정부의 인사정책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전면 개선이 요구되는 계기가 되었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정책도 마련되면서 2006 년 2 월부터 첫 청문회가 실시되었다. 결국 정실인사와 허점이 드러난 인사시스템에 대한 책임의 댓가로 청와대 정찬용 전 인사수석과 박정규 민정수석이 물러나게 되었다.

한편, 2004 년 2 월 임명된 이현재 경제부총리는 임명 당시 검증되지 않은 재산 내역이 2005 년도 들어서 뒤늦게 밝혀지면서 60 억 이상의 재산차익이 드러나게 되었고 아무런 해명도 없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2004 년 임명 당시 인사시스템의 검증 단계에서 재산형성 과정이 제대로 체크되지 않았다는 허점을 보인 것이다.

2005 년도 장관의 교체배경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낙선자 배려인사'이다. 교체된 내각중에서 해임배경에 별다른 사유가 없거나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장관들은 후임자로 내정된 장관들의 발탁배경을 알아보면 해임의 이유를 알 수 있다. 발탁된 인물들이 2004 년 4.15 총선에서 낙선한 인물들이거나 2006 년에 행해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발탁된 것이다. 예를 들어 장승우 해양부장관에 오거돈 낙선자를, 광결호 환경부장관에 이재용 낙선자를 내정되었는데, 이 두 장관은 노 대통령이 정치적 기반이 약한 영남지역에 여당세력을 지지기반으로 세우려는 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발탁되었다. 결국 2006 년 오 장관은 부산시장 후보로, 이 장관은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장관직에서 해임되었다. 이 외에도 허상만 농림부장관의 터무니없는 해임은 대선 때 표를 끌어오는데 공헌한 박홍수 의원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었고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임명 또한 낙선자 배려인사이다.

2005 년이 되면서 여당 출신장관이 전체 장관 19 명중 10 명으로 50%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db.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DB 2005.6.29 A4) 이는 노 대통령 정부 출범때 거의 없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이다. 2005 년 당시 열린우리당에 소속된 장관들을 하기에 열거해보았다. 그 중에서 천정배의원이 법무부장관으로, 김진표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로 2005 년도에 임명되었다.

**2005 년 당시 열린우리당 여당에 소속된 장관들

여당 소속 장관: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박홍수 농림부장관,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천정배 법무부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정동영 통일부장관

선거대비 목적으로 한 예비여당 장관: 이재용 환경부장관,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

2.4)2006 년의 특징

2006 년의 해임배경은 다양하게 분류된다. 그 중에서 지방선거출마용으로 내정된 장관들(오영교 행자부장관, 진대제 정통부장관, 오거돈 해양부장관, 이재용 환경부장관)이 2006 년 5.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동시에 해임되었다. 2004 년부터 시작된 선거출마용 장관에 대한 논란으로 소위 ‘정치내각’이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여당과 청와대 인사들이 장관직에 배치되었다. 여당의 득세를 위해 선거를 이유로 내각이 차출된 경우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dongA.com 동아일보 기사 DB 2006.3.3 A3)지만 노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영남의 지지세력을 다지기 위해 인물을 키워야 한다며 소위 ‘경력관리용’ 또는 ‘선거차출용’ 장관 기용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2006 년도에 열린우리당 출신 장관으로 한명숙 총리와 더불어 이재정 통일부, 박홍수 농림부, 박명재 행자부, 유시민 복지부, 이상수 노동부장관과 정세균 산자부 장관이 있었고, 청와대 출신의 내정자로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청와대 정책실장을,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차장 출신이고, 반기문.윤광웅 장관은 청와대 외교 및 국방 보좌관을,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청와대 혁신수석으로, 김성진 해양부 장관 역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다. 이로써 2006 년은 청와대 참모와 열린우리당 출신이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db.chosun.com 조선일보 DB 2006.7.5 A6)

2006 년도 발탁배경의 분류에 의하면 코드인사가 7 명으로 첫 내각에 이어 다시 강세를 보였다. 보은인사가 3 명, 낙하산 인사 1 명으로 다른 년도와는 달리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이상수 노동장관의 발탁과 관련해 사적 인연과 공적 대의명분을 분별하지 않은 최악의 인사로 대표적 보은인사로 비판되었다.

반면에 꾸준한 숫자를 채웠던 관료.업무형 인사는 단 2 명만 발탁되었지만 전문가를 채용한 능력형 인사는 5 명으로 계속 유지되었다.

2.5)2007 년도의 특징

노 대통령의 임기 6-7 개월을 남겨놓은 시기에 4 명의 장관이 자진 사퇴하였다. 그 중 김성진 해양수산부,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은 맡은 바 업무를 완성했기 때문이고 노준형 정통부,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갑작스러워 의아스러운 사퇴라고 전하지만 임기 마지막 시기에 보은을 입은 장관들을 내정하기 위한 해임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후임으로 내정된 장관들의 주된 특징은 보은 인사가 아닌 관료.실무형이나 전문성을 갖춘 능력형 인사를 내정했다. 이는 노 대통령의 정부가 임기 말에 임박하여 조직의 안정과 업무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12 월에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이해찬 전 총리를 지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기 말 3 개월을 앞두고 9 월에 장관직을 사퇴했다. 이 장관의 사퇴는 비상식적이며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현직장관으로서 직책을 외면하고 다가올 새로운 정부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고려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

IV. 결론

이상은 년도별로 발탁 또는 해임의 특징에 대해 특히 그 해에 두드러진 특징을 집중적으로 다루어보았다. 다음에서는 노 대통령 5 년의 통치기간을 통틀어 해임 및 발탁의 원인 분석으로 집계된 내용을 총체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도표로 작성해 보았다.

도표작성시 발탁배경에 복수 분류로 설정된 것은 가장 앞에 분류된 형태가 자료수집에서 밝혀진 내용이거나 필자가 분석한 바에 의해 성격이 강한 순서대로 앞쪽에 위치시켰다. 예를 들어 파격.능력형 인사로 복수 분류된 경우 두 가지 성격의 특징을 지닌 인사이지만 파격인사의 성격이 강하다는 뜻이다.

다음에서는 도표에 나타난 특징을 중심으로 해임 및 발탁에서 분석된 내용과 함께 간략히 요약해보기로 한다.

1.도표를 통한 범주 요약

번호	부처	장관명	재임 달 수	발탁배경/ 김호균의 임명기준	해임배경/ 김호균의 교체기준
01	FAT	윤영관	11	파격.능력형 인사/전문성	여권내 권력다툼/비귀속책임성(정치적 사유)
02	GAH	김두관	07	파격.코드인사/상징적대표성	여.야간 당파 경쟁/ 비귀속책임성(정치적사유)
03	FE	김진표	13	코드.능력형 인사(여당의원)/전문성	선거출마용/ 비귀속책임성(정치적사유)

04	Ju	강금실	17	파격.코드인사/전문성	기타사항(선거출마 거부)/ 비귀속책임성(기타사유)
05	ND	조영길	17	능력.파격인사/전문성	업무적 과실(문책성)/귀속책임
06	PB	박봉흠	11	관료실무형 인사/전문성	내각개편(직위이동)/비귀속책임(정치적사유)
07	HER	윤진식	10	능력형 인사/전문성	업무적 과실(도의적 책임)/ 비귀속책임(상징적 사유)
08	CTo	이창동	16	파격.코드인사/상징적대표성	정치개각(후임 내정자를 통한 언론개편)/ 비귀속책임(정치적사유)
09	CTr	최종찬	10	관료실무형 인사/전문성	내각개편(자진사퇴)/ 비귀속책임(상징적 사유)
10	ST	박호균	10	능력형 인사/전문성	내각개편(업무미숙)/비귀속성 책임
11	La	권기홍	12	보은.코드 인사/정치적보상차원	총선출마용/비귀속책임(정치적 사유)
12	AF	김영진	05	능력형 인사/전문성	자진사표/비귀속책임(기타사유)
13	HW	김화중	15	코드인사/상징적 대표성	정치개각(내정 후임자 대선출마용)/ 비귀속책임(정치적사유)
14	GE	지은희	23	능력형 인사/전문성	내각개편(2 년임기만료)/비귀속성(상징적사유)
15	IC	진대제	37	코드.능력형 인사/전문성	지방선거출마용/비귀속성(정치적사유)
16	Un	정세현	16	관료실무형 인사/전문성	정치개각(내정 후임자 대선출마용)/ 비귀속성(정치적사유)
17	MAF	허성관	08	보은.코드인사/일반관리성	내각개편(회전문 인사)/비귀속성(정치적사유)
18	En	한명숙	13	코드인사/일반관리성	총선출마용/비귀속성(정치적사유)
19	HER	윤덕홍	09	코드.능력형 인사/전문성	업무적 과실(도의적 책임)/비귀속성(상징적 사유)
발탁기준 2003 년 2 월 28 일, 출범정부 내각 (단, 19 번은 3 월에 임명)					
20	AF	허상만	18	능력형 인사/전문성	내각개편(후임 내정자 보은용, 여당확보)/ 비귀속성 책임(정치적사유)
21	GAH	허성관	21	코드.총선출마용 인사/일반관리성	내각개편(임기만료)/ 비귀속성 책임(상징적사유)
22	MAF	최낙정	14 일	관료실무형 인사/전문성	개인적 업무 과실(발언)/ 귀속성책임(개인스캔달)
23	MAF	장승우	15	관료실무형 인사/전문성	내각개편(후임 내정자 선거출마용)/ 비귀속성 책임(정치적사유)
24	HER	안병영	14	관료실무형 인사/전문성	업무적 과실(민심수습용)/ 비귀속성책임(상징적 사유)
25	CIE	이희범	26	관료실무형 인사/전문성	내각개편(임기만료)/ 비귀속성 책임(상징적사유)
26	CTR	강동석	16	능력형 인사/전문성	개인적 물의/귀속성책임(스캔달)
27	ST	오명	27	능력형 인사/전문성	내각개편(임기만료)/ 비귀속성책임(상징적사유)
발탁기준 2003 년 12 월 30 일까지					
28	FAT	반기문	35	관료실무형 인사/전문성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됨/비귀속성책임
29	PB	김병일	13	관료실무형 인사/전문성	알 수 없음/비귀속성책임(기타사유)

30	FE	이헌재	14	관료실무형 인사/전문성	개인적 물의(부동산 투기 의혹)/ 귀속성책임
31	La	김대환	25	코드.능력형 인사/전문성	내각개편(후임자 보은용)/비귀속성책임
32	En	곽결호	17	관료실무형 인사/전문성	알 수 없음(후임 내정자 선거출마용)/ 비귀속성책임(기타사유)
33	CTo	정동채	22	기타사항(언론개혁주도),여당의원/ 기타사항	내각개편(임기만료)/ 비귀속성책임(상징적사유)
34	HW	김근태	19	대선주자 수업용 인사,여당의원/ 정치적 보상차원	대선출마용/ 비귀속성책임(정치적사유)
35	Un	정동영	19	대선주자 수업용 인사,여당의원/ 정치적 보상차원	대선출마용/ 비귀속성책임(정치적사유)
36	Ju	김승규	12	관료실무형 인사/전문성	내각개편(직위이동)/ 비귀속성책임(정치적사유)
37	ND	윤광웅	28	코드.능력형 인사/전문성	업무적 과실/귀속성책임
38	ST	오명	27	27 번과 상동(27 번은 장관이고 38 번은 부총리겸 장관으로 부처명이 변경됨)	
발탁기준 2004 년 12 월 30 일까지					
39	GAH	오영교	15	밝혀진 내용 없음	지방선거출마용/비귀속책임성(정치적사유)
40	PB	변양균	19	관료실무형 인사/전문성	내각개편(직위이동)/ 비귀속책임성(정치적사유)
41	HER	이기준	5 일	정실인사/상징적 대표성	개인적 물의(도덕성 하자)/ 귀속책임(스캔달)
42	HER	김진표	19	파격.코드인사(여당의원)/일반관리성	국회로 복귀/비귀속책임성(정치적사유)
43	AF	박홍수	32	보은인사(여당의원)/정치적보상차원	알 수 없음/비귀속책임성(기타사유)
44	GE	장하진	38	기타사항(인맥인사)/상징적 대표성	임기말까지/비귀속책임성(정치적사유)
45	MAF	오거돈	15	낙선자 배려 인사/정치적 보상차원	지방선거출마용/비귀속책임성(정치적사유)
46	FE	한덕수	17	기타사항(약점경쟁에서 우위)/일반관리성	개인적 물의(리더십 미숙)/ 귀속책임(부처업무책임)
47	CTr	추병직	20	낙선자 배려, 실무형 인사/전문성	개인적 업무 과실/ 귀속책임(부처업무책임)
48	Ju	천정배	14	코드인사(여당의원)/전문성	국회로 복귀/비귀속책임(정치적사유)
49	En	이재용	10	낙선자 배려.코드인사/정치적 보상차원	지방선거출마용/비귀속책임(정치적사유)
50	GEF	장하진	38	44 번과 상동(44 번은 여성부 50 번은 여성가족부로 명칭 변경)	
발탁기준 2005 년 12 월 30 일 까지					
51	CIE	정세균	11	밝혀진 내용 없음(여당의원)/ 전문성.정치적 보상차원	국회로 복귀/비귀속책임(정치적사유)
52	ST	김우식	25	코드.능력형 인사/전문성	임기말 까지/비귀속책임(정치적사유)
53	La	이상수	25	보은.코드인사(여당의원)/ 정치적 보상차원	임기말 까지/비귀속책임(정치적사유)
54	HW	유시민	16	코드.보은.정실인사(여당의원)/ 정치적 보상차원	자진사퇴/비귀속책임(기타사유)
55	Un	이종석	10	코드인사/전문성	업무적 과실(문책성)/귀속책임
56	GAH	이용섭	10	능력형 인사/전문성	내각개편(회전문 인사)/비귀속책임
57	CTo	김명곤	15	코드.능력형 인사/전문성	알 수 없는 자진사퇴/비귀속책임

58	IC	노준형	18	관료실무형 인사/전문성	알 수 없음/비귀속책임(기타사유)
59	MAF	김성진	15	능력형 인사/전문성	알 수 없는 자진사퇴/비귀속책임(기타사유)
60	En	이치범	18	보은.능력형 인사/전문성	자진사퇴(대통령 후보지지)/ 비귀속책임(정치적사유)
61	FE	권오규	20	코드인사/전문성	임기말 까지/비귀속책임(정치적사유)
62	PB	장병완	20	관료실무형 인사(여당의원)/전문성	임기말 까지/비귀속책임(정치적사유)
63	HER	김병준	18 일	코드인사/전문성	개인적 물의(학계 비리)/ 귀속책임(도덕성문제)
64	Ju	김성호	12	능력형 인사/전문성	개인적 과실(발언)/귀속책임(개인스캔달)
65	HER	김신일	18	능력형 인사/전문성	임기말까지/비귀속책임(정치적사유)
66	ND	김장수	15	파격인사/전문성	임기말까지/비귀속책임(정치적사유)
67	FAT	송민순	14	기타사항(배려.오기인사)/전문성	임기말까지/비귀속책임(정치적사유)
68	GAH	박명재	14	낙선자 배려인사/정치적 보상차원	임기말까지/비귀속책임(정치적사유)
69	CTr	이용섭	15	능력형/전문성	임기말까지/비귀속책임(정치적 사유)
70	Un	이재정	15	보은.코드.오기인사(여당의원)/ 정치적 보상차원	임기말까지/비귀속책임(정치적사유)
발탁기준 2006 년 12 월 30 일까지					
71	CIE	김영주	13	능력형 인사/전문성	임기말까지/비귀속책임(정치적사유)
72	CTo	김종민	09	관료실무형 인사/전문성	임기말까지/비귀속책임(정치적사유)
73	MAF	강무현	10	관료실무형 인사/전문성	임기말까지/비귀속책임(정치적사유)
74	HW	변재진	09	관료실무형 인사/전문성	임기말까지/비귀속책임(정치적사유)
75	AF	임상규	07	능력형 인사/전문성	임기말까지/비귀속책임(정치적사유)
76	Ju	정성진	06	능력형 인사/전문성	임기말까지/비귀속책임(정치적사유)
77	IC	유영환	06	관료실무형 인사/전문성	임기말까지/비귀속책임(정치적사유)
78	En	이규용	06	관료실무형인사/전문성	임기말까지/비귀속책임(정치적사유)
발탁기준 2007 년 9 월 말까지/2008 년 2 월 28 일 새 정부 출범으로 전 내각 교체					

2.종합요약 및 결론

노 대통령의 임기를 초기.중기.말기 3 단계로 나누어 볼 때 위의 도표에서 한 눈에 보여지는 것은 초기 출범시기에는 비록 코드.파격형 인사 성격이 강하지만 능력 있는 관료들이나 업무충실 실무형 관료들이 발탁되었다. 그러나 중기에 접어들면서 내각의 교체 배경에서 정치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알아보면 2004 년 4.15 총선에서 낙선된 장관을 배려하거나 2004 년 3 월 대통령 탄핵사건이 있던 뒤 여대야소를 목표로 여당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당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2005 년 5.13 지방선거출마용 장관을 임명하였다. 중기나 말기에 지속적으로 보은인사가 이어졌고 말기에 들어서는

다시 코드인사와 실무관료형 인사가 강세를 보이면서 출범초기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에서는 위 도표에서 나타난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선거출마와 보은성 인사로 발탁된 장관은 각각 9 명, 7 명이며 비귀속성 책임에 속한다.

선거출마, 낙선자배려인사, 보은인사를 목적으로 발탁 및 해임된 장관들은 노 대통령의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중요한 장관의 자리에 경쟁력을 갖춘 전문 관료인을 등용하지 않아 인사원칙인 적재적소의 원칙에 합당치 못한 인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업무적 과실에 따른 해임은 6 명, 개인적 과실에 따른 해임은 7 명으로 그 중에서 귀속성 책임에 속하는 해임은 11 건이다.

내각개편용(비귀속성책임)으로 집계된 해임은 15 명이지만 내각 개편의 본래 의도 대로 다루어져 보통 장관의 임기 약 2 년을 만기했거나(5 명) 다른 부서로 이동되었거나(5 명), 해당 부처의 풀리지 않는 만성적 문제를 해결하려 새로이 장관을 교체한 경우는 2 명이다. 다른 3 명(장 해양부장관, 허 농림부장관, 김 노동부장관)은 발표된 내용만 내각개편용일 뿐 다른 의도로 해임이 되었다.

당파간의 경쟁이나 여권 내 권력다툼으로 인한 해임은 단 2 건으로 정치적사유에 해당되며 비귀속성책임을 띈다.

기타사항으로 해임된 배경은 자진사퇴 5 명, 총선출마를 거절한 이유로 해임된 강금실 장관 1 명, 정치개각을 목적으로 교체된 3 명의 장관과 알 수 없는 해임 4 명은 해임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개각으로 소개되었다. 위에서 설명된 바 와 같이 해임이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그 후임자로 새로이 발탁된 장관이 선거 또는 대선출마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광결호 환경부장관의 해임은 이재용 장관을 여당의 지방선거에 출마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국회로 복귀하면서 사의를 밝힌 3 명의 장관은 발탁 때부터 노 대통령이 여당위원을 장관에 임명한 의도이다. 현역 여당위원이 장관으로 임명된 집계는 총 12 명이다. 그 외에 노 대통령의 임기만료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체된 경우는 18 건이다.

발탁배경에서 가장 많이 집계된 것은 코드인사로 총 16 명이지만 파격인사와 보은인사의 성격이 있는 장관 6 명은 코드인사에서 따로 분류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나, 도표에서 보여지는 바로도 코드인사는 총 22 명이다. 수집된 자료에서 코드인사로 분류되어 있지만 필자가 탐구한 내용으로 경력상 능력형 인사로도 보여지는 7 명을 능력형인사로 따로 명시했다. 코드인사는 노 정부 출범초기에 강세를 보이다가 집권중반에는 주춤했지만

2006 년도 집권 후기에 유시민. 김병준 장관 등 대통령 측근(dongA.com 신동아 2006.8.1 통권 563 호 p172-185)이 내정되면서 다시 강세를 보였다.

노 대통령이 실험적으로 시도했던 코드형과 파격형 장관들의 기용은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는 기존의 장관 임명 관행에서 탈피한 방법으로 관료사회를 개방형 조직으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도 있다. (db.chosun.com 조선일보기사 DB 2004.7.29. A3)

보은인사(정치적보상)는 총 6 명인데 권기홍 장관은 발탁배경으로는 보은.코드인사에 속하지만 해임배경으로는 총선출마용이다. 총선 및 대선출마용은 발탁배경으로는 단지 3 명으로 집계 되었지만 해임배경에 의하면 총 9 명이다.

낙선자 배려인사가 총 4 명이고, 파격인사가 총 7 명, 정실인사가 2 명 등으로 집계되었다. 집권말기에 청문회 결과 ‘임명불가’로 판정된 송민순 장관과 이재정 장관이 임명되면서 오기인사에도 2 명이 집계되었다. 이상은 참여정부의 특징을 살려 정리된 요점이다.

다음에서는 선행연구가 김호균이 분류한 범주 내에서 도표에 맞추어 정리하기로 한다.

우선 임명기준에 따른 분류로 첫째 소관부처에 해당되는 학력을 겸비한 전문인사나 소관부처 내의 승격인사인 관료.실무형인사는 전문성을 기준으로 임명된 인사로 총 54 명으로 집계되었다. 둘째 낙선자 배려나 보은인사 등 정치적 보상차원에서 임명된 경우는 11 명이다. 셋째 관련부처와 연관이 없는 인물이 임명된 일반관리성 인사는 5 명이고 이들은 주로 코드인사에 속한다. 넷째로 여성을 임명하거나 특정연고를 고려한 상징적 대표성 인사는 총 5 명이다.

다음으로 해임사유에 따라 김호균이 분류한 범주를 정리해보면 크게 귀속성과 비귀속성으로 나뉘어진다. 먼저 귀속성을 띠는 범주에 해당되는 범주는개인의 도덕적 문제나 스캔들로 경질된 장관이 총 8 명이고 부처업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경우는 총 6 명 중 4 명이다. 나머지 2 명은 자신의 실수가 아닌 민심수습용이나 도의적인 책임으로 해임된 경우로 상징적 사유이며 비귀속성을 띤다. 정치적 사유로 장관이 교체된 경우는 비귀속성 책임으로 총 44 건으로 집계되었으나 그 중에서 18 명이 노무현 정부가 마감되면서 새로운 정부의 출현으로 교체된 경우이다.

노무현 정부가 코드인사, 파격인사, 오기인사, 낙선자 배려인사, 보은인사, 선거출마용 등 장관인사의 배경에 부정적인 요인이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성을 기준으로 임명된 경우가 54 명으로 이는 총 76 명에서 71%에 해당되는 인물이 적절하게 임명된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참고 자료

인터넷 자료

1. 노대통령이 밝힌 조각배경 "장관 임기 최소 2 년은 보장 법조계 서열 존중의무 없어" 최원규 발행일 : 2003.02.28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2&D=28&ID=0302280401 (2011.12.26)
2. 노무현 첫 내각 출범 / 화제의 인물 3 인방성수 김명환 강인범 발행일 : 2003.02.28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2&D=28&ID=0302280402 (2011.12.26)
3. [윤덕홍 신임 교육부총리 누구] '私學민주화' 주도...분규현장 '마당발' 발행일 2003-03-07 기고자 이인철 최영해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30708458375015> (2011.12.15)
4. [내각] 교육부총리 인선 "원점에서..." "10 일가량 더 걸릴듯" 발행일 2003-03-01 기고자 이인철 최영해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30104418335516> (2011.12.15)
5. 정치 인사이드:/ 노무현정부 내각 인선 뒷얘기; '강금실 법무 유력' 보도에... 검사들 "정말이냐" 전화통 불나 발행일 : 2003.03.01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3&D=01&ID=0303010401 (2011.12.27)
6. [정계 비화] 여권 핵심인사가 털어놓은 '노무현 人事' 뒷이야기 "고영구씨는 나와 껄끄러운 사인데..." "정상명만큼은 내 뜻대로..."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5/03/23/200503230500002/200503230500002_1.html (2011.12.1)
7. [아들 이중국적 논란] 陳정통 해명 오락가락... "한국국적 포기" → "시기놓쳐 이중국적"... 발행일 2003-03-05 기고자 공종식 길진균 최영해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30504458360978> (2011.12.15)
8. [법직] 김두관 장관 지방공무원법 위반 드러나 발행일 2003-03-06 기고자 김성규 황진영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30601458368854> (2011.12.15)
9. [金행자, 군수-신문사대표 겸직 파문] 상대후보 비방기사 실어 배포 발행일 2003-03-06 기고자 김성규 황진영 유재동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30630458368908> (2011.12.15)
10. [행정] 김두관 행자 선거법위반 전과자"... 한나라 자진사퇴 촉구 발행일 2003-03-07 기고자 김승련 기자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30705458375070> (2011.12.15)
11. [대해부 | 노무현 정권의 파워엘리트 (상)] 노무현 정권의 파워엘리트 WHO'S WHO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3/03/26/200303260500043/200303260500043_1.html (2012.1.21)
12. [정당] 한나라 "陳정통-金행자 해임해야" 발행일 2003-03-10 기고자 이종훈기자 섹션면 A2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31002418393562> 2013.1.17
13. [사회] 경실련, 陳정통 사퇴 촉구 발행일 2003-03-11 기고자 손효림기자 섹션면 A31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31131458398619> 2013.1.17
14. 陳장관 장남 병역 고의기피 의혹 발행일 2003-03-14 기고자 박민혁 섹션면 A31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31431508420594> 2013.1.17
15. [盧 '아들병역' 이중잣대] 장상씨 부결땀 "앞으로도 같은 잣대적용" - 陳장관 파문엔? 발행일 2003-03-07 기고자 최영해 기자 섹션면 A5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30705458375208> 2013.1.17
16. [陳장관 의혹] 민주당, "陳장관은 물러나야" 청와대에 제기 발행일 2003-03-08 기고자 김승련 이승현 섹션면 A1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30801508380006> 2013.1.17
17. 교육부총리에 윤덕홍씨 최훈 기자 (중앙일보 2003.3.7) http://bill.join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695... (2012.4.22)
18. (노무현정부 組閣) 진대제 정통: 삼성전자 사장 출신... 官에 연고 없어 (중앙일보 2003.2.28) http://bill.join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442... (2012.5.11)
19. (노무현정부 組閣) 김화중 보건: 대선때 盧 후보의 보건의료 특보 (중앙일보 2003.2.28) http://bill.join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607... (2012.5.9)
20. (새 각료 프로필) 김진표 재경 (중앙일보 2003.2.28) http://bill.join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108... (2012.4.22)
21. (노무현정부 組閣) 김영진 농림: 農高출신 4 선... 농수산 委서만 15 년 (중앙일보 2003.2.28)

- http://bill.joins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151... (2012.5.8)
22. (노무현정부 組閣)권기홍 노동:대구 選 對본부장 맡아...진보성향 학자 (중앙일보 2003.2.28)
http://bill.joins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320... (2012.5.8)
23. (노무현정부 組閣)박호균 과기:KIST 구조조정 주도...과묵한 편 (중앙일보 2003.2.28)
http://bill.joins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525... (2012.3.28)
24. (노무현정부 組閣)최종찬건교:아이디어 풍부한 정책기획통 (중앙일보 2003.2.28)
http://bill.joins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407... (2012.3.12)
25. (노무현정부 組閣)영화감독 출신 이창동 문화장관:케주얼 입고 임명장 받은 '자유인' (중앙일보 2003.2.28)
http://bill.joins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423... (2012.5.8)
26. (노무현정부 組閣)윤진식 산자:재무부 요직 거쳐...산자부 업무 생소 (중앙일보 2003.2.28)
http://bill.joins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101... (2012.5.9)
27. (노무현정부 組閣)박봉흠 기획예산처:정치권과 교분 두터운 예산전문가 (중앙일보 2003.2.28)
http://bill.joins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107... (2012.5.14)
28. (노무현정부 組閣)이장.군수출신 김두관 행자장관:인생역정 닮은꼴 '리틀 노무현' (중앙일보 2003.2.28)
http://bill.joins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641... (2012.5.14)
29. (노무현정부 組閣)윤영관 외교:합리주의자 評...부처 장악력 미지수 (중앙일보 2003.2.28)
http://bill.joins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598... (2012.5.11)
30. 부안郡 “核폐기장 유치 철회” 경고金농림 새만금 중단 항의사표... 盧대통령, 반려 김창곤 이동혁 발행일 : 2003.07.17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17&ID=0307170105 (2012.7.1)
31. 김영진 농림장관 사표 오늘 수리 신정록 발행일 : 2003.07.18 / 종합 A2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18&ID=0307180206 (2012.7.1)
32. 농림장관 후보 3 명 심야면접 최원규 발행일 : 2003.07.24 / 종합 A2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24&ID=0307240205 (2012.7.1)
33. 청와대, 한총련 합법화 재확인 신정록 안윤균 발행일 : 2003.08.12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8&D=12&ID=0308120104 (2012.7.2)
34. 野, 김두관행자 해임건의案 20 일 처리 민주 합승회의원도 장관 경질 촉구 허용범 발행일 : 2003.08.13 / 종합 A2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8&D=13&ID=0308130204 (2012.7.2)
35. “金행자 해임표결 방해땐 청와대 5 자회동 재고” 허용범 발행일 : 2003.08.30 / 종합 A2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8&D=30&ID=0308300204 (2012.7.2)
36. [정치 인사이드] 김두관장관 해임안 표결 D-2 허용범 발행일 : 2003.09.01 / 종합 A5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01&ID=0309010501 (2012.7.2)
37. 한나라, 김두관 해임안 내일 표결강행청와대 “개별설득” 野 “표단속” 총력전 허용범 권대열 발행일 : 2003.09.02 / 종합
 A5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02&ID=0309020501 (2012.7.2)
38. 金행자 해임案 내일 처리 한나라, 본회의 보고 허용범 이항수 발행일 : 2003.09.02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02&ID=0309020103 (2012.7.2)
39. 金斗官 해임안 오늘 국회처리..., 청와대-한나라 맞비난戰 신정록 허용범 발행일 : 2003.09.03 / 종합 A5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03&ID=0309030501 (2012.7.2)
40. 야 왜 김장관 해임시키려 하나, “한총련시위·U 대회 남북충돌 문책” 권대열 발행일 : 2003.09.03 / 종합 A5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03&ID=0309030502 (2012.7.2)
41. 金斗官행자 해임안 가결, 청와대 거부시사... 金장관 “대통령 뜻 따를것” 허용범 신정록 발행일 : 2003.09.04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04&ID=0309040101 (2012.7.2)
42. 청와대·金장관 신정록 이항수 발행일 : 2003.09.04 / 종합 A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04&ID=0309040301 (2012.7.2)
43. 崔대표 “金행자 해임안 거부는 違憲”, 盧대통령 “헌법재판소 판단 받아봐야” 신정록 발행일 : 2003.09.05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05&ID=0309050104 (2012.7.2)
44. “金행자는 이미 해임된것 장관 자격으로 국회못와” 허용범 발행일 : 2003.09.08 / 종합 A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08&ID=0309080302 (2012.7.1)
45. 金행자 해임 사실상 거부 盧대통령 “國監후 결단... 호락호락 받지는 않을것” 신정록 발행일 : 2003.09.08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08&ID=0309080101 (2012.7.1)

46. 金행자 “與野 모두 쓰레기 집단”정우상 발행일 : 2003.09.09 / 종합 A2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09&ID=0309090203 (2012.7.1)
47. “金행자 사표내면 수리”최원규 발행일 : 2003.09.14 / 종합 A2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14&ID=0309140203 (2012.7.1)
48. 金행자 “17 일쯤 사표낼것”이항수 발행일 : 2003.09.15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15&ID=0309150104 (2012.7.1)
49. “장관이 정치발언 하고다니니 공무원 재해대응 엉망아니냐”국회, 김두관行自 질타 안용균 발행일 : 2003.09.16 / 종합 A6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16&ID=0309160604 (2012.7.1)
50. “대통령은 태풍때 오페라 보면 안되나” 이동혁 발행일 : 2003.09.27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27&ID=0309270103 (2012.7.5)
51. “오페라 발언 죄송” 崔해양 공식 사과이길성 발행일 : 2003.09.30 / 종합 A6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30&ID=0309300605 (2012.7.5)
52. “초·중·고 12 년 동안 존경하는 선생님 없어... 몇놈 교장·교감된들 의미있나” 崔 해양장관... 특강중 교사들 퇴장하자 큰절 이길성 발행일 : 2003.10.02 / 사회 A6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10&D=02&ID=0310020601 (2012.7.5)
53. 최낙정 해양부장관 14 일만에 경질 崔 前장관 “초보운전자가 人命사고 내” 이길성 발행일 : 2003.10.03 / 종합 A2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10&D=03&ID=0310030201 (2012.7.5)
54. “공무원도 좀 튀어야 공직사회 개혁·변화 가능” 정재홍 기자 (중앙일보 2003.7.30)
http://bill.joins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187... (2012.3.12)
55. 좌충우돌 자청한 ‘튀는 장관’ 정재홍 기자(중앙일보 2003.9.25)
http://bill.joins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187... (2012.3.12)
56. 신임行自 허성관 검토 최원규 발행일 : 2003.09.16 / 종합 A6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16&ID=0309160603 (2012.7.1)
57. 행자부장관 허성관, 해양부장관 최낙정최원규 발행일 : 2003.09.18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18&ID=0309180104 (2012.7.1)
58. 행자부장관 빠진 水災복구회의현직 김두관 지방行... 내정 허성관은 해양부에 한재현 발행일 : 2003.09.19 / 종합 A6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19&ID=0309190604 (2012.7.1)
59. 행자장관 사표 수리도 않고 새장관 내정 盧대통령·허성관장관 ‘각별한 인연’최원규 발행일 : 2003.09.18 / 종합 A5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18&ID=0309180504 (2012.7.2)
60. 인사]장관人事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발행일 2003-09-18 기고자 최영해기자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91804409613763> (2012.7.5)
61. [인사]해양부장관 장승우씨 내정 발행일 2003-10-14 기고자 김정훈기자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101402409786666> (2012.7.5)
62. [특집 | 하투(夏鬪) 태풍 강타] ‘꼬리 문 파업’ ... 勞·政 정면충돌
 노동계 “철도 노조 강경대응 규탄 전면전” ... 정부 “명백한 불법, 더 이상 양보 못한다”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발행일 : 2003 년 07 월 10 일 (392 호) 쪽수 : 30 ~ 30 쪽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03/07/03/200307030500027/200307030500027_1.html 2012.10.26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경질건에 해당되는 기사임)
63. 최종찬 장관은.... 김중윤 기자 (중앙일보 2003.9.19)
http://bill.joins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407... (2012.3.12)
64. 3 개부처 改閣과학기술 오명 건설교통 강동석 예산처 김병일 정책실장 박봉흠신정록발행일 : 2003.12.29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12&D=29&ID=0312290101 2012.10.26
65. 산자장관 이희범씨 윤덕홍부총리 辭意 정우상 발행일 : 2003.12.16 / 종합 A1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12&D=16&ID=0312160103 (2012.7.5)
66. 새 산자부 장관에 이희범씨

http://bill.joins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594... (2012.5.9)

67.이희범 신임 산자부장관은발행일 : 2003.12.16 / 종합 A9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12&D=16&ID=0312160903 (2012.7.5)

68. 윤덕홍 교육부총리 사표 제출"대통령이 총선 도와달라 했다"

http://bill.joins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695... (2012.4.22)

69. 교육부총리 안병영씨 28 일쯤 일부장관 교체 신청록 발행일 : 2003.12.24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12&D=24&ID=0312240102 (2012.7.5)

70. 안병영교육 임명'盧비판론자' 등용... 코드人事 바뀌나 박중현 정우상 발행일 : 2003.12.24 / 종합 A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12&D=24&ID=0312240302 (2012.7.5)

71. '같이간다'던 교육부총리 '중도하차' 입력 : 2003.12.17 16:40 / 수정 : 2003.12.17 16:50 (서울=연합뉴스)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121770306 2012.11.24

72. 교총-전교조 "교육장관 경질반대" 성명 기사입력 2003-12-16 00:10:00 기사수정 2009-09-28 02:25:45 홍성철기자

<http://news.donga.com/3/all/20031216/8011308/1> 2012.11.26

73. 코드 대신 경률택한 '연말改閣'청와대 "끼리끼리 아닌 국민민복에 맞춰" 새해초 총선용 추가개편... 野 "땀질 개각"

신청록 발행일 : 2003.12.29 / 종합 A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12&D=29&ID=0312290303 (2012.7.5)

74. 입각자 프로필발행일 : 2003.12.29 / 종합 A6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12&D=29&ID=0312290603 (2012.7.5)

75. [프로필]오명 과학기술부 장관 外 발행일 2003-12-29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122904401266179> (2012.7.6)

76.[정치]3 개 부처 장관 교체 발행일 2003-12-29 기고자 김정훈 차지완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122903451265417> (2012.7.6)

77.[정치]3 개부처 개각 발행일 2003-12-29 기고자 김정훈 이승헌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122901451267328> (2012.7.6)

78."외교장관등이 盧대통령 對美정책 비판" 투서 청와대, 관련자 10 여명 집중조사이하원 발행일 : 2004.01.12 / 종합 A2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1&D=12&ID=0401120203 (2012.7.6)

79. [청와대 대대적 조사 배경-전말]외교부 對美라인 軍紀잡기 나섰나 신청록 발행일 : 2004.01.13 / 종합 A3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1&D=13&ID=0401130301 (2012.7.6)

80. "私席서 盧대통령·NSC 노골적 비난" 외교부 3~4 명 징계방침신청록 발행일 : 2004.01.13 / 종합 A1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1&D=13&ID=0401130101 (2012.7.6)

81.]외교관 조사파문 전말]청와대, 발언내용 손금보듯... 내부제보 가능성 권경복 발행일 : 2004.01.14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1&D=14&ID=0401140405 (2012.7.6)

82. 청와대, 북미 3 과장 징계 요구신청록 발행일 : 2004.01.14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1&D=14&ID=0401140104 (2012.7.6)

83. 盧대통령.'외교스승' 尹장관, 만남에서 이별까지파병案 대통령에 퇴짜맞자 평소 술안먹던 尹장관 폭음 권경복

발행일 : 2004.01.16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1&D=16&ID=0401160401 (2012.7.6)

84. 윤영관 외교장관 문책 경질 "자주적 외교 못했다"박두식 발행일 : 2004.01.16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1&D=16&ID=0401160102 (2012.7.6)

85. 새 외교장관에 '미국통' 반기문씨 파월 "미국은 潘장관 취임 환영"주용중 신청록 발행일 : 2004.01.17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1&D=17&ID=0401170102 (2012.7.6)

86. [행정]3 개부처 개각...건교 조우현-예산처 변양균씨 유력 발행일 2003-12-27 기고자 최영해 김정훈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122702451262778> (2012.7.6)

87. 盧대통령, 이헌재씨와 청와대 오찬 새 비서실장 人選관련 주목신청록 발행일 : 2004.02.03 / 종합 A5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2&D=03&ID=0402030504 (2012.7.9)

88.이헌재 새경제부총리 인터뷰"성장 우선의 경제정책 펴겠다" 신청록 박용근 발행일 : 2004.02.11 / 종합 A5 면

-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2&D=11&ID=0402110502 (2012.7.9)
89. 신임장관급 프로필▶김대환 노동부장관 사회참여형 학자로 통해발행일 : 2004.02.11 / 종합 A5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2&D=11&ID=0402110504 (2012.7.9)
90. 경제부총리 이헌재씨:2004.02.11/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2&D=11&ID=0402110104 (2012.7.9)
91. '親勞' 성향...노정부에 쓴소리도 (JOINS 인물정보) 중앙일보 2004.3.12
http://bill.joins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212... (2012.5.8)
92. 환경부장관 광결호씨신정록 발행일 : 2004.02.18 / 종합 A1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2&D=18&ID=0402180106 (2012.7.9)
93. 행정 고건총리 사의 표명...후임 김혁규씨 유력 발행일:2004.5.15 A1 기고자 김정훈기자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51501502300402> 2012.7.9
94. 사설 여당이 장관자리 분양하는가 발행일:2004.5.19 A2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51902502323958> 2012.7.9
95. 高총리 사표제출 각료제청 거부... 改閣 내달로 미뤄져신정록 발행일 : 2004.05.25 / 종합 A1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5&D=25&ID=0405250101 2012.7.9
96. "청와대 헌법경시 度가 지나쳤다"신호섭 발행일 : 2004.05.25 / 종합 A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5&D=25&ID=0405250303 2012.7.9
97. 새 총리후보 이혜찬 盧대통령 지명... 11 일 임명동의안 제출신정록 발행일 : 2004.06.09 / 종합 A1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6&D=09&ID=0406090103 2012.7.9
98. 이혜찬총리 인준안 가결오늘 3 개부처 개각... 국회 院구성 타결 김홍진 발행일 : 2004.06.30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6&D=30&ID=0406300103 2013.1.26
99. 이혜찬 총리제체 오늘 출범실세총리·차기주자 포진 '정치內閣' 신정록 황성혜 발행일 : 2004.06.30 / 종합 A5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6&D=30&ID=0406300502 2013.1.26
100. 정치에 휘둘리는 '이상한 개각'신정록 발행일 : 2004.05.22 / 종합 A6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5&D=22&ID=0405220601 2012.7.9
101. '언론 개혁용' 문화장관?盧대통령, 정동채 조기낙점 배성규 발행일 : 2004.07.01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7&D=01&ID=0407010402 2012.7.9
102. 김선일씨 피살 충격과내달 문책성 '추가 改閣' 가능성 신정록 발행일 : 2004.06.28 / 종합 A5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6&D=28&ID=0406280501 (2012.7.9)
103. 윤광웅 국방장관盧대통령 고교선배... 51 년만에 해군출신 장관 발행일 : 2004.07.29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7&D=29&ID=0407290404 (2012.7.9)
104. 막판 '이혜찬 변수'로 改閣구도 변화 가능성 박두식 발행일 : 2004.06.29 / 종합 A6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6&D=29&ID=0406290602 (2012.7.9)
105. 통일장관 鄭東泳보건복지 金權泰 문화관광 鄭東采 신정록 발행일 : 2004.07.01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7&D=01&ID=0407010106 (2012.7.9)
106. 김승규 법무장관"청렴한 원칙주의자" 評... 大田법조비리 수사 발행일 : 2004.07.29 / 종합 A4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7&D=29&ID=0407290403 (2012.7.9)
107. [인사]강금실 법무 전격교체...강장관 1 년 5 개월 명암 발행일 2004-07-29 기고자 이상록 황진영 이수형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72905452859367> (2012.7.10)
108. "권력기관 장악력 강화" 盧대통령, 법무 金昇圭·국방 尹光雄 임명신정록 발행일 : 2004.07.29 / 종합 A1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7&D=29&ID=0407290102 2012.7.9
109. 1·4 개각"시끄러운 곳엔 희생양"... 人事원칙도 교체 신정록 발행일 : 2005.01.05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1&D=05&ID=0501050401 2012.7.10

110. 작은 개각... 큰 화제두번째 南海출신 '里長 장관' 김두관 前장관 이어 박홍수 농림부 장관 이명진 발행일 : 2005.01.05 / 사회 A1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1&D=05&ID=0501051302 2012.7.10
111. 윤진식 산자장관 '부안사태'로 사의 PRESSian 2003.12.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07896> 2012.7.6
112. 윤진식 산자부장관 사의표명 서울경제 2003.12.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0012490> 2012.7.6
113. 꼬리 문 파업' ... 勞-政 정면충돌 발행일 : 2003 년 07 월 10 일 (392 호) 쪽수 : 30 ~ 30 쪽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03/07/03/200307030500027/200307030500027_1.html (2012.7.6)
114. 과기부 장관 이르면 9 월 부총리로 승격이영완 발행일 : 2004.07.28 / 종합 A8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7&D=28&ID=0407280804 (2012.7.9)
115. 한총련, 美軍훈련장 진입 전국 곳곳 기습 反美시위안석배 김정훈 발행일 : 2003.08.08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8&D=08&ID=0308080102 (2012.7.2)
116. 한총련合法化 당분간 유보신정록 안용현 발행일 : 2003.08.11 / 종합 A1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8&D=11&ID=0308110102 (2012.7.2)
117. 정부, 한총련 강·온파 분리대응할 듯박세용 한재현 발행일 : 2003.08.11 / 종합 A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8&D=11&ID=0308110301 (2012.7.2)
118. 태풍 강타 100 여명 사망·실종 原電 5 곳 가동중단... 147 만가구 한때 停電사태박원수 권상은 발행일 : 2003.09.14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14&ID=0309140101 (2012.7.2)
119. 오늘 5 개部處 개각교육·행자·산자·여성 등 교체할듯 신정록 발행일 : 2005.01.04 / 종합 A1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1&D=04&ID=0501040103 (2012.7.10)
120. 새 외교장관에 반기문씨
http://bill.join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623... (2012.5.11)
121. 윤광웅 보좌관, 새 국방에 내정 “청와대 - 군 가교 역할 기대
http://bill.join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695... (2012.4.22)
122. 신임 장관(급)인사 프로필
http://bill.join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104... (2012.4.22)
123. 예산처장관 변양균씨발행일 : 2005.01.28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1&D=28&ID=0501280102 (2012.7.10)
124. 이기준 교육부총리, 아들 병역·사외이사 등 도덕성 논란 해명 “내가 부족...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박중현 발행일 : 2005.01.05 / 종합 A2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1&D=05&ID=0501050202 (2012.7.10)
125. 교육 부총리 이기준씨
http://bill.join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894 (2012.4.22)
126. 교육 부총리 이기준씨
http://bill.join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777 (2012.5.11)
127. '이기준 공격' 다른 과녁있나신정록 발행일 : 2005.01.06 / 종합 A6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1&D=06&ID=0501060601 (2012.7.10)
128. 이기준 부총리 전격사퇴 장남 延大 정원外입학등 의혹 불거지자... 취임 3 일만에신정록 박중현 발행일 : 2005.01.08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1&D=08&ID=0501080101 (2012.7.10)
129. 이기준부총리 전격 사퇴아들 국적·大入의혹등 惡材 잇따르자 白旗 신정록 김봉기 발행일 : 2005.01.08 / 종합 A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1&D=08&ID=0501080301 (2012.7.10)
130. 이기준부총리 전격 사퇴그밖에 제기된 의혹들 총장시절 4 억대 판공비 과다지출 금지된 사외이사 겸직도 드러나
자신 땅에 아들명의 건물 '증여' 의혹 김정훈 발행일 : 2005.01.08 / 종합 A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1&D=08&ID=0501080302 (2012.7.10)
131. 李총리 “내가 이기준씨 추천”“현직교수 아닌 이공계 출신... 개혁 목소리”김홍진 발행일 : 2005.01.10 / 종합 A3 면

-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1&D=10&ID=0501100302 2012.7.10
- 132.李부총리 사표 수리발행일 : 2005.01.10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1&D=10&ID=0501100104 2012.7.10
133. 한나라 “李총리가 책임져야” 시민단체, 청와대 문책 요구김봉기 발행일 : 2005.01.10 / 종합 A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1&D=10&ID=0501100303 2012.7.10
134. 정찬용 前수석 ‘人事뒷얘기’ 책쓴다 박정규 前민정수석은 로펌 복귀신청록 발행일 : 2005.01.13 / 종합 A6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1&D=13&ID=0501130603 2012.7.10
- 135.이기준부총리 전격 사퇴“검증도 않고 임명... 또 교육부 쑥대밭” 청와대 ‘시스템 人事’ 고장 이명진 발행일 : 2005.01.08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1&D=08&ID=0501080402 2012.7.10
136. 盧 “검증시스템 전면 개선”장관 人事청문회 추진 재산검증 동의서 받게 신청록 발행일 : 2005.01.10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1&D=10&ID=0501100402 2012.7.10
137. 허술한 청와대 인사시스템 백악관과 비교해 보니美, 질문항목만 233 개... 前妻까지 찾아가 인터뷰
주용중 안용현 발행일 : 2005.01.12 / 종합 A5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1&D=12&ID=0501120501 2012.7.10
138. 허술한 청와대 인사시스템 백악관과 비교해 보니韓國 인사청문회발행일 : 2005.01.12 / 종합 A5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1&D=12&ID=0501120502 2012.7.10
138. 시민단체 “청탁한 인사들 문책해야”최승현 발행일 : 2003.02.28 / 종합 A2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2&D=28&ID=0302280203 2011.12.26
139. 교육부총리 김진표의원 검토신청록 발행일 : 2005.01.27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1&D=27&ID=0501270106 (2012.7.10)
140. 청와대는 人事중-예산처장관 등 이달 내내 교체·사표수리·임명신청록 발행일 : 2005.01.27 / 종합 A8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1&D=27&ID=0501270804 (2012.7.10)
141. 교육부총리 김진표씨 ‘경제관료 출신 교육총수’ 쇼크 신청록 박중현 발행일 : 2005.01.28 / 종합 A1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1&D=28&ID=0501280101 (2012.7.10)
142. 교육부총리 김진표 카드 ‘대학 산업화’ 실험... 거센 역풍 뚫을수 있을까 박중현 발행일 : 2005.01.28 / 종합 A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1&D=28&ID=0501280301 (2012.7.10)
143. 김진표 카드盧대통령 생각은 “내부 人士론 대학개혁 못해” 신청록 발행일 : 2005.01.28 / 종합 A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1&D=28&ID=0501280302 (2012.7.10)
141. “이현재 재신임” 닷새만에 사표 수리 청와대 또 우왕좌왕 人事 신청록 최현묵 발행일 : 2005.03.08 / 종합 A1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3&D=08&ID=0503080101 (2012.7.11)
142. 검찰 ‘이현재의혹’ 수사검토호경업 발행일 : 2005.03.09 / 종합 A2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3&D=09&ID=0503090206 (2012.7.11)
143. 경제부총리 이번엔 한덕수 실장 부상 약점 적은게 최대 장점으로신청록 김홍수 발행일 : 2005.03.14 / 종합 A5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3&D=14&ID=0503140503 (2012.7.11)
144. 韓惠洙 부총리는청와대 경제 보좌관과 경기도 63 회 동창 김홍수 발행일 : 2005.03.15 / 종합 A3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3&D=15&ID=0503150303 (2012.7.11)
- 145.강 건교, 휴가중 의혹제기에서 사의표명까지 중앙일보 2005.3.27
http://bill.join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189... (2012.3.12)
- 146.사의표명 강동석 건교장관 누구인가 중앙일보 2005.3.28
http://bill.join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108... (2012.4.22)
147. 건교장관 추병직씨 ‘선거법 위반’ 자격 논란 신청록 발행일 : 2005.04.05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4&D=05&ID=0504050105 (2012.7.11)

148. 후임 법무 내주초 발표신정록 발행일 : 2005.06.25 / 종합 A6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6&D=25&ID=0506250606 (2012.7.11)
149. 천정배의원이 새 법무장관 되면... 검찰에 재앙? 신정록 정우상 발행일 : 2005.06.27 / 종합 A2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6&D=27&ID=0506270202 (2012.7.11)
150. '2 기 검찰개혁' 수장에 오른 천정배 법무 (중앙일보 2005.6.28)
http://bill.joinsmsn.com/people/law/view/deep_information_print_law.asp?ww_no=35... (2012.5.8)
151. "장관 문책은 왕조시대 발상" 盧대통령, '尹국방 구하기' 대국민 호소천정배 법무·이재용 환경장관 임명 신정록
 발행일 : 2005.06.29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6&D=29&ID=0506290104 (2012.7.11)
152. 尹국방 유임 기류 환경·법무등 금주 소폭 개각청와대 "여론 살피는 중"신정록 발행일 : 2005.06.27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6&D=27&ID=0506270102 (2012.7.11)
153. 靑 前장관 왜 갑자기 사퇴?... 이재용 사전 낙점說신정록 발행일 : 2005.06.29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6&D=29&ID=0506290404 (2012.7.11)
154. 환경장관에도 총선낙선자 내정이재용 前 대구 남구청장... 또 '봐주기 人事' 논란 신정록 발행일 : 2005.06.28 / 종합 A1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6&D=28&ID=0506280103 (2012.7.11)
155. 이재용 환경부 장관은일찍 노무현 후보 지지 내년 대구시장 출마說 홍석준 발행일 : 2005.06.29 / 종합 A4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6&D=29&ID=0506290403 (2012.7.11)
156. 鄭통일 사의 1 월 초 개각신정록 발행일 : 2005.12.28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12&D=28&ID=2005122800009 (2012.7.11)
157. 金복지, 공식 사의표명 盧대통령 "치열한 당권 경쟁을"신정록 발행일 : 2006.01.01 / 종합 A6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1&D=01&ID=2006010100040 (2012.7.11)
158. [정치]1·2 개각...4 개부처 장관 내정 발행일 2006-01-03 기고자 정연옥 하태원 정연옥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10303457100685> (2012.9.1)
159. 5 部 장관 임명 강행盧대통령, 柳복지 반대 등 野 요구 묵살 신정록 발행일 : 2006.02.11 / 종합 A1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2&D=11&ID=2006021100153 (2012.8.31)
160. [인사]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 결과 보고서 발행일 2006-02-09 기고자 박성원 이진구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20905457397160> (2012.8.31)
161. [정치]`盧心개각` 파문...재선의원 긴급회동 黨-靑갈등조짐 발행일 2006-01-03 A1 기고자 정연옥 김정훈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10301457101453> (2012.9.1)
162. [정치]1·2 개각...4 개부처 장관 내정 발행일 2006-01-03 A2 기고자 배극인 이명건 조용우 조인직 장강명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10302457100645> (2012.9.1)
- 163.이종석통일, NSC 위원장까지. 외교·국방장관·국정원장 지휘권한 발행일:2006.01.04 /종합 A4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2&D=11&ID=2006010400025 (2012.7.11)
164. 장관 후보 가산 청문회 4.김우식 과기 부총리
http://bill.joins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256 (2012.4.22)
165. '유시민 장관' 밀어붙이기 청와대 "柳의원은 한 계층의 대변자... 문제없어"당 설득후 곧 복지장관에 내정할듯
 신정록 발행일 : 2006.01.03 / 종합 A1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1&D=03&ID=2006010300009 (2012.7.11)
166. 盧대통령 李총리 柳의원 코드로 맺어진 '정치 3 형제'유시민 카드' 왜 고집하나 大選 공신... 고비마다 노무현 지키기
 李총리의 보좌관 출신... 끈끈한 인연 신정록 발행일 : 2006.01.03 / 종합 A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1&D=03&ID=2006010300025 (2012.7.11)

167. 盧대통령, 柳카드 집착 5 가지 이유;①기로에 선 유시민 정치생명 구하기;② 인사권 흔들리면 레임덕 ③ 강행한들 당이 어찌겠나 ④ 비판일색 언론에 대한 반발 ⑤ 당내 계파갈등 잠재우기 신정록 발행일 : 2006.01.05 / 종합 A4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1&D=05&ID=2006010500026 (2012.7.11)
168. '잡티투성이' 장관 내정자 유시민 의원, ①정책개 발비 800 만원 횡령 의혹에... ②교수자격 논란까지 김봉기 발행일 : 2006.02.07 / 종합 A6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2&D=07&ID=2006020700044 (2012.8.31)
169. "내기골프 아니라더니 또 거짓말" 與 다시 '李총리 사퇴論'강병중씨 "40 만원 걸고했다" 시인 배성규 발행일 : 2006.03.11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3&D=11&ID=2006031100007 (2012.9.5)
170. [李총리 골프 파문]공제회, 투자팀 '관망' 의견에도 계속 주식사다 '27 회' 영남제분 주가조작 조사직후 결성 김봉기 발행일 : 2006.03.11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3&D=11&ID=2006031100024 (2012.9.5)
171. [李총리 골프 파문]영남제분에 67 억 안겨준 자사주, 사들인 곳도 기관 '작전'부터 '차익 실현'까지 기관동원? 강훈 전수용 발행일 : 2006.03.11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3&D=11&ID=2006031100025 (2012.9.5)
172. [李총리 골프 파문]3:1 절 골프 그날 무슨 일이 "李총리가 공 안맞아... 분위기 바꾸려 내기 해" 박주영 발행일 : 2006.03.11 / 종합 A5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3&D=11&ID=2006031100034 (2012.9.5)
173. 李총리 골프 파문]柳회장 참석 안했다 거짓말 내기골프 안했다 거짓말 그린피 각자 냈다 거짓말 김민철 발행일 : 2006.03.11 / 종합 A5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3&D=11&ID=2006031100032 (2012.9.5)
174. 李총리팀 '황제골프' 구설수비정규 시간에 앞 뒤 팀 비우고... 목욕탕선 "높은분 오니 나가달라" 윤정호 발행일 : 2006.03.13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3&D=13&ID=2006031300032 (2012.9.5)
175. 李총리 결국 사퇴지방선거까지 韓부총리가 대행할듯 신정록 발행일 : 2006.03.15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3&D=15&ID=2006031500010 (2012.9.5)
- 176.(사진) '한덕수대행 체제'발행일 : 2006.03.17 / 종합 A6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3&D=17&ID=2006031700044 2012.9.5
- 177.[정치인물]李총리 15 일 이임식...李차관도 사퇴 발행일 2006-03-16 기고자 박민혁 섹션면 A1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31601457704599> 2012.9.7
178. '구원투수' 한명숙총리 지명... 한나라 "탈당하라" 신정록 발행일 : 2006.03.25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3&D=25&ID=2006032500001 (2012.9.6)
- 179.내일 개각 5 개부처 안팎될듯 신정록 발행일 : 2006.03.01 / 종합 A1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3&D=01&ID=2006030100000 2012.9.5
- 180[정치]5 개부처 장관후보 2 배수 압축 발행일 2006-03-02 기고자 정연욱 섹션면 A2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30202457581396> 2012.9.7
181. [인사]4 개부처 개각...환경부는 추후 발표 발행일 2006-03-03 기고자 정연욱 섹션면 A1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30301457595150> 2012.9.7
- 182.신임 장관 내정자 약력발행일 : 2006.03.03 / 종합 A2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3&D=03&ID=2006030300020 2012.9.5
- 183.[인사]김명곤씨 국립극장장 퇴임 두달만에 장관 내정 발행일 2006-03-03 기고자 강수진 섹션면 A4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30304457594662> 2012.9.7
- 184."김명곤 장관 후보자 딸에 허위 봉사 확인서" 중앙일보 2006.3.22
http://bill.join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_law.asp?ww_no=845... (2012.5.8)
185. [국회]21 일부터 4 개부처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발행일 2006-03-20 기고자 하태원 섹션면 A2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32002457730200> 2012.9.7

186. 거친 독설로 잦은 舌禍(설화)... 내치엔 '小통령'사의 표명 이해찬 '실세 총리 20 개월' 김민철 발행일 : 2006.03.06 / 종합 A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3&D=06&ID=2006030600018 2012.9.5

187. 첫 여성 총리 탄생한명숙 총리동의안 통과 황대진 발행일 : 2006.04.20 / 종합 A2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4&D=20&ID=2006042000000 (2012.9.8)

188. [새 총리 후보 한명숙]盧대통령 지명 배경'정책' 대신 '선거' 택했다 신정록 발행일 : 2006.03.25 / 종합 A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3&D=25&ID=2006032500019 2012.9.6

189. [인사]새 환경장관 이치범씨...공정위장 권오승씨 발행일 2006-03-16 기고자 정연옥 섹션면 A1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31601457703234> 2012.9.7

190. [인사]또 코드-보은인사 논란...청맥회 회장-盧후보 특보 출신 발행일 2006-03-16 기고자 정연옥 박현진 섹션면 A5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31605457703570> 2012.9.7

191. [인사]이치범 환경 내정자 청문회 "허위 전세계약서 대출件 사과 발행일 2006-04-06 기고자 장강명 섹션면 A8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40608417909982> 2012.9.8

192. [물러나는 2 人] 색깔없이...한덕수 경제부총리 "아쉬운 리더십" 與 교체요구... 한·미 FTA 는 적극추진 정혜전 발행일 : 2006.07.01 / 종합 A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7&D=01&ID=2006070100011 (2012.9.8)

193. "경제·교육부총리 내주 교체"金부총리 사의... 경제-권오규, 교육-김병준씨 유력신정록 발행일 : 2006.07.01 / 종합 A1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7&D=01&ID=20060701000518 2012.9.8)

194. [물러나는 2 人]논란속에...김진표 교육부총리 자사고·外高 '말 바꾸기' 비판에 "소신 따랐을 뿐"양근만 발행일 : 2006.07.01 / 종합 A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7&D=01&ID=2006070100012 (2012.9.8)

195.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 경제수석(4·7)→정책실장(5·30)→경제부총리(7·3) '光速 승진'이 준비된 인사? 정우상 발행일 : 2006.07.04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7&D=04&ID=2006070400026 (2012.9.8)

196. '세금 폭탄' 장본인 김병준, 교육부총리로 교육계에도 '폭탄' 터뜨리려나청와대실장 출신 모두 부총리 기용 신정록 발행일 : 2006.07.01 / 종합 A3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7&D=01&ID=2006070100010 (2012.9.8)

197. [김병준 교육부총리 강행] 교육관련단체 일제히 반발교총 "교육 황폐화 폭탄 예고한 것" 양근만 발행일 : 2006.07.04 / 종합 A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7&D=04&ID=2006070400021 (2012.9.8)

198. [김병준 교육부총리 강행]盧와 코드 얼마나 맞길래"인연 길고 세상은 보는 관점도 닮은꼴" 신정록 발행일 : 2006.07.04 / 종합 A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7&D=04&ID=2006070400022 (2012.9.8)

199. [김병준 교육부총리 강행]두 딸 모두 外高 나와... 큰딸은 非동일계 진학 안석배 발행일 : 2006.07.04 / 종합 A4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7&D=04&ID=2006070400027 (2012.9.8)

200.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 교수시절 펴낸 저서에서"민초들은 등신" 정시행 발행일 : 2006.07.06 / 특집 A8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7&D=06&ID=2006070600032 (2012.9.8)

201. 김병준부총리 논문 논란"88 년 행정학보 게재내용, 제자 박사논문과 유사" 교육부 "金부총리가 먼저 작성... 분석방법 달라" 김영진 발행일 : 2006.07.25 / 종합 A1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7&D=25&ID=2006072500841 (2012.9.8)

202. 金부총리·제자 비슷한 논문 논란語順·표현만 바뀐채 결론은 거의 같아 채성진 정철환 발행일 : 2006.07.25 / 종합 A5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7&D=25&ID=2006072500432 (2012.9.8)

203. 金부총리, 같은 논문 두 번 발표 2001 년 2 개大 학술지에... 공식사과청와대 “사퇴 검토안해” 양근만 발행일 : 2006.07.28 / 종합 A3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7&D=28&ID=2006072800014 (2012.9.9)
204. 金부총리 “사퇴는 무슨 사퇴” 韓총리, 전화로 사퇴 권유... “거부하면 해임건의” 김민철 정우상 발행일 : 2006.08.02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8&D=02&ID=2006080201559 (2012.9.8)
205. [김병준 사퇴 거부]盧대통령 ‘해임’ 거부면 여권 요동칠듯 언론에 불만 터뜨리고... 의원 공세엔 얼굴 붉히며 항변 임민혁 발행일 : 2006.08.02 / 종합 A3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8&D=02&ID=2006080200400 (2012.9.8)
206. 金부총리 “학계 관행” 발뺌에 열받은 학계 “부도덕한 교수들만의 관행일 뿐” 김영진 채성진 발행일 : 2006.08.02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8&D=02&ID=2006080200336 (2012.9.8)
207. 金부총리, 대가 안받았다더니... 성북구 용역비 630 만원 받아김영진 발행일 : 2006.08.02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8&D=02&ID=2006080200334 (2012.9.8)
208. 이번엔 문재인與 “검찰경력 없고 코드인사” 반발 법무장관 강행맨 黨·靑 결별 위기김병준 부총리 사의 정우상 발행일 : 2006.08.03 / 종합 A1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8&D=03&ID=2006080300392 (2012.9.9)
209. ‘김병준 부총리 사퇴’ 막전막후盧·韓 31 일 오찬때 결정 1 일 열린 교육위는 金부총리 ‘한풀이’ 자리 임민혁 발행일 : 2006.08.03 / 종합 A5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8&D=03&ID=2006080300022 (2012.9.8)
210. 한여름 밤 사라진 ‘케네디 꿈’ 김병준 부총리 이임식 양근만 발행일 : 2006.08.08 / 종합 A2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8&D=08&ID=2006080800000 (2012.9.8)
211. 장병완 예산처장관 성품 소탈... 양극화 전념발행일 : 2006.07.04 / 종합 A6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7&D=04&ID=2006070400044 (2012.9.8)
212. 변양규 청와대실장 盧대통령과 가까운 실세발행일 : 2006.07.04 / 종합 A6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7&D=04&ID=2006070400045 (2012.9.8)
213. [정치인물]장병완 예산처 장관 내정자 청문회 발행일 2006-07-20 기고자 길진균 조수진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72006458923049> (2012.9.9)
214. “13 년간 재산 100 배 증가 논란” http://bill.joins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121 (2012.5.14)
215. [국방]방위사업청장 돌연 사의...부분개각 이어질듯 발행일 2006-07-19 기고자 윤상호 정연옥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71901458914592> (2012.9.9)
216. [정치인물]천정배 법무장관 사의 발행일 2006-07-22 기고자 정연옥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72206458944049> (2012.9.9.)
217. 신임 법무장관 김성호씨 지명신정록 발행일 : 2006.08.09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8&D=09&ID=2006080900022 (2012.8.9)
218.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든 특검이든 결론나기를” 김성호 법무장관 내정자 정시행 발행일 : 2006.08.09 / 종합 A6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8&D=09&ID=2006080900062 (2012.9.9)
219. 새 법무부장관에 김성호씨 지명 http://bill.joins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22... (2012.3.28)
220. 교육부총리 후보 3 명 압축... 오늘 확정신정록 발행일 : 2006.09.01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9&D=01&ID=2006090100468 (2012.9.10)
221. 교육부총리 김신일씨 내정靑 “검증문제 神만이 알것” 신정록 발행일 : 2006.09.02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9&D=02&ID=2006090200485 (2012.9.10)

222. 尹국방 사의 외교안보라인 곧 개편신청록 발행일 : 2006.10.25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0&D=25&ID=2006102500542 2012.9.10
223. 외교안보팀 내주 대폭개편 발행일 2006-10-25 기고자 정연욱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102501459742111> 2012.9.12
224. 또 '돌려막기' 인사 하나...송민순은 潘외교 자리로 발행일 2006-10-25 기고자 정연욱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102506459741360> 2012.9.12
225. 潘장관, 유엔총장 단일후보김기훈 발행일 : 2006.10.09 / 종합 A2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0&D=09&ID=2006100900368 (2012.9.10)
226.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확정김기훈 발행일 : 2006.10.14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0&D=14&ID=2006101400487 (2012.9.10)
227. 유엔총장 내정 潘외교 당분간 장관직 유지할듯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10/11/2006101160224.html (2012.9.10)
228. 몸살난 반사무총장, 떠나는 날까지 '살인일정'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6991&logId=1636511> (2012.9.12)
229. 외교안보라인 오늘 개각 청와대, 與반대에도 강행신청록 임민혁 발행일 : 2006.11.01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1&D=01&ID=2006110100559 2012.9.10
230. 김장수 국방장관·김만복 국정원장 오늘 공식 임명 예정 신청록 발행일 : 2006.11.23 / 종합 A5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1&D=23&ID=2006112300228 2012.9.12
231. 청와대, 김만복 국정원장·김장수 국방부장관 임명 [프레스이안 2006-11-23 12:12]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된 송민순, 이재정은 12 월 초에나(프레스이안 윤태곤/기자)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061115191813656> (2012.9.12)
232. 윤곽 드러난 새 외교안보팀귀막은 청와대... 코드형 인사로 '오기 개각' 신청록 유용원 발행일 : 2006.11.01 / 종합 A3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1&D=01&ID=2006110100007 2012.9.10
233. [국회 인사 청문회] ● 김장수 국방후보자 자질 논란서해교전 사상자수 ... 美국방 내정자 성향... "모른다"
 정시행 발행일 : 2006.11.17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1&D=17&ID=2006111706030 2012.9.10
234. 추병직 건교 경질 검토 정시행 발행일 : 2006.10.28 / 종합 A5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0&D=28&ID=2006102800017 (2012.9.10)
235. 추병직 건교 물러날듯 "책임회피 않겠다" 발언... 한총리도 "개편 참고" 신청록 발행일 : 2006.11.14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1&D=14&ID=2006111400019 (2012.9.10)
236. 與 "現정권서 폭락한 것은 장관값" "추병직 장관·이백만 수석 교체"... 與野, 모처럼 한목소리 황대진 발행일 :
 2006.11.14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1&D=14&ID=2006111401283 (2012.9.12)
237. 추병직 장관 사표 수리 (미디어 다음 YTN 김응건 2006.11.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11/14/2006111460392.html (2012.9.12)
238. 추병직 건교장관, 취임에서 사퇴까지(조선닷컴 1 등 인터넷 뉴스 2006.11.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12/29/2006122900267.html (2012.9.17)
239. 추병직·정문수·이백만씨 사표 수리될듯신청록 발행일 : 2006.11.15 / 종합 A1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1&D=15&ID=2006111500039 (2012.9.10)
240. "秋건교등 경질, 부동산 아닌 정치공세 때문"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 정우상 발행일 : 2006.11.17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1&D=17&ID=2006111700098 (2012.9.10)
241. 내달초 개편될 안보부처 하마평을 보니송민순 외교, 이종석 유임 가능성 신청록 발행일 : 2006.10.25 / 종합 A5 면

-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0&D=25&ID=2006102500021 2012.9.10
242. '새 외교장관 송민순' 사실상 확정청와대 "송실장밖에..." 신정록 발행일 : 2006.10.27 / 종합 A6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0&D=27&ID=2006102700028 2012.9.10
243. 외교·안보 장악한 '코드'... 신임 두 사령탑은 송민순 외교장관 盧대통령, 두계급올려 파격발탁 그후 對美관계 등 '自主' 강조 이하원 발행일 : 2006.11.02 / 종합 A6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1&D=02&ID=2006110200026 2012.9.10
244. [국회 인사 청문회] ● 송민순 외교후보자 코드·反美 논란 "북한 독재국가 아니냐" 질문에 대답 피해 임민혁 발행일 : 2006.11.17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1&D=17&ID=2006111706029 2012.9.10
245. 非외교관 출신 외교차관 탄생 2 차관에 김호영씨 내정 신정록 발행일 : 2006.12.01 / 종합 A2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2&D=01&ID=2006120100133 2012.9.12
246. 결국 떠나는 이종석 통일장관 (중앙일보 2006.10.25)
http://bill.join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669... (2012.5.11)
247. 이종석 장관 사의 표명 배경은 (중앙일보 2006.10.25)
http://bill.join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669... (2012.5.11)
248. 이종석 통일 사의... 새 외교안보라인 어떻게사람은 가도 '코드'는 남는다 신정록 발행일 : 2006.10.26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0&D=26&ID=2006102600025 (2012.9.10)
249. 노 대통령과 '각별했던' 이종석 (중앙일보 2006.10.26)
http://bill.join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669... (2012.5.11)
250. 북핵 혼신에 '이종석'이 있었다 (중앙일보 2006.10.26)
http://bill.joinmsn.com/people/search/1000/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669... (2012.5.11)
251. 이종석통일 MBC 기자 빼고 방북北서 '나포' 표현 트집잡아 불허... 정부 무대응 김민철 발행일 : 2006.12.06 / 종합 A6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2&D=06&ID=2006120602032 2012.9.12
252. 野 "이재정 통일장관 절대 안돼""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역사관 편향 심각" 권대열 발행일 : 2006.11.21 / 종합 A1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1&D=21&ID=2006112100172 2012.9.10
253. "이념 편향 이재정 통일 임명 반대"...시민단체들 성명 발행일 2006-11-21 기고자 윤중구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112105459965486> 2012.9.12
254. 이종석통일 MBC 기자 빼고 방북北서 '나포' 표현 트집잡아 불허... 정부 무대응 김민철 발행일 : 2006.12.06 / 종합 A6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2&D=06&ID=2006120602032 (2012.9.12)
255. 윤곽 드러난 새 외교안보팀귀막은 청와대... 코드型 인사로 '오기 개각' 신정록 유용원 발행일 : 2006.11.01 / 종합 A3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1&D=01&ID=2006110100007 2013.2.6
256. 건교장관 이용섭-행자장관 박명재 내정...끝없이 도는 회전문-보은 인사 발행일 2006-11-24 기고자 정연옥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112402451006667> 2012.9.12
257. 정세균 산자 사의 "지금 이 정부 떠날적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12/30/2006123000047.html (2012.9.17)
258. 정세균 산자 사의 표명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20905457397160> 2012.9.17
259. 산자부장관에 김영주씨 국무조정실장 임상규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2/22/2007022200014.html 2012.9.17
260. [뉴스 피플 |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내정자] 능력 검증된 '盧의 남자' 승승장구 김유영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2007.01.16 569 호 (p 8 ~ 8)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07/01/15/200701150500011/200701150500011_1.html 2012.5.9

261. 총리 교체... 후임 김우식·이규성씨 거명 盧대통령 오늘 탈당 밝힐듯 신정록 발행일 : 2007.02.22 / 종합 A1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7&M=02&D=22&ID=2007022200070 2012.9.17
262. 왜 한명숙만? 黨복귀 의사 강해... 대선출마說 ● 총리 교체 이유는 신정록 발행일 : 2007.02.22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7&M=02&D=22&ID=2007022200180 2012.9.17
263. 盧대통령 임기말 '親政체제 만들기' ● '한덕수·문재인 카드' 배경은 신정록 발행일 : 2007.03.06 / 종합 A8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7&M=03&D=06&ID=2007030600701 2012.9.17
264. 한덕수 총리 인준 통과권대열 발행일 : 2007.04.03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7&M=04&D=03&ID=2007040300055 2012.9.17
265. 정치권 '한덕수 지명' 엇갈린 반응 연합뉴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3/09/2007030900827.html 2013.2.6
266. 총리 최종후보에 김우식·전윤철·한덕수 김우식<과기부총리>·전윤철<감사원장>·한덕수 <前 경제부총리>
신정록기자입력 : 2007.03.05 01: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3/05/2007030500067.html 2013.2.6
267. 문광장관 김종민, 해수장관 강무현 (실시간뉴스 2007.4.19)
<http://news.donga.com/3/all/20070419/8432365/1> (202.9.17)
268. 노 대통령, 柳장관 사의수리 '유보'·문재인실장 (이데일리 2007.4.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4/09/2007040900643.html (2012.9.17)
269. 노대통령, 유시민장관 사의 수용키로 (연합뉴스 2007.5.21 15:01 수정 2007.5.21 15: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5/21/2007052100701.html (2012.9.17)
270. 유시민, 20 일 노대통령 만나 장관직 사퇴 뜻 전해(연합뉴스 2007.5.21 23:3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5/21/2007052101117.html (2012.9.17)
271. 李당선자·盧정권 장관 '이상한 동거' 새 내각 구성때까진 국무위원직 수행해야 신정록 발행일 : 2008.02.19 / 종합 A2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8&M=02&D=19&ID=2008021900208 2012.9.19
272. '장관없는 나라' 國政혼돈 불가피'李대통령+盧내각' 정부 운영 파행 예고 배성규 발행일 : 2008.02.20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8&M=02&D=20&ID=2008022000186 2012.9.19
273. ● 국무위원 15 명도 문제... 1 명만 有故돼도 국무회의 못 열어현재 딱 15 명으로 헌법상 요건 겨우 충족신정록
발행일 : 2008.02.20 / 종합 A3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8&M=02&D=20&ID=2008022000171 2012.9.19
274. " 盧정권 장관 중에도 이재정은 안돼 " 국무위원 代打 다른 부처에서 구해 배성규 발행일 : 2008.02.29 / 종합 A4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8&M=02&D=29&ID=2008022900055 2012.9.19
275. 여당·청와대 출신들 '내각 점령'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1/26/2007012600045.html (2012.9.17)
276. 보건복지부 장관에 변재진 차관 내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5/23/2007052300681.html (2012.9.17)
277.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누구? '재정 전략·기획통'..경복고-서울대 출신 엘리트 관료
98 년이후 첫 내부 승진 장관 탄생 이데일리 2007.5.23 14:5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5/23/2007052300701.html (2012.10.1)
278. '반코드' 김법무 결국 사표 수리 (안용현 기자, 2007.8.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07/2007080700071.html 2012.9.18

279. 靑 김법무 사의수용..교체배경(연합뉴스 2007.8.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06/2007080600771.html (2012.9.18)

280. 노준형 정통부 장관, 사의 표명 연합뉴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06/2007080601212.html 2012.9.18

281. '보은 인사' 자리 만들기? 농림·정통장관 왜 돌연 사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07/2007080700042.html 2012.9.18

282. 법무 경질·정권말 배려 겹쳐 연쇄이동 ● 장관급 8 자리 교체 '8·8 개각' 野 "코드에 대선용 개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09/2007080900166.html (2012.9.19)

283. [뉴스 피플 |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 잘나갔던 검사, 차기 법무장관 되나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07/08/01/200708010500002/200708010500002_1.html 2012.9.19

284. 한나라, 이치범 장관 캠프행에 "한심해" 연합뉴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31/2007083101171.html (2012.9.19)

285. 올해 입각한 장관 9 명 전원 관료출신

<http://news.donga.com/3/all/20070904/8486208/1> (2012.9.19)

286. [특집 | 하투(夏鬪) 태풍 강타] '꼬리 문 파업' ... 勞-政 정면충돌

노동계 "철도 노조 강경대응 규탄 전면전" ... 정부 "명백한 불법, 더 이상 양보 못한다"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발행일 : 2003 년 07 월 10 일 (392 호) 쪽수 : 30 ~ 30 쪽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03/07/03/200307030500027/200307030500027_1.html

2012.10.26

287. 제 17 대 국회의원 총선거[第十七代國會議員總選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2625&mobile&categoryId=200000229> 2012.10.18

288. 대한민국 제 17 대 국회의원 선거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C17%EB%8C%80_%EA%B5%AD%ED%9A%8C%EC%9D%98%EC%9B%90_%EC%84%A0%EA%B1%B0 2012.10.18

289. 노무현대통령 탄핵사태[盧武鉉大統領彈劾事態]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5242&mobile&categoryId=200000329> 2012.10.18

290.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EB%85%B8%EB%AC%B4%ED%98%84_%EB%8C%80%ED%86%B5%EB%A0%B9_%ED%83%84%ED%95%B5_%EC%86%8C%EC%B6%94 2012.10.18

291. 대한민국 제 17 대 대통령 선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C17%EB%8C%80_%EB%8C%80%ED%86%B5%EB%A0%B9_%EC%84%A0%EA%B1%B0 2012.10.20

292. 부안郡 "核폐기장 유치 철회" 경고金농림 새만금 중단 항의사표... 盧대통령, 반려 김창곤 이동혁 발행일 : 2003.07.17

/ 종합 A1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17&ID=0307170105 2012.10.25

293. '새만금 잠정 중단' 판결 姜永虎 판사"나는 환경운동가 아니다" 곽아람 발행일 : 2003.07.17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17&ID=0307170401 2012.10.25

294. "새만금 중단땀 전국체전 포기" 전북 사회단체등 반발김창곤 발행일 : 2003.07.17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17&ID=0307170404 2012.10.25

295. "새만금 중단 法院결정 당황스러워"정우상 발행일 : 2003.07.17 / 종합 A5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17&ID=0307170502 2012.10.25

296. <사진>◇원전 반대 어린이들발행일 : 2003.07.17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17&ID=0307170405 2012.10.25

297. 한총련, 美軍훈련장 진입 전국 곳곳 기습 反美시위안석배 김정훈 발행일 : 2003.08.08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8&D=08&ID=0308080102 2012.10.25
298. 한총련 美軍장갑차 점거시위 파장당황한 정부... 후속조치는 어정쩡 유용원 권경복 발행일 : 2003.08.09 / 종합 A3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8&D=09&ID=0308090301 2012.10.25
299. 한총련 合法化 당분간 유보신청록 안용현 발행일 : 2003.08.11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8&D=11&ID=0308110102 2012.10.25
300. 정부, 한총련 강·온파 분리대응할 듯박세용 한재현 발행일 : 2003.08.11 / 종합 A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8&D=11&ID=0308110301 2012.10.25
301. 野, 김두관행자 해임건의案 20 일 처리민주 합승회의원도 장관 경질 촉구 허용범 발행일 : 2003.08.13 / 종합 A2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8&D=13&ID=0308130204 2012.10.25
302. 野 “金행자 해임안 오늘 상정 시도” “한총련시위 예방못해” 권대열 발행일 : 2003.08.20 / 종합 A2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8&D=20&ID=0308200206 2012.10.25
303. [한총련 시위] 美장갑차 점거 외교마찰 우려 美 8 군, 한총련 관련자 강력처벌 이례적 촉구 검찰, 전원 구속키로...
 野지구당에도 난입 유용원기자 kysu@chosun.com 권경복기자 kkb@chosun.com 박세용 기자 se@chosun.com
 입력 : 2003.08.08 17:59 / 수정 : 2003.08.08 23:16 1.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080870241 2013.2.7
304. 태풍 강타 100 여명 사망·실종 原電 5 곳 가동중단... 147 만가구 한때 停電사태박원수 권상은 발행일 : 2003.09.14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14&ID=0309140101 2012.10.25
305. 태풍 '매미' 강타산업계 피해·복구상황 부산港 크레인복구에 1 년... 수출입 화물 20% 타격장일현 이길성 발행일 :
 2003.09.15 / 종합 A5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15&ID=0309150501
 2012.10.25
306. 태풍 '매미' 강타과일피해 최악... 낙과율 70~80% 박종세 발행일 : 2003.09.15 / 종합 A5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15&ID=0309150502 2012.10.25
307. 태풍 '매미' 강타망가진 남해안 漁村 양식장·배·집... 성한게 없다 김성철 발행일 : 2003.09.15 / 사회 A8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15&ID=0309150801 2012.10.25
308. “피해 전지역 특별재해지역 검토” 金행자 밝혀... 재난 관련업무 통합 관리키로 안용균 이항수 발행일 : 2003.09.16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16&ID=0309160102 2012.10.25
309. 특별재해지역 24 일쯤 선포태풍피해 1 조 8000 억 넘어 이항수 발행일 : 2003.09.17 / 종합 A2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17&ID=0309170201 2012.10.25
310. 태풍피해 함께 딛고 일어서자울고있는 울릉도 박원수 발행일 : 2003.09.17 / 사회 A8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17&ID=0309170801 2012.10.25
311. 태풍 복구 추경안 검토 1~2 조 '적자국채' 발행윤영신 발행일 : 2003.09.18 / 종합 A5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18&ID=0309180503 2012.10.25
312. 美 5 만弗·日 12 만弗 성금권경복 발행일 : 2003.09.19 / 종합 A2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19&ID=0309190201 2012.10.25
313. 위도 주민 “정부도 대책위도 못믿어” 신지은 발행일 : 2003.07.31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31&ID=0307310404 2012.10.25
314. 위도 주민에 현금보상 안해최원규 발행일 : 2003.07.30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30&ID=0307300103 2012.10.25
315. 부안 7 천명 시위김창곤 최경운 발행일 : 2003.07.26 / 사회 A8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26&ID=0307260804 2012.10.25
316. 위도 核폐기장 확정 2006 년 착공송의달 발행일 : 2003.07.25 / 종합 A1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25&ID=0307250104 2012.10.26

317. 전북 부안군 위도 核폐기장 확정 정부 “이번엔 안밀린다” 의지보여 김창곤 송의달 발행일 : 2003.07.25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25&ID=0307250401 2012.10.26
318. 부안군수 “核폐기시설 꼭 유치” 산자부 부지지정 연기... 폭력시위 3 명 영장김창곤 발행일 : 2003.07.24 / 사회 A8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24&ID=0307240804 2012.10.26
319. ‘핵폐기물 시설 후보지’ 홍역않는 부안군최경운 발행일 : 2003.07.17 / 사회 A6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17&ID=0307170605 2012.10.26
320. 원전폐기물 시설 신청마감 부안군 단독후보지로 결정송의달 발행일 : 2003.07.16 / 사회 A8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16&ID=0307160808 2012.10.26
321. 原電폐기물 처리시설 부안군, 단독 유치신청송의달 발행일 : 2003.07.15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15&ID=0307150103 2012.10.26
322. 부안군, 原電폐기물 시설 유치 신청 20 년 묵은 國策사업 물고 뒀다 김창곤 송의달 발행일 : 2003.07.15 / 사회 A10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15&ID=0307151001 2012.10.26
323. 부안군, 原電폐기물 시설 유치 신청부안군 위도는 어떤곳 송의달 발행일 : 2003.07.15 / 사회 A10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15&ID=0307151002 2012.10.26
324. 부안군, 원전수거물 센터 유치선언김창곤 발행일 : 2003.07.12 / 사회 A6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12&ID=0307120601 2012.10.26
325. 부안 원전센터 반대, 각계로 확산 입력 : 2003.07.19 18:47 / 수정 : 2003.07.19 18:47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071970118 2012.11.4
326. 부안 원전센터 반대 과격시위...부상자 속출 입력 : 2003.07.22 18:16 / 수정 : 2003.07.22 18:16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072270256 2012.11.4
327. 부안, 원전센터 반대 촛불집회 입력 : 2003.08.10 22:58 / 수정 : 2003.08.10 22:58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081070281 2012.11.4
328. 부안 원전센터 반대 대규모 집회 개최 입력 : 2003.08.13 16:01 / 수정 : 2003.08.13 16:01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081370148 2012.11.4
329. 부안 원전센터 반대 '해상시위' 또 열려 입력 : 2003.08.21 11:24 / 수정 : 2003.08.21 11:24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082170103 2012.11.4
330. 부안 원전센터앞서 '등교거부' 결의대회 입력 : 2003.09.15 15:51 / 수정 : 2003.09.15 15:51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091570190 2012.11.5
331. 부안 원전센터 정부 강경방침..주민 반발 시민사회단체 '중재단'을 구성 합의 입력 : 2003.11.21 15:08 / 수정 : 2003.11.21 15:08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112170213 2012.11.5
332. 주민에 집단폭행 부안군수 6 주 진단 경찰, 집회 연단 전격 철거 등 강경대처 입력 : 2003.09.09 09:42 / 수정 : 2003.09.09 14:26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090970048 2012.11.5
333. 철도파업 25 명 파면·해임이충일 발행일 : 2003.07.19 / 사회 A6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19&ID=0307190607 2012.10.26
334. 인천지하철 노조 간부 4 명 영장최규민 발행일 : 2003.07.05 / 인천 A10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05&ID=0307051008 2012.10.26
335. 8209 명 철도청 '무더기 중징계' 딜레마 기관사등이 85% 차지해 운행 차질이충일 발행일 : 2003.07.03 / 사회 A7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03&ID=0307030703 2012.10.26
336. “철도파업 손해배상 청구”이명진 문갑식 발행일 : 2003.07.02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02&ID=0307020104 2012.10.26
337. 철도파업 끝. 새벽부터 복귀 러시... 지도부 결국 白旗문갑식 이충일 발행일 : 2003.07.02 / 종합 A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02&ID=0307020301 2012.10.26
338. 철도파업 오늘 철회 가능성 오전 10 시 노조 토론회... 정부 “주동 121 명 직위해제”이충일 신지은 발행일 : 2003.07.01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01&ID=0307010101 2012.10.26
339. [철도 파업]철도개혁법 통과되자 노조원 동요문갑식 이충일 발행일 : 2003.07.01 / 종합 A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01&ID=0307010301 2012.10.26
340. [철도 파업] ‘제 2 물류대란’ 우려기업들 “트럭·해운수송 긴급수배” 차학봉 탁상훈 발행일 : 2003.07.01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01&ID=0307010401 2012.10.26

341. 철도개혁 일단 시동구조조정 관련 2개법안 통과 이충일 발행일 : 2003.07.01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01&ID=0307010404 2012.10.26
342. [철도 파업] 교통대란 오늘 '기로' 끼어서 출근... 밀리며 퇴근... 市民 분통 최보윤 발행일 : 2003.07.01 / 사회 A9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7&D=01&ID=0307010901 2012.10.26
343. 철도노조 복귀명령 불응 오늘 수도권 출근 비상이충일 운영신 발행일 : 2003.06.30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6&D=30&ID=0306300101 2012.10.26
344. [철도 파업] 政 "신규인력 채용"... 勞 "총력투쟁 하라" 문갑식 박용근 발행일 : 2003.06.30 / 종합 A3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6&D=30&ID=0306300301 2012.10.26
345. 시멘트 열차수송 올스톱화물연대선 철도화물 대체운송 거부 기업들 "수출입 물량 어쩌나..." 비상
이충일 신동훈 발행일 : 2003.06.30 / 종합 A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6&D=30&ID=0306300302 2012.10.26
346. [철도 파업] 노조 "公社化돼도 공무원연금 달라" 이충일 발행일 : 2003.06.30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6&D=30&ID=0306300401 2012.10.26
347. [철도 파업] 출근길 비상화대진 임민혁 김성철 발행일 : 2003.06.30 / 사회 A9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6&D=30&ID=0306300901 2012.10.26
348. 철도 오늘 전면파업 돌입이충일 발행일 : 2003.06.28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6&D=28&ID=0306280102 2012.10.26
349. 경인선 35%·분당선 42%만 운행 철도파업 '출퇴근대란'... 새마을호 6%만 운행가능이충일 발행일 : 2003.06.28 / 사회
A6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6&D=28&ID=0306280601 2012.10.26
350. [특집 | 하투(夏鬪) 태풍 강타] '꼬리 문 파업' ... 勞·政 정면충돌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경질 기사임)
노동계 "철도 노조 강경대응 규탄 전면전" ... 정부 "명백한 불법, 더 이상 양보 못한다"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발행일 : 2003년 07월 10일 (392호) 쪽수 : 30 ~ 30 쪽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03/07/03/200307030500027/200307030500027_1.html 2012.10.26
351. '수능 복수정답' 집행정지 신청 기각 행정법원 "교육평가원의 재량권 남용 아니다"전수용 발행일 : 2003.12.11 / 사회
A10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12&D=11&ID=0312111005 2012.11.24
352. [뉴스브리핑] ③번 정답자들 "복수정답 취소해야" 소송 전수용 발행일 : 2003.12.02 / 사회 A10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12&D=02&ID=0312021005 2012.12.24
353. 수능 '복수정답' 판문점 입가경박중현 발행일 : 2003.11.27 / 사회 A8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11&D=27&ID=0311270802 2012.12.24
354. '복수정답' 반발... 모임 갖고 소송준비박중현 최승호 발행일 : 2003.11.26 / 사회 A8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11&D=26&ID=0311260801 2012.12.24
355. 복수정답 첫 인정 판문점 修能 공신력 치명타... 정답시비 잦아질듯 박중현 발행일 : 2003.11.25 / 사회 A12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11&D=25&ID=0311251201 2012.12.24
356. 수능 언어영역 복수정답 논란 박중현 발행일 : 2003.11.24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11&D=24&ID=0311240103 2012.12.24
357. 60 여만명 재채점 해야할 판수능 언어·사탐 20 여문제도 정답시비 박중현 최승호 발행일 : 2003.11.24 / 사회 A10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11&D=24&ID=0311241001 2012.12.24
358. 교육부 "CD 롬 제작배포 강행"...전교조 후속 소송준비기사입력 2003-11-28 18:23:00 기사수정 2009-09-28 04:51:18
홍성철기자 <http://news.donga.com/3/all/20031128/8005734/1> 2012.11.26
359. 법원 "NEIS 통합 CD 배포 말라"...올 입시는 현행대로 기사입력 2003-11-28 19:07:00 기사수정 2009-09-28 04:52:12
김수경기자 <http://news.donga.com/3/all/20031128/8005812/1> 2012.12.26
360. '학생부 CD' 배포 철회...응시자 자료만 직접 다운받아야 기사입력 2003-12-03 18:33:00 기사수정 2009-09-28 04:13
홍성철기자 <http://news.donga.com/3/all/20031203/8007218/1> 2012.12.26

361. 인권침해 논란 교무-보건-진학정보 NEIS 3 개영역 분리운용 기사입력 2003-12-15 18:26:00 기사수정 2009-09-28 02:37:15 홍성철기자 <http://news.donga.com/3/all/20031215/8011188/1> 2012.11.26

362. '이라크 파병'철회 집회 확산될 듯기사입력 2003-10-19 15:39:00 기사수정 2009-09-28 10:20:36 연합뉴스 <http://news.donga.com/3/all/20031019/7992780/1> 2012.11.26

363. 정부, 이라크 추가파병 공식 결정 기사입력 2003-10-18 10:50:00 기사수정 2009-09-28 10:29:40 <http://news.donga.com/3/all/20031018/7992663/1> 2012.11.26

364. 이라크 파병 관련 주요일지 기사입력 2003-12-17 15:00:00 기사수정 2009-09-28 02:16:13 연합뉴스 <http://news.donga.com/3/all/20031217/8011838/1> 2012.11.26

365. 내년 4 월말 키르쿠크로 파병...2300 억 비용 한국정부 부담 기사입력 2003-12-23 18:25:00 기사수정 2009-10-10 06:43:13 김정훈,윤상호기자 <http://news.donga.com/3/all/20031223/8013952/1> 2012.11.26

366. 이라크 파병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2004-02-13 15:24:00 기사수정 2009-10-05 06:17:24 연합뉴스 <http://news.donga.com/3/all/20040213/8029512/1> 2012.11.26

367. 파병요청에서 동의안 통과까지 기사입력 2004-02-13 15:44:00 기사수정 2009-10-05 06:17:25 연합뉴스 <http://news.donga.com/3/all/20040213/8029514/1> 2012.11.26

368. 김선일씨 피살... 시신 확인 기사입력 2004-06-23 01:55:00 기사수정 2009-10-04 11:56:53 연합뉴스 <http://news.donga.com/3/all/20040623/8075378/1> 2012.11.27

369. '김선일씨 피살' 정국 회오리 기사입력 2004-06-23 09:16:00 기사수정 2009-10-04 11:55:56 연합뉴스 <http://news.donga.com/3/all/20040623/8075435/1> 2012.11.27

370. 노대통령 이르면 29-30 일 개각 단행 기사입력 2004-06-27 14:38:00 기사수정 2009-10-04 11:24:01 연합뉴스 <http://news.donga.com/3/all/20040627/8076830/1> 2012.11.27

371. 北경비정 서해 NLL 침범 交信 무응답... 함포소자 퇴각장일현 발행일 : 2004.07.15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7&D=15&ID=0407150103 2012.12.9

372. NLL 침범 北함정 3 차례 답신했었다 사격했던 해군, 合參에 보고 안해유용원 장일현 발행일 : 2004.07.17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7&D=17&ID=0407170102 2012.12.9

373. 북어선 또 NLL 침범유용원 발행일 : 2004.07.19 / 종합 A2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7&D=19&ID=0407190204 2012.12.9

374. <사진>NLL 침범 북함정은 2 년전 서해교전 '주범'발행일 : 2004.07.20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7&D=20&ID=0407200107 2012.12.9

375. 靑·軍 심상창네신일순등 고위장성 수사 이종석 '적개심' 발언등 곳곳 불편한 관계 표출 신정록 발행일 : 2004.07.20 / 종합 A4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7&D=20&ID=0407200404 2012.12.9

376. "언론에 통신기밀 유출" 청와대 격분 合參 정보본부장 전격조사신정록 박민선 발행일 : 2004.07.21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7&D=21&ID=0407210101 2012.12.9

377. "군사기밀이라 볼수 없어" 국제공용주파수 사용... 軍관계자"당시 여객선서도 청취"유용원 발행일 : 2004.07.21 / 종합 A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7&D=21&ID=0407210303 2012.12.9

378. 北경비정 어제 또 NLL 침범 1 시간 56 분간 응신안해유용원 발행일 : 2004.07.22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7&D=22&ID=0407220102 2012.12.9

379. 경비정·어선 NLL 침범 北, 8 차례 경고방송 또 무시 우리측에 오히려 "내려가라" 유용원 발행일 : 2004.07.22 / 종합 A4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7&D=22&ID=0407220401 2012.12.9

380. "NLL 보고누락 警告수준 조치" 盧대통령 지시... 해군작전사령관등 5 명 경징계할듯장일현 발행일 : 2004.07.24 / 종합 A1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7&D=24&ID=0407240104 2012.12.9

381. 33 년 군문 떠나는 박승춘 중장 ... 'NLL 보고누락' 씩씩한 마무리북도발에 웃бет은 군정보통... 인사 후폭풍 예고 유용원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7&D=27&ID=0407270301 2012.12.9

382. 북 어제도 2 척 월선... 한달간 43 회 호출에 20 회만 응답 장성급 회담은 위장이었나?장일현 발행일 : 2004.07.27 / 종합 A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7&D=27&ID=0407270302 2012.12.9

383. 신임國防 윤광웅씨 내정유용원 신정록 발행일 : 2004.07.28 / 종합 A1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7&D=28&ID=0407280104 2012.12.9
384. 수입쌀 2 만톤 내년부터 시판쌀협상 잠정합의 김홍수 발행일 : 2004.12.18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12&D=18&ID=0412180104 2012.12.9
385. "쌀개방 반대" 전국서 시위 오늘 청와대 앞 농성권경안 신지은 발행일 : 2004.12.08 / 사회 A1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12&D=08&ID=0412081404 2012.12.9
386. 수입쌀 내년 6 월부터 시판김홍수 발행일 : 2004.12.31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12&D=31&ID=0412310103 2012.12.9
387. '수능不正' 서울도 수사 경찰, 교육부 요청따라... "믿을만한 모든 인터넷 제보 대상"특별취재팀 김봉기 장상진 발행일 : 2004.11.23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11&D=23&ID=0411230101 2012.12.9
388. [대규모 수능부정 파문]법원 영장 실질심사 표정특별취재팀 문갑식 권경안 김성현 강훈 안용현 임민혁 최규민 발행일 : 2004.11.23 / 사회 A12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11&D=23&ID=0411231201 2012.12.9
389. [대규모 수능부정 파문]8 개교 '일진회' 연합조직이 주축
 특별취재팀 문갑식 권경안 김성현 강훈 안용현 임민혁 최규민 발행일 : 2004.11.23 / 사회 A13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11&D=23&ID=0411231302 2012.12.9
390. [대규모 수능부정 파문]얼마 모아 어디 썼나
 특별취재팀 문갑식 권경안 김성현 강훈 안용현 임민혁 최규민 발행일 : 2004.11.23 / 사회 A1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11&D=23&ID=0411231303 2012.12.9
391. [대규모 수능부정 파문]전국적으로 나타난 제안-고발 "대리시험 500 만원... 들킬 염려는 말라"
 특별취재팀 문갑식 권경안 김성현 강훈 안용현 임민혁 최규민 발행일 : 2004.11.23 / 사회 A13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11&D=23&ID=0411231301 2012.12.9
392. ■ 高 2 도우미가 털어놓은 당시상황휴대전화 커닝 '007 작전' 뺏쳤다 특별취재팀 발행일 : 2004.11.24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11&D=24&ID=0411240101 2012.12.9
393. [수능 부정 파문]가답자 600 명說... 대리시험도 적발
 특별취재팀 문갑식 권경안 김성현 강훈 안용현 최규민 발행일 : 2004.11.24 / 사회 A12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11&D=24&ID=0411241201 2012.12.9
394. [수능 부정 파문]"보고도 못본 척했다" 교사들 '참회' 특별취재팀 발행일 : 2004.11.24 / 사회 A1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11&D=24&ID=0411241301 2012.12.9
395. 'CJ 푸드 급식' 기업서도 식중독 인천지역 3 개업체... 정부 "직영전환 학교 2 억 지원"
 양근만기자 study@chosun.com 인천=오윤희기자 oyounhee@chosun.com 입력 : 2006.06.27 00:19 / 수정 : 2006.06.27 00: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06/27/2006062770037.html 2012.12.13
396. 식중독사고 CJ 푸드 '이름만 대기업' 하청업체서 싼 급식재료 받아김동섭 양근만 발행일 : 2006.06.24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6&D=24&ID=2006062400030 2012.12.13
397. [급식중단 파동]단축 수업·집단 조퇴... '점심 대란' 학교 현장에서 최규민 정시행 발행일 : 2006.06.24 / 사회 A8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6&D=24&ID=2006062400065 2012.12.13
398. [급식중단 파동] 16 일 첫 환자 발생 일주일동안 뭘했나안석배 발행일 : 2006.06.24 / 사회 A8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6&D=24&ID=2006062400064 2012.12.13
399. 北 핵실험 한반도 초긴장盧대통령 "포용정책 어려워"... 금강산·개성 중단 시사 부시 "세계평화 위협" 특별성명... 안보리, 北제재 논의 허용범 김민철 발행일 : 2006.10.10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0&D=10&ID=2006101000478 2012.12.14

400. 美, 北핵실험 공식 확인발행일 : 2006.10.17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0&D=17&ID=2006101700511 2012.12.14
401. 정부, 금강산관광 지원 중단키로김민철 발행일 : 2006.10.19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0&D=19&ID=2006101900571 2012.12.14
402. 핵우산-전작권 연쇄충돌... 동맹 무색한 최악의 SCM(韓美안보협)한국발표 美서 부인, 성명 7 시간 반 늦어져 '전작권 2009~2012 년 전환'... 이상한 합의 유용원 발행일 : 2006.10.23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0&D=23&ID=2006102300503 2012.12.14
403. 韓·美 SCM(안보협의회) 양국 국방 아슬아슬한 신경전 ●韓·美 SCM 공동성명 주요내용 안준호 발행일 : 2006.10.23 / 종합 A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0&D=23&ID=2006102300022 2012.12.14
404. 北核위기사족 전작권 단독행사까지 합의 안보불안 뭉로 메우나 유용원 발행일 : 2006.10.24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0&D=24&ID=2006102400613 2012.12.14
405. [北 미사일 후폭풍]"대포동 2 호 7 분간 날아갔다"...499km 비행 발행일 2006-07-07 기고자 황유성 송평인 섹션면 A4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70704508823781> 2012.12.14
406. [北 미사일 발사]장거리 '대포동 2 호' 42 초만에 동해 추락 발행일 2006-07-06 기고자 윤상호 박민혁 섹션면 A2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70602458811553> 2012.12.14
407. 분당급 신도시 1 곳 더 건설개발중인 신도시 확대도 차학봉 발행일 : 2006.10.24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0&D=24&ID=2006102400638 2012.12.14
408. 수도권에 분당급 신도시 추가 건설부동산 정책 실패 시인한 셈 차학봉 발행일 : 2006.10.24 / 종합 A6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0&D=24&ID=2006102400564 2012.12.14
409. 건교부 "검단·파주 신도시 조성" 발표 청와대 "왜 멋대로 발표" 秋장관 조사뒤죽박죽 新도시 정책 신정록 차학봉 발행일 : 2006.10.27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0&D=27&ID=2006102700478 2012.12.14
410. 건교부 "검단·파주 신도시 조성"검단 550 만평 분당급 파주 일산 규모로 키워 차학봉 홍원상 발행일 : 2006.10.27 / 종합 A2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0&D=27&ID=2006102700006 2012.12.14
411. '공급계획' 설명하겠다던 추병직 장관 돌연 "신도시확대" 시장 교란신정록 차학봉 발행일 : 2006.10.27 / 종합 A6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0&D=27&ID=2006102700027 2012.12.14
412. 추병직 장관의 '거짓말' 검단신도시 340 만평으로 대폭 축소차학봉 발행일 : 2006.10.28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10&D=28&ID=2006102800494 2012.12.14
413. 월소득 360 만원 연금가입자 20 년 내면 월 57 만원 받아야야 합의 '국민연금법' 김동섭 발행일 : 2007.04.20 / 종합 A12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7&M=04&D=20&ID=2007042000051 2012.12.14
414. 국민연금 개정 합의 내는 돈 그대로, 받는 돈 줄어둘게배성규 발행일 : 2007.04.20 / 종합 A1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7&M=04&D=20&ID=2007042000634 2012.12.14
415. 유시민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열린우리당 탈당의원들, 표결서 대거 기권 김동섭 황대진 발행일 : 2007.04.03 / 정치 A10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7&M=04&D=03&ID=2007040300601 2012.12.14
416. 연금법 개정 무산... 가입자들 "속타네"김동섭 발행일 : 2007.04.04 / 사회 A12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7&M=04&D=04&ID=2007040404804 2012.12.14
417. 유시민 복지 사의 표명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 관련 청와대, 노령연금법 거부권 검토신정록 발행일 : 2007.04.07 / 종합 A1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7&M=04&D=07&ID=2007040701141 2012.12.14
418. 유시민 돌연 사퇴... 盧대통령 승부수?연금법 통과위해 경질... 정치권 압박카드 분석도 열린우리당 "黨 복귀땀 분란 불가피" 소비상 배성규 발행일 : 2007.04.07 / 종합 A6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7&M=04&D=07&ID=2007040700026 2012.12.14

419. 국민연금법 절충 안되면 가결 힘들어 김동섭 발행일 : 2007.04.09 / 종합 A6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7&M=04&D=09&ID=2007040900024 2012.12.14
420.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건 그렇다 쳐도..." 정부案도 야당案도 국민 불안 해소엔 역부족 김동섭 발행일 : 2007.04.12 / 종합 A4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7&M=04&D=12&ID=2007041200015 2012.12.14
421. 노정부 이해하려면 '3 가지 핵심어' 알아야 "코드 맞아야" "핵심 바뀌라" "의도가 뭔가" 김창균 발행일 : 2003.03.03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3&D=03&ID=0303030405 2013.4.4
422. [노무현정부 組閣] 여성 첫 법무 강금실 장관. "검찰개혁 각오... 믿고 따라 달라" 중앙일보 2003.2.28
http://bill.joinsmsn.com/people/law/view/deep_information_print.asp?ww_no=17... 2012.5.8
423. 6-30 '이상한 개각' 전문가는 빼고... 안들어가려는 정치인은 넣고... 신정록 발행일 : 2004.07.01 / 종합 A4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7&D=01&ID=0407010401 2013.4.12
424. 康법무 퇴진으로 '1 기 내각' 막내려 실험으로 끝난 '파격 人事' 신정록 발행일 : 2004.07.29 / 종합 A3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4&M=07&D=29&ID=0407290302 2012.7.10
425. 작은 개각... 큰 화제 全南 '천재 名門家' 이번엔 女장관 낳네 배성규 발행일 : 2005.01.05 / 사회 A13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1&D=05&ID=0501051301 2013.4.12
426. [특집 | 노무현 정부 100 일] 뜨는 장관, 지는 장관 ... 참여 내각 '희비의 성적표'
 법무·여성·해양·맑음, 경제·교육·보건·건교 '흐림' ... 고건 총리는 엇갈린 평가 속 '역할 미흡' 지적 많아
 특별취재팀 발행일 : 2003 년 06 월 12 일 (388 호) 쪽수 : 20 ~ 22 쪽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03/06/04/200306040500014/200306040500014_1.html 2012.10.26
427. 행자장관 사표 수리도 않고 새장관 내정 盧대통령·허성관장관 '각별한 인연' 최원규 발행일 : 2003.09.18 / 종합 A5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3&M=09&D=18&ID=0309180504 2012.10.25
428. 내각 70%가 청와대·與출신 정우상 발행일 : 2006.07.05 / 종합 A6 면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6&M=07&D=05&ID=2006070500030 2012.9.8
429. [노무현 정부의 장관들] '보은'으로 기용했다 선거용으로 '차출' 발행일 2006-03-03 기고자 김정훈 민동용 박현진
 섹션면 A3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030303457594804> 2012.9.7
430. 취임초 盧대통령 인사원칙은 능력·전문성·투명성지금은 정실·선거용·오기 人事 신정록 발행일 : 2005.06.29 / 종합 A4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5&M=06&D=29&ID=0506290405 2012.7.11

외국서적

- Blondel, Jean (1985): Government Ministers in the Contemporary World. Sage-Publications. London, Beverly Hills, New Dehli
- Dormels, Rainer (2006) : Politische Kultur und Ministerrekrutierung in Südkorea. LIT VERLAG. Wien, Münster

국내서적 및 학술지

- 강준만. 2011. 한국 현대사 산책 (노무현 시대의 명암 2000 년대 편 4 권).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강동완. 2008.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의 평가 및 발전방안: 노무현 정부 평가 및 이명박 정부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정책학회
- 강원택, 장덕진(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기획). 2011. 노무현 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 도서출판 한울

- 김호균. 2004. 장관의 경질사유에 관한 연구(정부별·부처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 학회 2004 년 추계공동학술대회, 51-67 쪽
- 김호균. 2002. 임명권자의 임명기준을 토대로 본 장관의 역할 고찰. 한국행정연구. 제 11 권 제 1 호. 3-2 쪽
- 김호균. 2004. 한국의 장관론 연구(역할과 직무수행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주)
- 김광웅. 김병섭. 최종원. 정광호. 2007. 장관리더십. 도서출판 지혜로
- 김광동. 김세중. 김영호. 박효중. 윤창현. 이규식. 2010. 노무현과 포퓰리즘시대. 기파랑
- 김광수. 2003. 역사에 남고 싶은 열망(한국의 통치권자). (주)현암사
- 김원택 외 공저. 1994. 한국정치론. 제 3 정개정판. 전영사
- 김환태. 2003. 노무현 게이트. 도서출판 글힘
- 김판석. 정홍원. 홍길표. 2008. 고위직 공무원 인사검증시스템의 개선방안 모색: 노무현 정부의 관련제도 변화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 7 권 제 1 호. 109-146 쪽
- 고유환. 2011.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북한의 개혁. 개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NK Vision 통권 26 호. 2011.8 월
- 국회의원 구상찬. 2008.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북핵정책 평가. 2008 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
- 권오중. 2010. 참여정부 인사검증의 살아있는 기록. 리북
- 남기범. 2010. 참여정부 장관인사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제 26 호. 79-105 쪽
- 민병익. 이시원. 2007. 정부의 내.외적 환경에 따른 역대 정부의 장관임명 유형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제 14 권 제 2 호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13-36 쪽
- 매일경제신문 정치부. 2003. 노무현 시대 파워 엘리트. 매일경제신문사
- 박동서. 함성득. 정광호. 2003. 장관론(나남 대통령학 총서 9). 나남출판
- 박홍영. 2003. 노무현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 위상 검토: 대북정책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의 변화상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1 집 1 호, 89-108 쪽
- 박중훈 외 5 인. 2006.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운영실태 및 효과분석. 한국행정연구원
- 양성철. 1994. 한국정치론:역대정권 고위직 행정엘리트 연구(1948-1993). 전영사
- 양승함. 2006. 노무현 정부의 국가관리 중간평가와 전망. 국가관리연구총서 제 4 권.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 양승함. 2005. 노무현 정부의 국가관리 중간평가와 전망. 국가관리연구총서 제 2 권. 연세대학교 출판부
- 양정호. 2004. 한국 교육부 장관에 대한 연구: 장관, 그들은 누구인가? 한국행정학연구 The Journal of Education Administration. Vol 22. No4. 213-229 쪽
- 안병영. 2003. 한국 장관의 역할, 유형, 그리고 정책영향력.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선우. 박중훈. 2000. 장관의 역할과 직무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00 권 D 호. 213-228 쪽

- 이시원.민병익. 2010. 역대정부 장관의 교체사유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 21 권 제 1 호.
49-74 쪽
- 이시원.민병익. 2002. 우리나라 역대정부 장관의 재임기간 및 배경분석(독립논단). 한국행정연구.
제 11 권 제 3 호. 53-82
- 유태환.박종현.김성희.이상호. 2008. 양극화 시대의 한국 경제: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민주주의 총서 09). (주)후마니타스
- 국회의원 전여옥. 2006.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내재적 접근법을 넘어(통일문제 세미나 1). 서울:
전여옥 의원실.
- 최한수. 2006.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관한 소고. 대한정치학회보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13 No.3 97-119 쪽
- 참여정부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9. 노무현과 참여정부 경제 5 년. 한스미디어
- 하태권.박경원.원구환. 2004.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평가 및 향후과제. 한국행정연구원
-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2008. 노무현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주)창비
- 현승윤. 2004. 독일과 영국을 통해 진단한 노무현 경제 희망찾기. 한국경제신문 한경 BP

학위논문

- 김성수. 2012. 인사청무회 도입과 한국 장관총원의 변화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학위청구논문.
- 김희정. 2005.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 장관 사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석사학위논문
- 김재규. 2010. 간여시계열 분석을 통한 부동산 정책의 효과 분석. 성균관 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영언. 2005. 노무현 대통령 정치행태에 대한 신문사설 연구: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언론학석사학위 논문
- 우경림. 2010. 노무현 정부의 1 차 및 2 차 이라크 파병정책 결정 과정 분석: 엘리슨의 정책 결정
모델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 정종원. 2006. 한국 장관의 사회적 배경과 임명기준에 관한 연구: 계층분석법을 통한 실증적 접근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국문초록

노무현 정부시기 2003 년 2 월부터 2008 년 2 월까지 5 년기간에 19 개부처에 76 명의 장관이 재임하였다. 이는 한 장관 당 평균 재임기간이 1 년 2 개월로 통상적으로 정해진 2 년의 재임기간에 비추어 볼 때 장관의 교체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장관의 해임 및 발탁 배경을 조사함으로써 장관들의 잦은 교체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참고문헌으로 장관 관련 서적 및 정부 발간지와 더불어 일일신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임면 배경이 본 논문의 주요한 자료가 되었다. 그 이외에도 정확한 임면 배경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76 명 장관들의 임명당시 연령, 출생지, 출신대학 및 최종학력, 전직 (사회인구적 배경)을 담은 목록을 만들었다. 해임이 된 장관들이 정치·사회적 배경과 연관이 된 경우 연관된 사건, 노무현 정부의 인사정책 및 주요 현안도 소개되었다.

조사된 임면 배경은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난 특성을 살려 세부적으로 분석되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 정해진 범주와는 달리 오기인사 a), 파격인사 b), 코드인사 c) 등 새로운 범주가 정해졌다. 범주를 설정한 축이 된 것은 필자의 연구로 밝혀진 범주와 장관 전문 연구가 김호균이 정한 범주안에서 분석되었으며 그에 대한 결과는 결론부의 도표에서 총체적으로 보여지고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임명배경을 분석한 범주에 따르면 1) 여성이나 특정연고 관련자를 임명(상징적 대표성)한 경우는 5 명이다. 2) 소관부처와 연관이 없는 인물이 임명된 일반관리성 인사는 5 명이며 이들은 주로 코드인사에 속하기도 한다. 3) 소관부처에 해당하는 학력 및 경력이 있는 인물로 전문성이 기준이 되어 임명된 장관은 54 명으로 집계되었다. 4) 총선 및 선거 출마용으로 임명 또는 해임된 장관은 9 건이다. 5) 정치적 보상차원으로 임명된 경우는 11 건으로, 낙선자 배려인사와 보은인사가 해당된다. 6) 여당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된 경우는 모두 12 명이다.

해임배경을 분석한 범주에 따르면 크게 귀속성 책임과 비귀속성 책임으로 나뉘어진다. 먼저 귀속성 책임을 띠는 범주에는 개인의 도덕적 문제나 스캔들(8 명), 부처업무 책임(4 명)이다. 다음으로 상징적 사유로 비귀속성 책임을 띠는 범주에는 도의적인 부처책임(2 명), 민심수습용(1 명), 내각개편에 따른 임기만료(6 명)이다. 정치적 사유로 장관이 교체된 경우는 비귀속책임성으로 총 44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에서 18 명이 새로운 정부의 출현으로 교체된 경우이다.

노무현 정부가 위에서 언급된대로 a,b,c)의 임명 유형처럼 코드형 인사, 파격형 인사, 오기인사, 낙선자 배려인사, 보은인사, 선거출마용 등 장관인사의 배경에 부정적인 요인이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성을 기준으로 임명된 경우가 54 명으로 이는 총 76 명에서 71%에 해당되는 인물이 적절하게 임명된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다.

Zusammenfassung

Roh, Moo-Hyun fungierte als Präsident der Republik Korea in der Zeit vom Februar 2003 bis Februar 2008. Während dieser 5 Jahre agierten insgesamt 76 verschiedene Minister in 19 Ressorts, woraus sich eine durchschnittliche Amtszeit von einem Jahr und 3 Monaten ergibt. Dies ist erheblich kürzer als die in Korea als üblich erachtete Amtszeit (das sind circa 2 Jahre und spiegelt das herrschende Prinzip der Rotation wieder).

Die vorliegende Masterarbeit untersucht die Hintergründe dieser häufigen Ministerwechsel. Neben wissenschaftlicher Literatur dienen Tageszeitungen als Hauptquellen zur Identifizierung der Ursachen für die Ministerernennungen und –entlassungen. Um ein klares Bild der Ursachen für die Regierungsumbildungen zu erhalten, präsentiert diese Arbeit ein Verzeichnis über verschiedene Tatbestände aller 76 Minister betreffend. Zum einen handelt es sich dabei um ihre Demographika (Geschlecht, Alter bei ihrer Ernennung, Geburtsort, höchste abgeschlossene Ausbildung bzw. Studienrichtung, Beruf vor Ernennung), zum anderen um die Begründungen für Ernennungen bzw. Entlassungen; besonders ausführlich fallen die Darlegungen dann aus, wenn politische oder soziale Ereignisse vorlagen. Generelle Ausführungen zu allen wesentlichen Entwicklungen während dieser Zeit und zu den Prinzipien der Personalpolitik von Präsident Roh sollen dazu beitragen, die Regierungsumbildungen in den entsprechenden Kontext zu stellen.

Das gesammelte Datenmaterial wird an Hand eines Kategoriensystems analysiert. Die verwendeten Kategorien stammen einerseits aus der politikwissenschaftlichen Literatur und wurden andererseits von der Autorin ergänzt, um den Besonderheiten während der Regierungszeit von Präsident Roh im Detail Rechnung tragen zu können. Dabei handelt es sich insbesondere um eine Charakterisierung der Minister gemäß des Typs, wie ihre Ernennung zu Stande kam; nämlich entweder, a) weil der Präsident unbedingt auf der Aufnahme dieser Person in die Regierung bestand, oder, b) weil diese Person über außer-gewöhnliche Fähigkeiten verfügte, oder c) weil sie allen Anschein nach in ihren persönlichen oder beruflichen Anschauungen oder in Charaktereigenschaften große Übereinstimmungen mit dem Präsidenten aufwies. Die Ergebnisse liegen auch in tabellarischer Form vor und dienen zur Ableitung der inhaltlichen Konsequenzen.

Folgende Kategorien dienen zur Analyse der Hintergründe für die Ministerernennungen:

- 1) Nepotismus und Genderüberlegungen führten zur Ernennung von 5 weiblichen Ministern.
- 2) 5 Minister wurden ernannt, ohne dass sie eine fachliche Beziehung zu ihrem Ressort nachweisen konnten. Die meisten von ihnen gehören zum oben angeführten Ernennungstyp c).
- 3) Die größte Gruppe (54) sind aufgrund ihres Studiums fachlich qualifizierte Persönlichkeiten auf einer angemessenen Karrierestufe.
- 4) Da die Kandidatur zur Nationalversammlung bzw. zu regionalen Parlamenten von Gesetzes wegen mit einem Ministeramt unvereinbar ist, kam es in Vorwahlzeiten zu Regierungsumbildungen; 9 Minister wurden aus diesem Grunde ernannt.
- 5) Als Lohn für die Unterstützung des Präsidenten Roh (entweder während seines Wahlkampfes oder weil sie von ihm zu einem Antreten bei Wahlen genötigt wurden aber erfolglos blieben) kamen 11 Personen zu Ministerehren.
- 6) 11 weitere Abgeordnete der Regierungspartei erhielten Ministerposten.

Es gibt zunächst die folgenden beiden (Haupt-) Kategorien für Entlassungsgründe: tatsächliche

oder vermeintliche Verfehlungen. Tatsächliche Verfehlungen können weiter unterteilt werden in moralisch zweifelhafte Handlungen von Amtsinhabern, private Skandale (in diese Gruppe fielen 8 Personen) und Fehlentscheidungen im Dienst (4 Minister). Unter vermeintliche Verfehlungen fallen die Übernahme der Letztverantwortung für moralische Fehlentwicklungen im eigenen Ressort (2 Minister) oder einer Sündenbockfunktion zur Beruhigung der Stimmung in der Bevölkerung (1 Minister). Weiters schieden 6 Minister wegen des Ablaufs ihrer zweijährigen Amtszeit aus dem Kabinett aus. Schließlich entließ Präsident Roh 44 Minister aus politischen Gründen; 18 Personen davon schieden automatisch mit dem Ende der Legislaturperiode aus.

Den zahlreichen Umbildungen und insbesondere den Ernennungen gemäß der neu eingeführten Kategorie „Ernennungstyp (a, b, c)“ sowie auf Grund einer Dankbarkeit des Präsidenten wohnt zweifellos ein negativer Beigeschmack inne. Demgegenüber steht allerdings die Tatsache, dass 54 Minister (das sind 71% von insgesamt 76 Ernennungen) auf Grund ihrer fachlichen Qualifikation ihren Posten erhielten.

Curriculum Vitae

Name: Chae Eun Kong

Geburtsort: Hwanghwa Jeong-Ri, Südkorea

Geburtsdatum: 16. November 1966

Familienstand: verheiratet

Ausbildu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Seoul, Südkorea

Graduierung zum Bachelor (2004)

Fach: Englische Sprache und Literatur

Titel der Bachelorarbeit: Die Gedichte von William Butler Yeats

Berufliche Qualifikation: Berufsberechtigung als englische Fremdenführerin (2000)

Sprachliche Qualifikation: Deutsch (Niveau C1/1), Universität Wien (2010)

Sprachen: Koreanisch (Muttersprache)

Englisch (erste Fremdsprache)

Deutsch (zweite Fremdsprache)

Berufliche Tätigkeiten:

1987 – 1991: JABITEX Handelsunternehmen, Südkorea

Qualitätskontrollen von Handelswaren

Korrespondenz in Englisch

Jan. 1991: Geburt von Sohn Jun Bum

Nov. 1994: Geburt von Sohn Jun Moe

1994 – 2003: Privatlehrerin für Englisch, Südkorea

1997 – 2000: Ausbildung als Fremdemführerin (für englische Touristen in Südkorea)

1999 – 2003: Studium an der National Open University (Englische Sprache und Literatur)

Feb. 2004: Graduierung zum Bachelor

2003 – 2006: Fremdenführerin in Südkorea und für koreanische Touristen in Europa

Nov. 2006: Übersiedlung nach Wien, Österreich

2007 – 2008: Deutschstudium am Sprachenzentrum der Universität Wien, Österreich

2009 – 2012: Studium der Koreanologie an der Universität Wien, Österreich

2010 – 2012: Ehrenamtliche Tätigkeiten für das Korea Kulturhaus in Wien, Österreich

(z.B.: Erstellung von Texten für Mitglieder und eine breitere Öffentlichkeit,

Mitarbeit bei der Gestaltung der Website)

Weitere Fähigkeiten: Privatunterricht in Englisch, schriftlicher und mündlicher Diskurs

(insbesondere über die koreanische Kultur oder spirituelle Erfahrungen)

Hobbies: Beschäftigung mit der Bibel, sportliche Aktivitäten